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13 - Spring 2014

(auri)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특별법 중 제1장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s | e | a | r | c | h | u | t | a | w | e | r | n | o | s | a | e | r |
| i | d | k | a | j | f | l | b | a | f | s | d | p | a | s | d | d | n |
| e | z | e | n | r | e | v | i | t | a | l | i | z | e | r | o | e | o |
| t | f | p | k | e | r | v | r | o | a | q | o | g | e | t | p | i | c |
| f | m | z | x | c | n | d | e | n | g | i | n | e | p | a | t | d | f |
| d | e | j | a | o | d | a | t | i | w | c | f | e | s | d | i | m | l |
| r | l | k | d | v | u | n | h | d | w | e | c | t | d | k | m | u | a |
| c | e | p | l | e | e | d | s | e | o | h | r | t | e | r | i | a | y |
| o | k | s | f | r | a | w | i | y | y | u | e | s | z | a | z | c | e |
| r | n | h | u | s | k | y | e | q | w | n | g | z | g | k | a | f | h |
| a | y | n | b | l | c | g | y | f | r | p | e | z | e | l | t | d | f |
| t | d | k | f | j | t | l | y | r | d | w | n | f | h | g | i | s | d |
| i | f | s | k | l | g | s | e | o | o | i | e | z | x | c | o | n | n |
| o | j | w | e | b | s | i | t | e | i | l | r | p | f | r | n | a | k |
| n | r | e | n | e | w | a | l | y | z | p | a | e | t | i | r | w | e |
| z | e | l | e | b | u | a | t | e | b | k | t | o | v | t | e | n | t |
| s | e | a | r | c | h | u | t | a | w | e | i | n | o | i | a | e | r |
| i | d | k | a | j | f | l | b | a | f | s | o | p | a | s | v | d | n |
| e | z | e | n | r | y | s | f | h | l | m | n | a | e | r | o | e | o |
| t | f | p | k | y | r | v | r | o | a | q | o | g | e | t | p | i | c |
| f | m | z | x | f | n | d | e | n | g | i | n | e | p | a | t | d | f |
| d | e | j | a | s | d | a | t | i | w | c | f | e | s | d | i | m | l |
| r | l | r | d | y | u | n | h | d | w | e | c | t | d | k | m | u | a |
| c | e | e | l | d | e | d | s | e | o | h | r | t | e | r | i | a | y |
| o | k | s | f | j | a | w | i | y | y | u | r | s | z | a | z | c | e |
| r | n | t | u | s | k | y | e | q | w | n | a | z | g | k | a | f | h |
| a | y | o | b | l | c | g | y | f | r | p | e | z | e | l | t | d | f |
| t | d | r | f | j | t | l | y | r | d | w | d | f | h | g | i | s | d |
| i | r | e | c | y | c | l | e | o | o | i | j | z | x | c | o | n | n |
| o | j | w | e | b | s | i | t | e | i | l | s | e | f | r | n | a | k |

OVERVIEW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

p.8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재활용 사례

p.40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의의와 지원제도

p.19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현황과 과제

p.32

고한고택에서 울수원으로

p.110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함부르크 도시계획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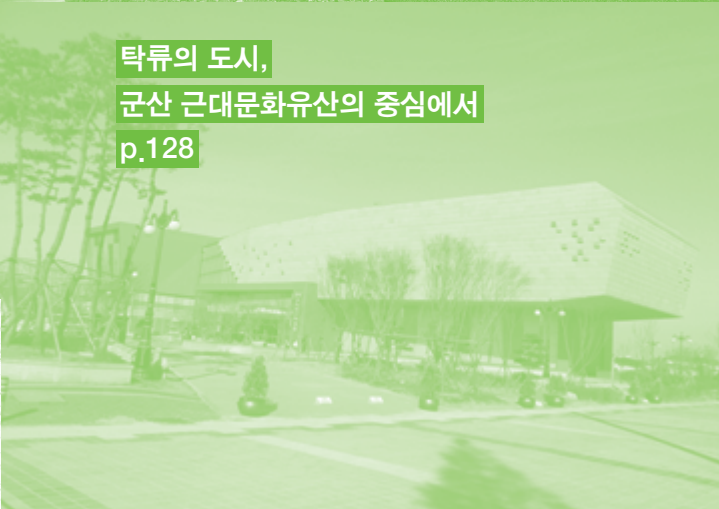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공간' 13호의 주색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추운 겨울 끝에 우리 곁으로 다가온 생명의 계절, 봄을 상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입니다. 이처럼 어떤 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색, 그 재생의 색 초록이야말로 생명의 빛을 잃은 도시에 새 호흡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색일 것입니다.



동일본대지진 후 가설주택의
건설현황 및 복구계획
p.74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도시개발
p.68



탁류의 도시,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에서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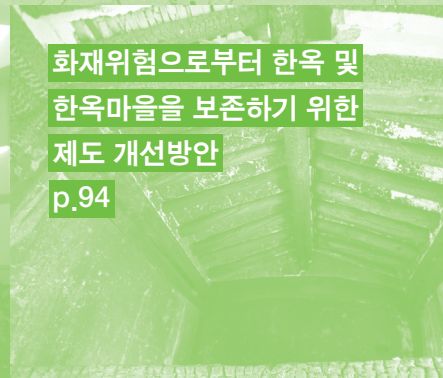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p.49



파리 프티 생튀르
페첼로 부지의 재정비
p.79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p.81



화재위험으로부터 한옥 및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p.94

Vol.13 - Spring 2014

건축과 도시공간

발행

2014년 3월 30일

발행인

제해성

편집책임

임유경

편집

고효진, 박선희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표지



무질서한 듯 흩뿌려져 있는 낱자들의 나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재조합을 거듭하며 소통을 위한 단어, 의미를 찾아내게 됩니다. 의미의 바탕이 되는 '본래의 것'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단어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CONTENTS

정책이슈 :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 | | |
|----|-------------------------------|-----|
| 08 |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 | 서수정 |
| 19 |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의의와 지원제도 | 심경미 |
| 32 |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현황과 과제 | 임유경 |
| 40 |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재활용 사례 | 임재용 |
| 49 |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 김정후 |

통계 자료실

| | | |
|----|--------------------|-----|
| 62 |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 김영현 |
|----|--------------------|-----|

건축도시동향

| | | | |
|----|---------------|--|-----|
| 68 | <u>해외동향</u> |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蘇州 工業園區) 도시개발 | 김형민 |
| 74 | | 동일본대지진 후 가설주택의 건설현황 및 복구계획 | 박성원 |
| 79 | | 파리 포트 생튀르 페철도 부지의 재정비 | 권인석 |
| 81 | <u>국내동향</u>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 임강륜 |
| 86 | |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최현실 |
| 91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 최종철 |
| 94 | | 화재위험으로부터 한옥 및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신치후 |
| 98 | <u>국내외 단신</u> |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함부르크 도시계획 외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외 | |

장소탐방

| | | |
|-----|-------------------------|-----|
| 110 | 고현고택에서 울수원으로 | 권현효 |
| 128 | 탁류의 도시,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에서 | 김현숙 |

신간소개

| | | |
|-----|--------------------|------|
| 136 | 〈보행자를 위한 도시 설계 1〉 | 남궁지희 |
| 138 | 〈DOCUMENTUM vol.0〉 | 엄윤진 |

auri 소식

| | |
|-----|------------------|
| 142 |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 소개 |
| 147 | 포럼 및 세미나 |

정책이슈

최근 우리의 도시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채택하고, 이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시행을 계기로 삼아, 본 호는 우리 시대의 도시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신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 · 사회 · 문화 등을 아우르는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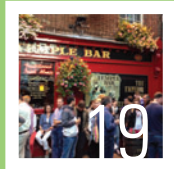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UTILIZING
LOCAL ARCHITECTURAL
ASSETS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특별법을 중심으로
도정법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장소 특성에 따라 선택하고 연계하는 과정이다.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의의와 지원제도

도시가 인간 활동의 집합체라고 볼 때, 도시재생의 수단이나
방법과 기술은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이를 고쳐 쓰고 다른 의미와 용도로 재활용하고
건축문화를 유지·발전·계승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주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현황과 과제

도시 내 유휴공간이 필지 단위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지역의
쇠퇴를 악화시키는 문제 요인임과 동시에 기성 시가지 재생을
위한 잠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재활용 사례

우리가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의 한 축은 주민
참여형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어 무리한 신축을 지양하고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시설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현재 유럽에서는 유휴지와 산업용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상징적·실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도시재생을 성취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문화라는 키워드로
도시 재창조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의 의미

“도시와 문화적 다양성은 도시경쟁력의 근원이며, 이는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이미지 재창조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UN-Habitat, 2007).”는 해비타트의 보고처럼 이미 전 세계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도시를 재창조하고 있다.

창조적인 문화·예술인들이 버려진 창고나 공장 건물에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고 작업과 다양한 전시, 공연을 열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크고 작은 장소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창조 강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헬싱키 카펠리(노키아공장 재생), 스파이더맨의 촬영장으로 유명한 캐나다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양조공장 재생), 뉴욕의 오레오 공장을 재생한 첼시마켓 등은 문화와 도시재생이 만나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버려진 장소가 예술과 문화라는 옷으로 갈아입은 사례는 이미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물공장과 철공소로 도심 경제를 선도했던 문래동은 쇠퇴 이후 철공예와 조소공예 등 젊은 예술인들이 터를 잡은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하였고, 인천 아트플랫폼은 일제시대 개항장 창고였던 곳이 젊은이들의 문화·예술공간이자 창작공간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공동체 문화

한편으로 노후하고 쇠퇴한 마을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밴드를 만들고, 도서관을 짓고, 카페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대안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시작한 공동육아가 마을 협동조합으로 커가고, 동네 품앗이가 마을기업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생한 생활문화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소외되어 가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나서서 동네를 살피고, 사교육의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마을의 청년들로부터 공부법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기운을 잃었던



노키아공장을 재생한 헬싱키 카펠리



양조공장을 재생한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마을이 생기를 찾아가는 현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쇠퇴한 산업의 흔적이 새로운 장소로 바뀌고, 활력을 잃었던 마을이 생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의 거점은 바로 버려지고 낡은 건물이며, 도시와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그만 자투리 공간들이다. 이처럼 삶의 흔적과 손때가 묻어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있고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낡은 벽돌 창고와 공장, 목욕탕, 쇠락한 상가의 빈 점포, 동네 빈집 등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이 바로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과정은 도심의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상권회복에 기여하는 거시적인 일에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희망이 모여 도서관·북카페·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고, 빈집을 수리해서 세입자를 찾아주는 활동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시행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재생 거점으로서의 건축·도시공간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정의와 의미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각계에서 주장했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이 장소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정비와 일자리 창출, 이웃 간의 공동체 회복, 근린단위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다.

이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장소중심으로 묶고 연계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지원과 분산된 사업방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한국형 도시재생 선도모델과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공모를 시행하였다.*

2.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과정과 사업내용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기존의 도시정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과 달리 지역에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반영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복합처방전을 만드는 주문생산방식의 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이다. 계획수립 과정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흠어져 있는 주민과 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실행수단을 마련해 가는 합의형성 방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 그 자체가 도시재생의 시작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민간사업자의 활력을 유인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근린재생형은 노후 주거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동네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영유아와 고령자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등 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민역량강화와 경제활력을 동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이러한 사업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인 공공시설 조성, 빈집 및 빈 점포

*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상서를 평가하여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도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활용을 위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의해 구역 지정이 필요한 물리적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건축사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창출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도시공간의 문화적 창조성에 기반을 둔 사업을 의미한다.

3.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촉매와 거점으로서의 건축·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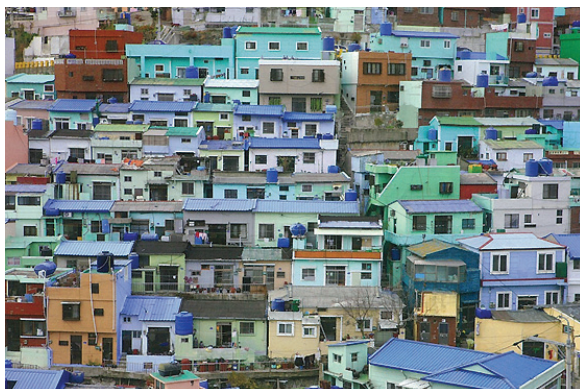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건축·도시공간은 물리적 사업의 시작이자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복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는 그릇으로 장소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이웃을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체 생활의
시작이자 거점

부산 반송 어린이도서관은 도시재생에서 물리적 거점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반송동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협력하여 모금활동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관계를 회복하였고 도서관은 주민들의 카페로, 소모임 활동의 거점으로 지역재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또 서울 장수마을에서는 ‘동네목수’라는 마을기업이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일자리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을 카페로 리모델링하였고, 버려진 집을 개·보수해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 주는 등 점진적인 주거지 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감천마을은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 겸 방문객에게 감천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감천마을에서는



부산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이 함께 조성하는 벽화(부산 감천문화마을)



동네목수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박학룡)

몇 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오래된 집을 다시 하나씩 건축하는 데 참여하고 있어 건축문화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재생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건축·도시공간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원동력이자 재생의 씨앗이다. 특히 필지단위로 진행되는 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 유휴공간과 빈 건물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점진적 재생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내용

이처럼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활용도가 낮고 노후한 건축·도시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바꾸는 물리적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물리적 사업은 공공시설 사업과 함께 건축물 소유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낡은 집을 고쳐야 한다는 참여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쇠퇴지역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2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물리적 환경거점 만들기로서의 건축·도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 주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단이다.

1. 마을의 귀환, 공동체 기반 만들기로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2012년 개정된 도정법에는 뉴타운사업과 대규모 전면철거재개발·재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을 보전하면서 필지단위의 개별적인 주택보수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창조적 공간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제도화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도정법 제2조 제2항의 마)으로,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도로 정착시킨 것이다. 주민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기반시설 확충과 역사적 가로만들기, 상가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 주거복지를 위한 집수리 관련 사업과 주택 유지·보수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오래 살고 싶은 주거지,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건축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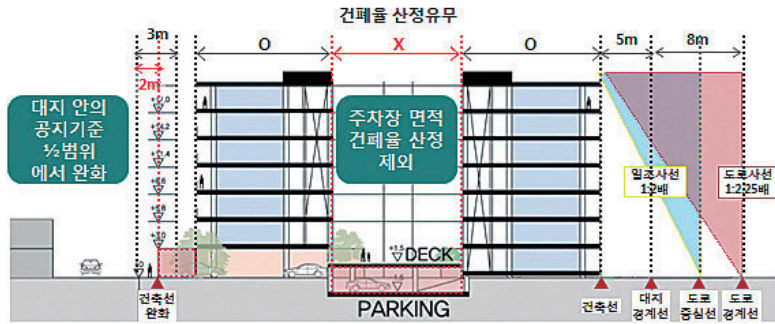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민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후주택을 가로구역단위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가로조직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다르다. 이 사업은 집약적 토지이용을 피하면서도 주민주도로 주거지 정비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소유관계에 따라 최대 3가구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기존 가구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르다.

1만㎡ 이하 지역에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통과도로를 포함하지 않는 가로구역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규모 필지와 영세가도가 밀집한 노후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인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 구분 | 시행령 |
|----------------------|--|
| 가로구역의 범위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전부 또는 일부 |
| 정비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면적 1만㎡ 미만 • 통과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가구수를 합한 수가 20호 이상 |
| 규모 | • 2종 7층 이하, 1종 4층 이하 |
| 건축법 특례조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5조 주차장 설치 시 건폐율 산정 제외 •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1/2 범위에서 완화 • 제60조·61조 도로사선제한 1/2 범위에서 완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례조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터 : 150가구 미만 설치 제외, 설치 시 놀이터 폭과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 예외 • 복리시설설치 : 가구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의 면적 합계 범위에서 필요시설 설치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례조항 적용(안)



(자료: 서수정·임강륜(2012))

높이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주택법」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가구 이상 기존 거주자의 동의와 협력에 의한 집단정비사업이라면 2014년 1월 「건축법」에 신설된 건축협정은 영세필지와 세가도로 조직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개개 주민의 의지에 따라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다.

건축협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건축법」 제77조의 4)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건축법」 제77조의 5) 「건축법」 특례조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민 간에 맺는 건축행위에 대한 약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필지와 협소한 가로에 접한 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가로와 필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지 안의 공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맞벽개발 허용 등이 적용되며, 영세필지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면적·높이·층수 산정규제와 건축선 지정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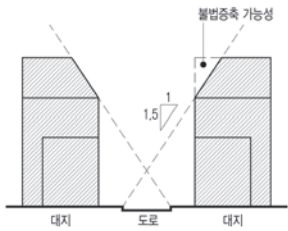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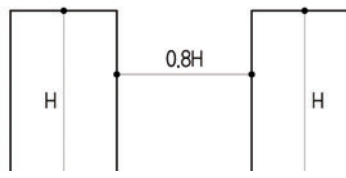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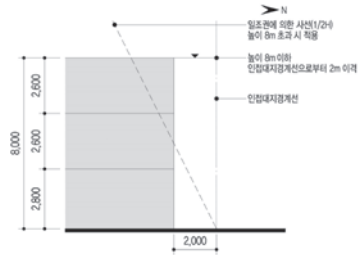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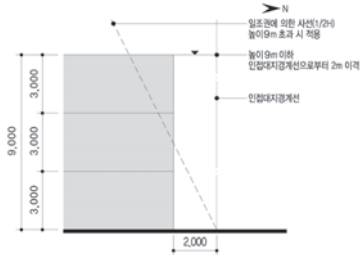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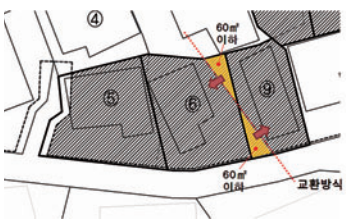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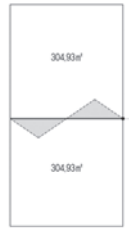
건축협정은 이러한 특례적용에 동의하는 연속한 2필지 이상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개별 필지단위로 주택 개·보수, 증축, 신축 등의 행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축협정은 필지 소유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지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지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성은영, 임현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p.35.

주민의 의지에
따른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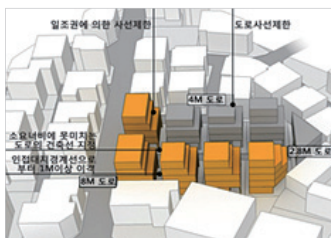
분할된 공지의
공공적 활용

「건축법」 예외조치 내용

| 관련규정 | 기존법령 | 예외 조치 |
|--|--|--|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 가로폭과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0.8H 이격 |
| |  |  |
| 건축물 간 간격과 높이를 지정하여 내부 공간의 균질성 확보 | | |
| 시행령 제86조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 8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 |  |  |
| 유효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3층 규모의 높이까지 인접대지 경계선을 예외 적용 | | |
| 시행령 제80조 대지의 분할제한 | 주거지역 60㎡ 이상, 2m 도로에 접해야 함 | 인접필지와 등가교환 또는 부분 거래할 경우 대지분할 조건 미적용 |
| |  |  |
| 주택개량에 유리하도록 필지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행위 유도 | | |

(자료 : 서수정 · 성은영(2011), p.10)

건축협정구역에서 맞벽건축 시 생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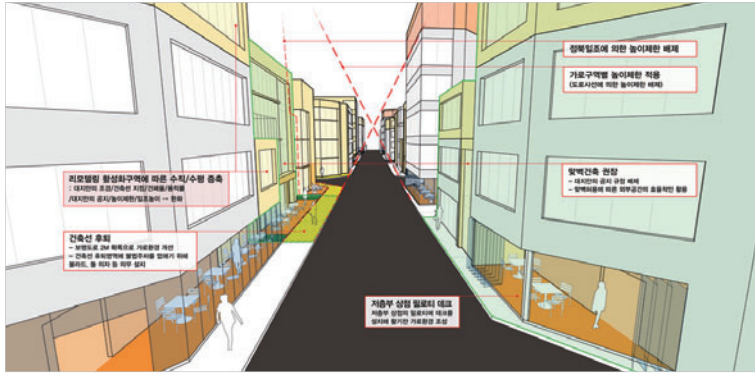


기존 법에 의한 다세대주택 건축 시
(자료 : 서수정 · 성은영(2011), p.139.)



맞벽건축을 통한 환경 개선
(자료 : 성은영 · 임현성(2013), p.41.)

특별가로구역의 건축특례적용 사항



(자료: 임유경, 이진민(2013))

3. 가로중심의 점진적인 물리적 재생, 특별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이 주로 주거지의 점진적 재생을 위한 수단이라면 2014년 1월 건축협정과 함께 「건축법」에 도입된 특별가로구역은 노후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가로나 쇠퇴한 상가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유도수단이다.

이는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정,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생활의 중심인 ‘가로’ 단위의 재생을 유도하는 맞춤형 공간관리 수단이다. 특별가로구역이 적용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도로사선제한으로 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도로사선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수평 증·개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정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가로에 접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가로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복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배제로 필지단위 건축 신축이나 증·개축을 수행할 경우 사선제한으로 건축물의 형태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내부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 도시재생의 거점인 물리적 공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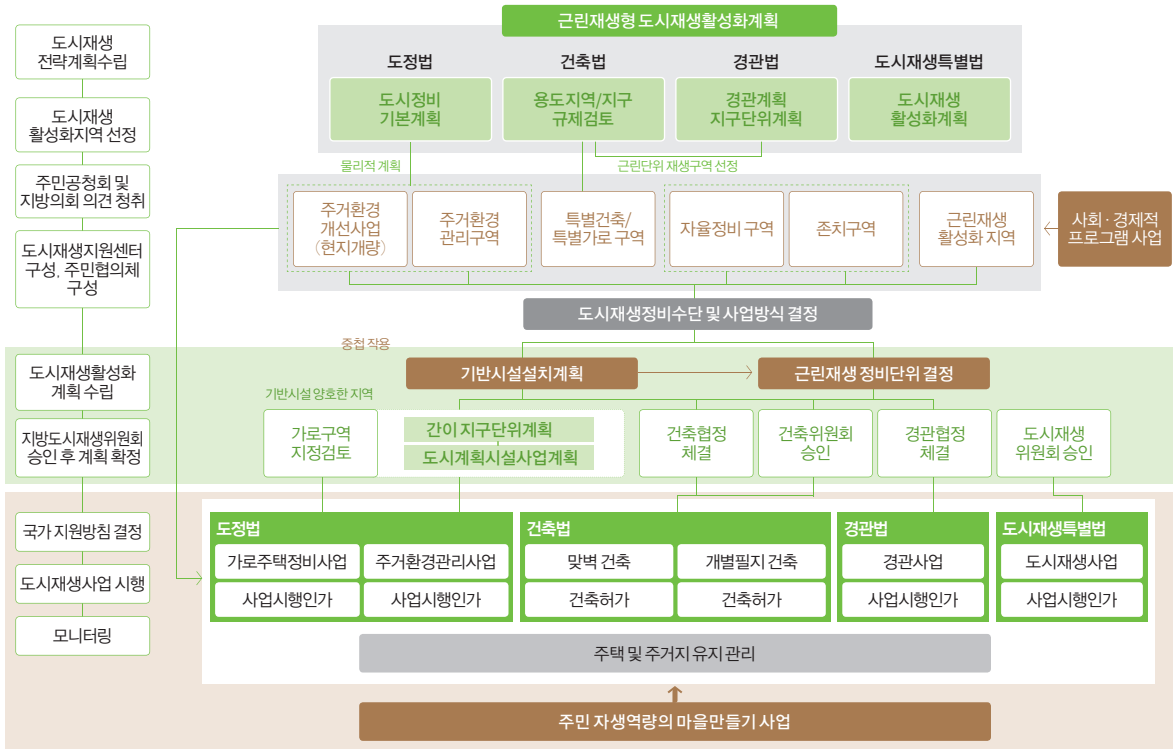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건축협정,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지역특성을 보존하면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물리적 재생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다.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연계와 활용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도정법과 「건축법」에

쇠퇴한 상가지역을
위한 수단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사업에서 다양한 제도의 선택과 조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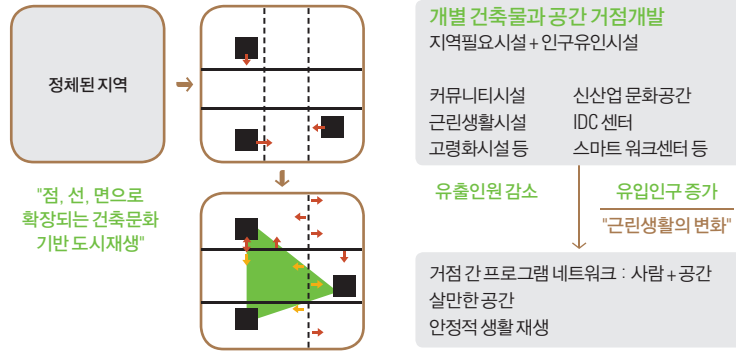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과 특별가로구역,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수단을 장소 특성에 따라 선택하고 연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은 특정 장소와 특정 가로에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선도지역 내의 빈집을 찾아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유휴 건축물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직업센터나 문화·복지 거점으로서의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옥·근대건축물 등은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자원이며, 주민 주도의 사회·문화·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성능개선 및 집수리 사업, 노후주택 개·보수, 증축, 신축사업 때 도시재생선도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이 참여한다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육성을 통한 골목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쇠퇴한 장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자리 생성과
골목경제 활성화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다이어그램



넣어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마을·도시의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선과 면으로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모자이크 조각인 건축과 도시공간이 생활과 경제,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해 가는 과정 그 자체다.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건축문화자산을 찾아내고 각 주체들이 상호협력하고 물리적 기반으로서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조직과 사람, 제도를 장소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이러한 전문가와 활동가, 주민리더 등 다양한 인적자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서수정·성은영,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 2 서수정·임강륜,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 3 성은영·임현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제도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4 임유경·이진민, 「가로단위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특별가로구역 제도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의의와 지원제도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쇠퇴)을 소생시킨다는 의미다. 쇠퇴하는 것에는 사람도 있고, 공간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다.

이런 면에서 건축문화자산 기반의 도시재생은 많은 도시재생 기법 내지는 방식 또는 대상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지역 건축문화자산의 활용이 도시재생의 추진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도시재생의 의미가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정되었다’고 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도시가 인간 활동의 집합체라고 볼 때, 도시재생의 수단이나 방법과 기술은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이를 고쳐 쓰고 다른 의미와 용도로 재활용하고 건축문화를 유지·발전·계승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주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법률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지원책이자 유도책으로서, ‘도시재생’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건축문화자산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또 다른 측면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

건축문화자산 활용 도시재생의 의의

1. 지역의 특성 유지 및 정체성 형성

건축물과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필지와 가로를 포함한 도시조직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도시의 모습을 창출한다. 이는 그 역사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과 가로를 현대적 용도로 재활용하여 지역의 독특한 경관적 특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더블린의 템플바(The Temple Bar) 가로 전경

건축자산이 갖는
지역만의 경관적 특성

오래될수록 진귀하며, 다른 어느 곳과 건줄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적 특성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발굴하고,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더블린의 템플바(The Temple Bar)처럼 오래된 도시조직과 건축문화를 간직한 곳에서의 도시재생 사례는 이러한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좋은 본보기다. 초창기 지역개발에서 제안된 교통센터 건립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더블린의 템플바 지역은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교통센터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2. 독특한 창조적 공간 창출

건축물 리모델링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는 것이 건축물 리모델링이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개편, 도시의 외연 확장 등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이 우범화하거나 쇠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에서 한때 잘 사용되던 산업유산이 폐기되거나 빈집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한다.

지역의 거점공간으로서, 특정 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서, 특정 시기의 건축적 양식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들을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부여하여 현대생활공간으로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창조적 공간이 창출된다. 현대기술의 발달로 새것도 오래된 것처럼 연출하고 설계할 수 있으나, 진정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공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런던의 마지막 수력발전소를 카페와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한 와핑 프로젝트(Wapping Project)

3. 지역경제 및 가로 활성화

그 지역만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유지되고 정체성이 형성된다.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독특한 창조적 공간의 창출은 그 지역에 매력을 더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용도로의 재활용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한 템플바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1996년까지 133가구의 아파트를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63개 신규 소매점, 7개 호텔, 108개 1층 소매점 등 최소 140개의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3,000개의 임시 일자리와 문화와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1,900개의 장기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1991년 이후 보행자 방문이 두 배로 증가하여 더블린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쇠퇴한 지역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변모시키는 데 일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가로는 더욱 활기차고 다양해지게 되었다.

4. 지역고유의 사회·문화 유지, 발전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장소적 공간으로서 건축자산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역사와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또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담을 때에도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 John McCarthy, "Dublin's Temple Bar- A Case Study of Culture-Led Regeneration",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6, 1998, pp.271-281.



지역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리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를 유지 및 발전시킨 템플바 지역의 모습

자원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아낸다.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과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사회·문화가 유지되고, 새로운 사회·문화가 더해져 더욱더 발전하는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추진

1. 국내 현실과 한계 ; 법률 제정의 필요성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건축문화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 및 활용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대 산업유산 문화공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근현대사 주요 유산 보존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서울역과 명동예술극장 등의 근대건축물을 보전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아트플랫폼 사업’, 군산시의 ‘근대역사경관사업’, 포항시의 ‘구룡포 일본적산가옥 활용’ 등 건축자산을 지역재생과 관광자원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건축자산 재활용에 대한 공공의 확신 역시 부족하여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문화자산이 ‘재생’되지 못하고 훼손·멸실되어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2010년 12월 철거된 세운상가,** 2013년 재개발이 확정된 은마아파트, 1980년대 조성된 재래시장으로서 가치적 논쟁과 함께 철거재개발이 추진 중인 여주 제일시장, 산업시설 이전 후 고밀 아파트단지로

근대 산업유산
문화공간화 사업



종묘 앞쪽 한 동이 철거된 세운상가(1967년 준공) (자료: 서울시)



철거재개발이 추진 중인 여주 제일시장(1983년 건립)

개발을 추진 중인 군산시 페이퍼 코리아 등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 과연 ‘가치 있는 건축문화자산을 훼손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반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옥의 경우 건물 외벽 바깥으로 돌출하는 처마까지의 외부면적이 건폐율로 산입되어 일반건물과 비교하면 면적에서 손해를 본다. 근대건축물의 경우 지적의 변동 등으로 창문 개폐 시 건축선 등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미군의 이전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군사시설의 경우도 이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면 현행법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해 불법건물이 된다. 적법한 건물이 되려면 통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복도 폭을 0.1m 확장해야 한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성북동의 장수마을이나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도 오래된 골목길을 유지하고 살던 집들을 고쳐서 편리하게 생활하려면 현재 건축법규에 맞지 않는 사항과 도시조직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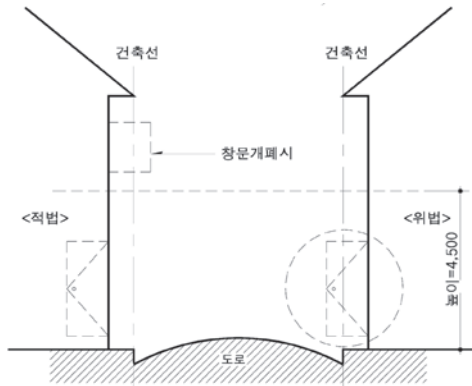
법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이렇게 건축자산을 고쳐서 쓰려고 해도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과도한 비용문제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래되고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한 후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수선하고 재활용하려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축문화자산
활용의 법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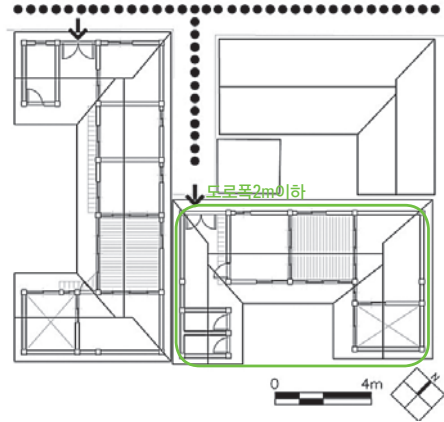
* 2010년 근대문화유산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2003년 이후 7년간 근대건축물이 27건 멸실되었으며, 2010년 기준 130건이 남아 있다.

** 종로면 세운상가 한동은 철거된 상태이나 서울시는 최근 세운상가 재정비계획을 ‘전면 철거’ 대신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였다. (2013.6.25 서울시 발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의해 당해 층의 거실면적 200㎡ 이상인 경우 양쪽이 거실인 복도의 폭은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m 높이 이하에서 건축선을 침범하는 한옥:
한옥의 특성상 4.5m이하에서 창호의 개폐(여닫이 창호)시 건축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도로 폭 2m 이하의 한옥밀집지역:
한옥밀집지역은 도로 폭이 2m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사도에 접한 경우가 있어 신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훼손이 불가피하다.



복도의 폭이 1.4m인 군사시설:
복도의 폭이 1.4m인 군사시설(미군 장병숙소)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문화시설 등으로 재 활용하려면 일부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료 : 심경미 (201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현행 건축자산에 불합리한 법 규정에 따라 그 가치와 물리적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건축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활용을 통해 건축문화자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법률의 성격 및 입법 방향

본 법률이 「문화재보호법」과 대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규제법’이 아니라 ‘지원법’이라는 데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 현실과 한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그동안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서 한옥과 관련된 약 10개의 항목들이 개정되었다. 또 많은 지자체가 경제적 측면에서 수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위 근거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법률은 건축문화자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옥 지원조례 및 근대건축물 지원조례와 같은 기존 건축문화자산 관련 지원조례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진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법률

법률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충돌 방지를 위해 건축자산에서 문화재는 제외하며 둘째, 소유자의 자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 적용하고 셋째,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운영하며 넷째, 특정 건축자산의 점적 관리뿐만 아니라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면적관리제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옥의 진흥을 위해 한옥에 한해서 신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자산의 경제성

3. 건축자산의 개념 및 가치

본 법에서 건축자산의 정의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으로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건축자산은 조성시기의 제한이 없어 공간사옥과 같은 현대건축물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대상으로서 ‘건축’의 범주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아우르는 공간환경을 포함한다. 아울러 ‘유산’이 아닌 ‘자산’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 한옥 보전·진흥 지원조례는 2002년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한옥보전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총 48개의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도 2010년 부산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1년 대전시, 2013년 창원시 총 3지역에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있듯이 대대로 이어져오는 것을 그대로 전승 또는 계승하는 의미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경제성을 지니는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축자산 관련 유사 개념 검토 종합

| 유사 개념 | 정의 | 근거 |
|-------------|--|---------------|
| 문화유산 | 과거의 흔적이자 역사의 산물이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 | 유네스코 |
| 문화재 |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 문화재보호법 |
| 역사적(전통) 건조물 | 역사적 건축 작품으로서, 혹은 토지의 역사, 유서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존재가 평가되는 현존 건조물 | |
| 지역자원 | 지역이 갖는 고유한 자원으로써 인류의 사회생활을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한 원천으로 일정한 관리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 | |
| 역사문화환경 |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 · 형성하고 있는 건조물로 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 | |
| 미래유산 |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유 · 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 서울시 미래유산 웹사이트 |

(자료 : 심경미 외(2013))

건축기본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 유사 개념 | 정의 |
|------------|--|
| 건축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 관리하는 것 |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 공간환경(空間環境)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 공공공간 및 경관 |
| 공공공간(公共空間) | 가로 · 공원 ·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 |

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본 법(안)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소유자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면적 관리 강화, 한옥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법안 구성

| | | | |
|---|---|---|--|
| 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장 건축자산의 진흥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 건축자산 진흥시책 수립 · 건축자산 기초조사 ·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 전문인력양성 및 관련 사업자 지원 | 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 관계법령의 특례 | 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 관리계획의 수립 · 관계법령의 특례 |
| 5장 한옥건축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 국가한옥센터의 설치 · 한옥 전문인력양성 및 산업 육성 ·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 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 진흥시책 추진 · 인식제고 ·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7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특별회계의 설치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 과태료 |

1.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여 스스로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 등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건축자산의 유지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의미는 건축자산으로 발굴·목록화된 대상 가운데 ‘우수’하다는 비교 우위의 의미보다는 소유자 스스로 중·개축 비용에 대한 지원 또는 건축 특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건축자산을 의미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건축물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개축 시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특례적용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되 안전과 직결되는 성능 규정은 해당 성능에 준하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을 경우에 한해 완화해 주도록 하였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우수건축자산 특례적용 범위(안)

| 구분 | | | 내용 | 우수건축자산 |
|------------|------|-------|--------------------------------------|---------------------|
| 법 제14조 제1항 | 건축법 | 제19조 | 용도 변경 | × |
| | | 제42조 | 대지의 조정 | ○ |
| | | 제43조 | 공개공지 등의 확보(추가) | ○ |
| | |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 |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 | ○ |
| | | 제47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 | 제53조 | 지하층 | ○ |
| | | 제55조 | 건축물의 견폐율 | ○ |
| | |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 | ○ |
| | | 제59조 |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 ○ |
| | |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 | 제61조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 ○ |
| | | 제64조 | 승강기 | 조건부 완화 |
| | 주차장법 |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 | 제19조2 |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 ○ |
| 제2항 | 건축법 |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 |
| | |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한함 |
| | |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목조건축물의 경우 조건부 완화 |
| | | 제52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 녹색건축 | 제62조 | 건축설비기준 등 | 조건부 완화 |
| | | 제14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추가) | ○ |
| | | 제15조 | 녹색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 검토 필요 |
| | | | | |
| 제3항 | 소방시설 | 제9조 |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 조건부 완화 |
| | | 제11조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조건부 완화 |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우수건축자산 주변지역 또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와 경관적 특성을 보전하기 위한 면단위 관리체제다. 일반적으로 비문화재로서 건축자산은 개별 가치는 크지 않을 경우라도 군집됨으로써 가지는 역사·경관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마련되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군집에 따른 가치 상승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인천 내항 등), 지역의 역사·문화에 기반을 두어 조성된 독특한 가로나 필지 등 도시조직과 그것이 이루는 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종로 피맛길, 명동 등), 개별 건축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는 낮더라도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독특한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지역(부산 감천문화마을, 인천 뽕이부리마을, 서울 서촌 한옥마을, 장수마을 등)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로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 및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과 건축법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건축자산 밀집에 따른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 주변의 일반건축물들의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수반되는 관리·규제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설치 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하였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특례적용 범위(안)

| 구분 | | 내용 | | 우수건축자산 |
|-------------------------|------|-------|-----------------------|--------|
| 지구 단위 계획 포함 완화 조항 | 건축법 | 제42조 | 대지의 조정 | ○ |
| | | 제43조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 |
| | |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
| | |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 | 제61조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 ○ |
| | 주차장법 |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추가 조항 | 건축법 | 제19조2 |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 ○ |
| | |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 | ○ |
| | |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
| | |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추가) | ○ |
| | | 제59조 |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 ○ |



세장형 필지의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명동



서울 성북구 정수마을(자료: 서울시)

3. 한옥 건축의 진흥

본 법에서 한옥은 자산으로서 '보전'의 대상인 동시에 수요에 따른 '보급'의 대상이다. 그런 만큼 본 법이 비록 '사업법' 성격은 아니지만, 한옥의 경우 오래전에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지어진 것도 '한옥'이라는 특수한 건축양식으로서 건축자산의 가치를 가지므로, 새롭게 조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을 마련하였다.

한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미 건축법 등에서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일반한옥에 주어지는 특례보다 포괄적인 완화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한옥 건축은 인력·기술·자재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이므로 중·개축 및 신축 시 비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체 지원, 한옥 전담 관리조직 및 관리체계 마련 등 한옥 건축 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4. 건축자산 진흥의 기반 마련

한편 본 법은 건축자산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공공의 책무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의 인식 제고에 필요한

도시재생과
건축문화자산의 상관성

교육·홍보, 관련 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지역의 건축문화자산 활용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

지역의 건축문화자산 활용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자산 및 특성을 전제로 활용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건축문화자산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고 셋째,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축자산진흥법은 지역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별 건축자산의 실태와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역할의 기반을 구축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원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은 비록 도시재생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건축문화자산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도시재생의 수단

그럼에도 도시재생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건축문화자산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진흥법에서의 규정보다 광범위한 대상, 특히 무형의 자산에 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재 이외의 건축문화자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관심과 인식개선 역시 선결 과제다.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지난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큰 성공을 이룬 사례는 무척 많다. 그 가치와 의미는 이미 입증된 셈이다. 이런 점을 두루 살펴 이제는 제도 마련과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1 심경미 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미발행).
- 2 심경미 외,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3 유광훈 외,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국토해양부, 2012.
- 4 이왕건 외,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11.
- 5 John McCarthy, "Dublin's Temple Bar- A Case Study of Culture-Led Regeneration",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6, 1998.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희공간, 현황과 과제*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도시 내에 다양한 유형의 유희공간 발생

201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인구 저성장을 가정할 때 인구 정점은 2016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주택과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신시가지 개발로 이어져 시가지 영역이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0년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는 2005년보다 9,000명 감소하였고 전국 141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도시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2008년부터 (신)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 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이 건축·도시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간 부족 문제로 고민하던 우리나라 도시에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유희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희교실과 폐교가 증가하고, 신시가지 개발의 영향으로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빈집과 빈 점포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부산시 폐·공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사건은 빈집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도시 내 빈 공간은 제대로 관리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와 분진을 유발하는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 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본과제로 진행된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임유경·임현성, 20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 유희공간 생성

한편 최근에는 도시 내 유희공간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유희공간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지역 자원 및 문제점을 근거로 재생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지역 내의 가용 도시재생자산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조정·활용하기 위한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계획에서 도시 유희공간은 지역의 쇠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임과 동시에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린재생 자원으로서의
유희공간

사회 문제 유발 요인으로서의 위험성,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등 현 시점에서 도시 유희공간 문제가 가진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유희공간 문제에 공공이 개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유희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시 내 유희공간 문제는 개별 필지와 건축물 단위에 국한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관리와 활용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의지와 형편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 내 유희공간이 필지 단위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지역의 쇠퇴를 악화시키는 문제 요인임과 동시에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잠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유희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도시 유희공간 발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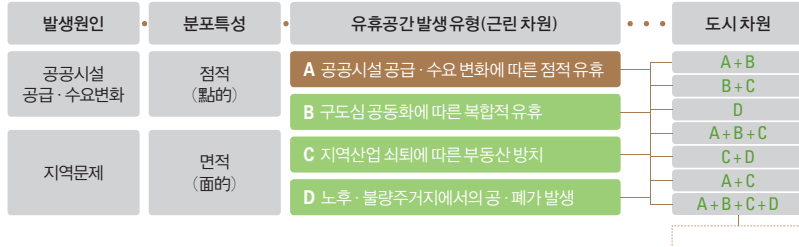
국내 도시 유희공간 발생 양상은 발생 원인과 분포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공유시설은 지역 인구 변화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학교 등을 제외하면 공급과 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 여건과 상관없이 유희화되는 경우가 많다. 동사무소와 중소 규모 학교가 수요 변화와 관련 부처의 정책 변화에 따라 통·폐합되며 고지대 수도물 공급을 위한 가압장과 터널 요금 징수 관리를 위한 터널관리동 등은 시설 이용 여건이 변화하면서 용도가 폐지되기도 하는데, 이들 시설들은 도시 내에 점적(點的)으로 분포한다.

반면 빈집과 빈점포 등 민간이 소유한 주거 및 상업 시설은 지역 쇠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면적(面的)으로 분포한다. 김광중 외(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 내 유희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구도심 공동화’, ‘지역 산업 쇠퇴’,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구분되는데,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유희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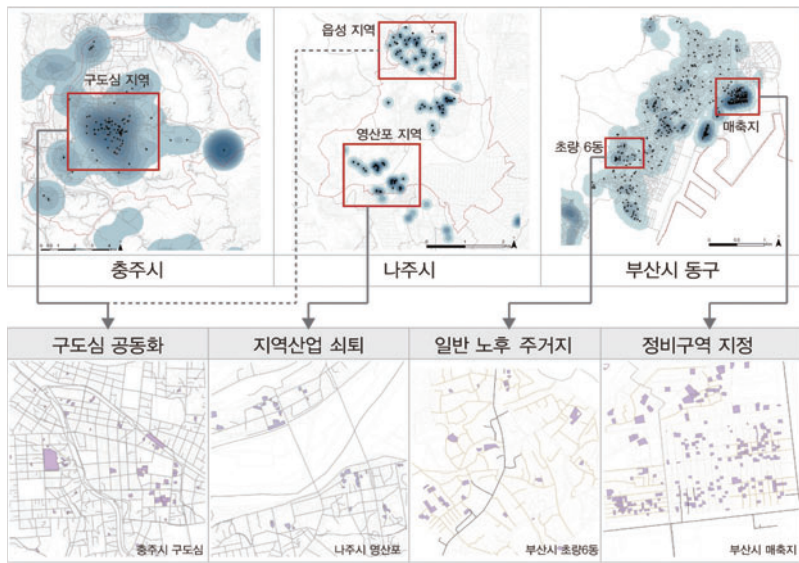
국·공유시설, 빈집, 빈 점포 관련 통계자료와 도시 쇠퇴지역 유희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한 국내 도시 유희공간 발생 양상은

공공시설 공급·수요 변화에 따른 점적 유흡(A),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복합적 유흡(B), 지역산업 쇠퇴에 따른 부동산 방치(C), 노후·불량 주거지에서의 공·폐가 발생(D)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도시 유흡공간 발생 유형



충주시, 나주시, 부산시 동구 유흡공간 현황 및 발생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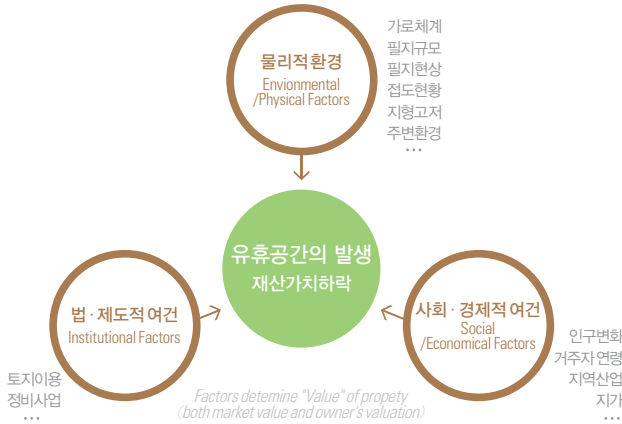


국내 도시 유흡공간 발생 특성

유흡공간 발생은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요인과 관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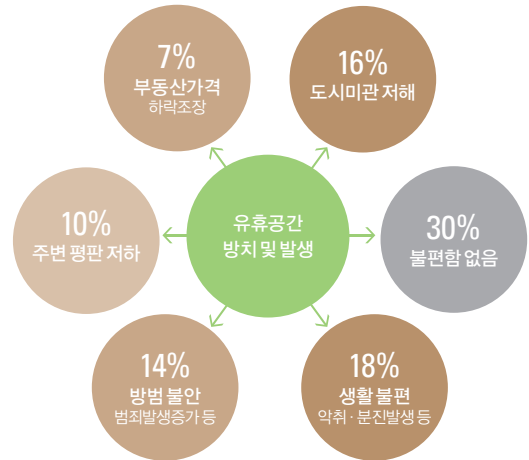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노령인구비율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지역산업 쇠퇴 등 경제적 요인은 유흡공간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점도 조건이나 필지 형상 등 물리적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흡공간이 위치하는 필지 중에서 점도 여건이 불량하고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며 규모가 작은 소필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상호 영향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정비지구 지정 등 법제도적 요인도 유흡공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유휴공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자료 : Bassett, Schweitzer, and Panken(2006), p.13의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재구성)

유휴공간이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료 : 부산시 동구, 충주시, 나주시 유휴공간 인근 주민 면담조사 결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건축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유휴건축물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일부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유휴공간은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역의 쇠퇴를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 내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범죄 발생 장소로 사용되고, 붕괴와 화재 위험 우려를 높이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유휴공간 발생 지역 주민들은 유휴 또는 방치 상태의 도시공간이 주변에 방법 불안, 생활 불편, 도시미관 저해, 부동산가격 하락 조장, 주변 평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시 유휴공간은 지형적 요인, 필지 여건, 도시개발현황 등 근린 단위의 지역 여건에 따라 발생 양상과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 구도심이나 일반적인 노후주거지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유휴공간이 점적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는 반면 정비사업이 예정된 주거지역이나 지역산업이 쇠퇴한 지역에는 다수의 빈 공간이 밀집하여 분포해 범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공간 활용 방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 부산시 동구, 충주시, 나주시 유휴공간 인근 주민 면담 조사 결과

유휴공간의
부정적 영향

유희공간 발생원인, 분포특성, 주변영향 차이에 따른 유형 구분

| | 부산시 동구 | | 충주시 | | 나주시 | |
|-----------|-----------------|-------------|---------------|--------------|--------------|---------|
| | 매죽지 | 초량6동 | 구도심 | 저층거주지 | 읍성(구도심) | 영산포 지역 |
| 도시개발 여건 | 개발지연 | 사업구역 | 재생계획 | - | 보존지구사업구역 | 사업구역 |
| 물리적 환경 | 평지/고립 | 구릉지 | 양호 | 평지/양호 | 양호 | 양호 |
| 사회·경제적 여건 | 인구감소/고령인구 비율 높음 | | | | | |
| | 개발이익기대 | | | | | |
| 분포 특성 | 밀집 | 분산 | 분산 | 밀집/분산 | 분산 | 밀집 |
| 건축물 특성 | 1층 주택 | | 혼재 | 1층 주택 | 혼재 | 혼재 |
| 유희현황 | 대체로 양호 | 열악 | 열악/물리적 손실 심각 | | 열악/물리적 손실 심각 | |
| 주민인식 | 개발기대방치 | 생활 불편 | 방법 불안/생활 불편 등 | | 생활 불편 | 범죄 안전 |
| 주민기대 | 텃밭 | 텃밭 | 주거/상업 | | 주거/본래용도 | 주거/상업 |
| | 노후 주거지 개발 지연 | 노후 주거지 구릉지역 | 구도심 공동화 | 노후 주거지 주변 양호 | 구도심 공동화 | 지역산업 쇠퇴 |
| | ↓ | ↓ | ↓ | ↓ | ↓ | ↓ |
| | D-1 | D-2 | B | D-3 | B | C |

보이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일반 노후주거지의 경우 체육시설이나 텃밭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근린 재생 노력 : 성과와 한계

도시 내 유희공간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무소와 같은 유희 공공시설을 개조하여 도서관·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이나 미술관·전시관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도심에 방치된 폐가를 철거하고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노후주거지에서는 공가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폐가를 철거한 후 주민 공동 텃밭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 싼값으로 임대하여 주거 복지 실현의 기회로 삼는가 하면,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개조하여 수공업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희공간 발생 특성과 지역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유희공간 활용 사례
증가



폐가를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한 사례(부산 매곡지)



공가를 개조하여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한 사례(부산 매곡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 유희공간의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주체별 역할 분담과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며, 도시 유희공간 발생 방지 및 활용 촉진과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관리·활용 정책 과제

우리나라 도시 유희공간 발생의 특성, 유희공간 활용을 위한 기존 정책과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유희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희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이용 상태와 쇠퇴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하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희공간 문제는 지역 전체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발생 원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중심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①유희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희공간 현황관리체계(DB) 구축 ②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현황 관리와 사업 공조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구성 ③유희공간 문제의 공공 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④유희공간의 철거와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방안 마련 ⑤유희공간 발생 양상과 거주자 특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내 유희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⑥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실시라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과제별 주요 실행수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한편 유희공간 발생 양상은 사회·경제적 여건, 도시개발 여건, 물리적 환경에 따라 근린 단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지역별로 위의 정책과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소중심적 접근

유희공간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및 주요 내용

| 정책과제 | 주요내용 | 실행수단 |
|------------------------------|------------------------------|--|
| 유희공간 현황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 및 토지 대장 고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기간, 공실률 등에 관한 별도 항목 추가 • 건축물 정기 및 수시점검 세부항목에 유희공간 관련 정보 추가 • 개인 인적정보와 전산 연동 필요 |
| | 유희공간 DB 체계 일반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울행정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GIS 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실태조사시스템 등 통합 활용 •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추진 시 유희공간 관리 |
| | 도시재생 사업 시 전수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조사관리 항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구체화 |
| 거버넌스 조직 구성 | 민·관협력형 추진 조직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관리 유지원리 조항 (「건축법」 제35조) 개정을 통한 주택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 | 비영리 단체 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록을 통한 지원 |
| | 민간전문가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 내 민간전문가 보수 및 업무기준 마련 |
| 제도적 근거 마련 | 건축법의 개정 및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유지원리’(「건축법」 제35조) 개정 • ‘건축물의 유지원리에 관한 법률(가칭)’ 신설 |
| | 조례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등 유희공간에 관한 조례 마련 |
| 재정지원방안 마련 | 철거·운영·유지원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특별회계’, ‘보조 또는 융자’ 조항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25조) |
| | 조세 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
| 지역 내 유희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도시재활성화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재생형 도시재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 | 도시관리계획의 부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실시 |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재생형 도시재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 | 운영 매뉴얼 및 주민 의식 계발 프로그램 마련 | |

및 실행수단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희공간 발생 유형은 ‘노후주거지’ ‘도심부’ ‘지역산업 쇠퇴지역’으로 구분되며, 노후주거지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제도적 여건이나 구릉지역 등 물리적 환경 요인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적합한 유희공간 관리·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유형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나오며

Hollander(2011)는 미국 선벨트 지역의 도시쇠퇴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지자체는 공공 주도의

유희공간 발생유형별 관리·활용 정책방향

| 지역특성 | 지역여건/발생원인 | 물리적 환경 | 법·제도적 여건 | 사회·경제적 여건 | | | |
|-------|--------------------------------|-----------------------------------|---------------------------|------------------|-------------------------|------|-----|
| | 상태 | 안정 | 잠재적유휴 | 유휴 | 방치 | | |
| | 발생 빈도 | 밀집 | 부분적 밀집 | 분산 | ... | | |
| | 파손 정도 | 양호 | 부분적 손상 | 철거요망 | ... | | |
| 지역수요 | 공공시설 | | | | 공동공간 | 주거시설 | ... |
| 발생 유형 | D-1 노후 주거지 /정비 구역 | D-2 노후 주거지 /구릉 지역 | D-3 일반 노후 주거지 주변 양호 | B 구도심 공동화 | C 지역산업쇠퇴 방치공간 집단화 | | |
| | ↓ | ↓ | ↓ | ↓ | ↓ | | |
| 정책 방향 | 방치 건축물을 철거유도를 통한 정주환경 유지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활성화 | | 복합적 활용 도심부 재생 | 유휴공간 정비 쇠퇴 가속화 방지 | | |

재개발, 무대책, 또는 스마트한 쇠퇴(smart decline) 중 하나를 정책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스마트 쇠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가 쇠퇴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보다 작으면서도 살기 좋은 근린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도시의 재생을 주도하던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면철거 후 새로운 지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 등 양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시 내 유희공간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도시에서 쇠퇴는 건축물의 연한과 지역의 노후건축물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필지와 건축물 단위로 일어나는 미시적인 현상이다. 이들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근린 쇠퇴의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또 충분히 늦춰질 수도 있다.

근린 재생은 근린 전체를 새로운 다른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아서 비어가는 것들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남아 있는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다. 근린 쇠퇴의 지표이자 재생 자원으로써 건축물과 필지 단위에서 발생하는 도시 유희공간에 대한 공공 개입은 근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희공간에 대한
공공개입 필요

참고문헌

- 1 김광중 외, 「도시쇠퇴 실태 자료구축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재생사업단, 2010.
- 2 임유경·임현성,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 3 HOLLANDER Justin B., *Sunburnt Cities : The Great Recession, Depopulation and Urban Planning in the American Sunbelt*, Routledge, 2011.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재활용 사례

임재용
건축사사무소 O.C.A 대표

도시재생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도시재생의 문제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녹아 있는 복합체이므로,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략이 나오면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주체에 따라 관 주도형과 주민 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관 주도형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한 도시 또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빌바오(Bilbao)가 좋은 예이며,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실패하여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 경우도 적지 않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실패한 경우의 대부분은 주입된 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빛어졌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관 주도형 도시재생과 달리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몇몇 전략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문화 기반과 지역성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도시재생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크게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은 주로 기능을 상실한 사회기반시설들을 문화적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폐광을 환경과 문화의 도시로 재탄생시킨 독일의 줄버레인 광산(Zeche Zollverein)과 영국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 등이 좋은 사례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은 규모는 작지만 생활 밀착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커뮤니티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많이 확충되어야 할 사업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공공 건축가로서 실제 참여했고 이미 완공된, 주민 참여형이면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건축물 재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재생의 물리적 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의 대상에는 도시기반시설, 도시 유휴 공간, 그리고 유휴 공공건축물이 있다.

사회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은 고가철도나 고가도로의 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생활권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미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었고 사례도 많은 편이다. 최근 미국에서 도심지 재생에 성공한 델러스(Dallas)에 있는 클라이드 워런파크(Klyde Warren Park)는 기존 도시고속도로를 덮어서 단절된 두 커뮤니티를 이은 도심 공원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프로젝트다.

도시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은 폐선 부지, 하천 주변 공간, 공공공지, 공공시설 주변 공간, 도시 자투리 공간, 골목길 등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들인데,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은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용도 폐지된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건축물이다. 수도 관련시설로 정수장이나 취수장, 전력 관련 시설로 화력 발전소, 그리고 석유비축기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 위치와 규모로 볼 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재활용된다. 현재 서울 거리예술 창작센터로 조성되는 구리 취수장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그 예이다. 둘째는 행정 구역 통·폐합 등의 이유로 유휴화된 공공건축물이다.

생활 밀착형 사업



미국 델러스의 클라이드 워런파크

서울시 소규모 공공프로젝트의 현황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 공공건축가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였거나 자문을 받은 공공 프로젝트들의 목록을 보면 소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가능하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유휴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하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신축을 한다는 전략이다.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한 공공프로젝트 중 음영으로 표시된 프로젝트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인데,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한 프로젝트

| 일련번호 | 날짜 | 프로젝트명 |
|------|--------|------------------------|
| 1 | 130305 | 송인2동청사 리모델링 |
| 2 | 130404 | 자양제3동 주민센터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
| 3 | 130320 | 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 |
| 4 | 130409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
| 5 | 130411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신축 |
| 6 | 130506 | 휘경동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
| 7 | 130515 | 노원구 목공예센터 신축 |
| 8 | 130523 |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
| 9 | 130604 | 서울광장스케이트장 편의시설 신축 |
| 10 | 130705 | 신시흥어린이집 신축 |

| 일련번호 | 날짜 | 프로젝트명 |
|------|--------|------------------------|
| 11 | 130618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
| 12 | 130705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 |
| 13 | 130731 | 관악구 보건지소 증축 |
| 14 | 130807 | 도봉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마을회관 신축 |
| 15 | 130807 | 도봉구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
| 16 | 130904 | 번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
| 17 | 130904 | 수유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
| 18 | 130912 |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
| 19 | 130913 | 시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증축 |
| 20 | 130923 | 휘경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은 프로젝트

| 일련번호 | 날짜 | 프로젝트명 |
|------|--------|-------------------------------|
| 1 | 130110 | 사당종합체육관 신축 |
| 2 | 130122 | 천왕 여성안심주택 신축 |
| 3 | 130129 | 신정동 복합센터 신축 |
| 4 | 130201 | 제기동청사 및 전농동 구립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
| 5 | 130205 |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신축 |
| 6 | 130213 | 고향경로당 리모델링 |
| 7 | 130215 | 염창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및 중화동 장기전세주택 신축 |
| 8 | 130228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청사 신축 |
| 9 | 130320 | 당산2동 복합청사 신축 |

| 일련번호 | 날짜 | 프로젝트명 |
|------|--------|-----------------------|
| 10 | 130320 | 용두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
| 11 | 130320 |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
| 12 | 130320 | 자양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 |
| 13 | 130320 | 마포 구민체육센터 신축 |
| 14 | 130322 |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신축 |
| 15 | 130326 |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
| 16 | 130326 | 구립봉천청소년독서실 증축 및 리모델링 |
| 17 | 130326 | 개포1266 재건마을 장기전세 |
| 18 | 130326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축 |
| 19 | 130326 | 초안산 숲속의 작은 북카페 신축 |
| 20 | 130326 |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신축 |

| 일련번호 | 날짜 | 프로젝트명 | 일련번호 | 날짜 | 프로젝트명 |
|------|--------|-------------------------------------|------|--------|---------------------------|
| 21 | 130327 | 구립신월1동청소년독서실 신축 | 44 | 130618 | 여의도복지센터 신축 |
| 22 | 130327 | 서교동주민센터 신축 | 45 | 130618 |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 |
| 23 | 130327 |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46 | 130618 | 위례지구 A1-10BL 공동주택 신축 |
| 24 | 130329 |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개·보수 공사 | 47 | 130625 | 달맞이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
| 25 | 130411 | 용강동 복합청사 신축 | 48 | 130625 | 천왕지구 소형 임대주택 신축 |
| 26 | 130402 |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 49 | 130702 | 청계천 진출입계단 설치공사 |
| 27 | 130408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 50 | 130705 | 고척동 156 장기전세주택 |
| 28 | 130408 |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 신축 | 51 | 130705 | 구로구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 |
| 29 | 130411 | 구로3동 복합청사 신축 | 52 | 130723 |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
| 30 | 130412 |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 | 53 | 130723 |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
| 31 | 130430 |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신축 | 54 | 130723 | 중구 문화원사 및 신당4동주민센터 신축 |
| 32 | 130502 | 수송 1-9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 55 | 130731 | 금천구 다문화 경로당 리모델링 |
| 33 | 130506 | 공릉동 기숙사-2 신축 | 56 | 130813 | 청량리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
| 34 | 130515 | 신내동 의료안심주택 시범사업 | 57 | 130820 | 신정2동 어린이집 신축 |
| 35 | 130515 | 노들섬 활용 방안 | 58 | 130904 | 목동보건지소 건축 |
| 36 | 130515 | 석유비축기지 활용 방안 | 59 | 130912 | 신내3지구 4-6단지 소규모 임대주택 |
| 37 | 130604 | 경복궁 서측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 60 | 130912 | 상계장암지구 및 마천지구 소규모 임대주택 |
| 38 | 130604 | 구로 디지털문화관 신축 | 61 | 130913 | 신당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
| 39 | 130604 |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신축 | 62 | 130913 | 중곡제일골목시장 고객쉼터 건립 및 주차장 보수 |
| 40 | 130605 | 강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지붕재) | 63 | 130916 | 구로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
| 41 | 130610 | 강일1단지 신축 | 64 | 130923 |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
| 42 | 130618 | 세곡2, 신내3 소규모 임대주택 신축 | 65 | 130924 | 현충묘지공원 행사 지원시설 |
| 43 | 130618 |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 및 연립주택, 내곡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 | | |

서울시 폐지 동사무소 리모델링 명소화 사업

서울시가 2008년 동 통·폐합을 실시하여 25개의 동사무소가 유휴시설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시 특별 경관관리 설계자를 통하여 폐지 동사무소 리모델링 명소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유휴시설이 된 25개의 동사무소를 해당 커뮤니티의 형편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는 프로젝트였다. 필자는 이 중 봉천9동과 신정5동 동사무소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였다.

1. 서울시 신정5동 주민센터의 재 활용 사례

신정5동 동사무소는 동 통·폐합 이전 동사무소와 예비군 동대본부로 쓰였다. 통·폐합 이후 주민들은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신정5동 동사무소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별도로



신정5동 주민센터 3층 리모델링 전



신정5동 주민센터 3층 리모델링 후



신정5동 주민센터 1층 리모델링 전



신정5동 주민센터 1층 리모델링 후

기존 동청사는 조금 권위적인 분위기의 흰색 타일 건물이었다. 또 외벽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심하였고, 단열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본적인 외장 마감은 방수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외단열 시스템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흰색 배경에 서로 다른 재료의 매스가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돌출된 박스는 입구가 되고, 도서관 내부에서 걸터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돌출창이자 헬스장에서 바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흰색 바탕에 박혀 있는 돌출된 매스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다이내믹함을 연출하고, 주민센터에 맞는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신정5동 리모델링 전 입면디자인



신정5동 리모델링 후 입면디자인

2. 서울시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던 봉천9동 주민센터는 2개 층으로 2개 층 모두 동사무소로 사용되었다.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먼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듣고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2개 층에 동사무소로 쓰였던 공간은 1층은 주민 헬스클럽으로, 2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확정하여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평면도

변경 전

2층



동사무소

변경 후



어린이도서관

1층



동사무소



주민 헬스클럽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전 내부 모습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후 내부 모습

기존 건물이 막다른 도로 끝에 위치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주어진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 기존의 건물 마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면에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층 높이의 구조물을 세우고 유리로
마감하였다.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전 입면디자인



봉천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후 입면디자인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의 한 축은 주민 참여형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해당 커뮤니티의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어 무리한 신축을 지양하고 유헬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치밀한 기획과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며, 좋은 설계와 시공을 통해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 그것의 유지·보수와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중에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헬 공공건축물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신축보다는 기존의 유헬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강북구도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김정후

런던대학교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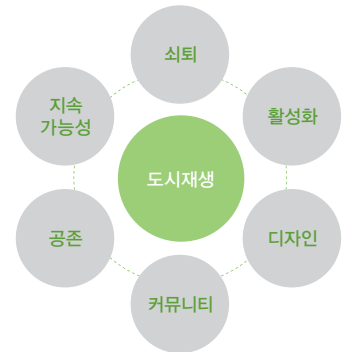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건축과 정책

라틴어에 기원을 둔 ‘재생(Regeneration)’은 ‘재탄생(Rebirth)’이라는 생물학적 의미에 기초한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격한 쇠퇴에 직면한 유럽의 후기산업도시들에서 본격화된 도시재생에 대한 학문적 견해와 분석 중에서 “전 세계가 폭넓게 경험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다”**라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 주장은 도시재생이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명확히 정의하고, 개념화하고, 보편화하기 어려운 난해한 특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안을 찾고, 시행하는 방식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가치 정립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분야가 도시와 건축은 물론이고 역사·환경·지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의 구분 없이 확장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유효한 방식 중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요 연구 및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를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쇠퇴(Decline)’ ‘활성화(Revitalization)’, ‘디자인(Design)’, ‘커뮤니티(Community)’ ‘공존(Coexist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을 최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쇠퇴’는 도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해지는 현상이고, ‘활성화’는 이러한 상태에서 활력을 불어 넣어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는 행위다.



* Jones, P. and Evans, J.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London: SAGE Publication Ltd, 2008, p.2.

** Roberts, P. and Sykes, H. (eds.), *Urban Regener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Ltd, 2000, p.3.

‘디자인’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고, ‘커뮤니티’는 도시재생의 대상이자 시행 주체를 의미하며, ‘공존’은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고,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이어야 함을 상징하는 거시적 어젠다라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원칙이나 특별한 위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도시재생 원리와 방법론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집중한다.

도시재생에서 드러난 특성을 토대로 건축 및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이 한 도시의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며 총체적 변화를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건축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도시의 낙후된 건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둘째는 건축이 도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축은 도시의 외형적·내형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축의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시의 쇠퇴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축의 역할과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유럽의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면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복잡한 시스템을 지닌 정책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는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을 낳았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직면한 도전이자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잡한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객관적인 원리와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시나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곧 고도의 조율과 타협을 위한 정치적 행위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바로 정책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으로 등장한다.

도시재생의 확산에 기인한 정책의 위상 변화는 앞서 설명한 건축의 역할과

* Kalergis, D. "The Role of Architecture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in Malikova, L. and Sirak, M. (eds.) *Regene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European Peripheries*, Bratislava: Interlingua, Ltd, 2008, pp.21-34.

진밀하게 연계된다.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데 건축이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었다. 즉 단순히 눈에 띄는 랜드마크 몇 개를 디자인하는 단계를 넘어 건축이 쇠퇴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그 내용이 디자인을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하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높은 수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랐다.*

도시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날 새롭게 자리 잡은 도시재생, 건축, 그리고 정책의 관계를 요약하면, 도시재생은 건축이 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개선에 공헌해야 하는 명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을 뒤집어 분석하면 건축 디자인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한 도시가 결국 성공적인 도시재생 성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도시재생,
건축, 정책의 관계

빌바오 구겐하임과 테이트모던 효과의 ‘재’해석

통상 도시재생을 설명할 때 유럽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18, 19세기 동안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성취한 유럽 도시들의 경우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급격한 쇠퇴 현상이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유럽이라 할지라도 도시마다 시기·규모·환경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 시점에서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보자.

유럽에서 건축을 기반으로 가장 성공한 도시재생 모델로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The Guggenheim Museum Bilbao)’과 영국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을 꼽는 데 큰 이견이 없으리라 판단한다.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와 ‘테이트모던 효과(Tate Modern Effect)’라는 동일한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에 벤치마킹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성공 사례가 제공하는 도시재생 효과의 핵심은 무엇일까?

먼저 빌바오 구겐하임을 살펴보자. 1997년에 빌바오 구겐하임이 등장한 이후 마드리드·바르셀로나·그라나다·세비야·발렌시아 등에 가려 있던 빌바오는 단숨에 스페인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발돋움했고, 그 변화의

* CABE, *Making Design Policy Work*, London: CABE, 2005, p.4.



빌바오 구겐하임을 중심으로 한 빌바오 전경

빌바오 도시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민·관 협력기관

중심에 빌바오 구겐하임이 자리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구겐하임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이라 할 수 있다.* 바스크 지역의 다양한 학자들이 객관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은 빌바오 시가 기획한 전체 도시재생 시나리오의 한 부분으로, 문화와 경제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빌바오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기관은 ‘빌바오 메트로폴리스-30(Bilbao Metropolis-30)’과 ‘빌바오 리아 2000(Bilbao Ria 2000)’이다.***

1991년 바스크 지역의 주요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빌바오 메트로폴리스-30은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과 비전 수립을 담당하였다. 이 기관은 빌바오가 가졌던 쇠퇴한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과 이에 기반한 ‘빌바오 광역계획(The Metropolitan Bilbao Plan)’ 등의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스-30은 단순한 개발 못지않게 빌바오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하며, 주거지역을 보호하면서 균형발전을 시도하였다.

이듬해인 1992년에 설립된 빌바오 리아 2000의 실제 수행은 개발주체로서 빌바오 시장이 책임을 맡았다. 특히 각종 현상설계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방치되었던 지역들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하였다.

* 2005년에 출간된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은 바스크 지역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진행한 컨퍼런스 내용을 토대로 한다. 특히 빌바오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구겐하임 효과에 대해 객관적 견해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 Guasch A.M. and Zulaika, J. (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2005, p.86.

*** 김정후 『유럽건축 뒤집어보기』, 서울 : 효형출판사, 2007, p.118.



테이트모던과 밀레니엄 브리지를 중심으로 한 템스강 전경

아울러 지방 정부가 소유한 땅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결국 빌바오 도시재생의 핵심을 구겐하임 박물관의 등장에 둘 것인지, 메트로폴리스-30 및 리아 2000이 수립한 일련의 정책과 그에 의한 시행에 둘 것인지에 따라 빌바오 효과를 해석하는 방식은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다음으로 테이트모던을 살펴보자. 2000년에 등장한 테이트모던은 또 다른 도시재생 효과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1947년과 1963년에 런던 중심부와 마주한 템스강 남쪽에 건립된 대형 화력발전소가 1981년에 문을 닫고 20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 당시까지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자치구 중 하나였던 서더크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재단인 테이트가 본관에 이어 런던에 두 번째 미술관 건립을 기획하였고, 비록 오랫동안 방치되었지만 지형적·공간적·건축적으로 훌륭한 특성을 지닌 화력발전소를 재활용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런던광역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해 꾸준히 보완한 ‘런던광역종합개발계획(The Greater London Plan)’과 서더크 카운슬이 수립한 ‘지역개발종합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에서 기존 화력발전소를 포함한뱅크사이드 지역을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재생해야 함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런던광역시는 템스강으로 나누어진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을 점검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술재단인 테이트가 광역 및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최대한 반영한 제안서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테이트모던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 테이트재단은 테이트모던을 제한함과 동시에 테이트모던이 자리한 쇠퇴한 뱅크사이드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뱅크사이드 도시연구(Bankside Urban Study)’와 같은 일련의 종합계획과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테이트모던이 유발한 도시재생 효과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렇다면 테이트모던 효과를 낳은 핵심은 무엇일까? 버려진 화력발전소의 놀라운 변신은 미디어의 주목을 끄는 역할을 하였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런던광역시와 서더크 카운슬이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오랫동안 다졌고, 테이트재단이 새로운 형식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나아가 테이트 모던의 건립을 확정된 이후 곧바로 밀레니엄 브리지 건립 계획을 수립해 센트럴 런던의 보행로와 공공공간 연계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테이트모던 효과는 21세기 런던이 추구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탄생한 민·관 협력체계가 낳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20세기 후반을 거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건축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지는 양상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도시 패러다임을 선도한 런던·파리·바르셀로나·베를린·빈 등이 중요한 화두를 선보였는데, 이와는 별개로 글래스고·빌바오·리버풀·릴리·로테르담·스톡홀름·헬싱키·코펜하겐·함부르크·뉘스부르크·프라이버그 등도 도시재생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 도시들은 삶의 질을 중시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수립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유럽의 대도시들을 능가하는 강점을 드러냈다. 도시재생이 궁극적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가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얻은 도시들이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유럽에서 전개되는 도시재생은 넓은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현재 유럽에서 건축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끄는 개념적·실제적 원동력은 다양하게 진화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등장한 주요한 원동력을 살펴보면 문화, 커뮤니티, 공공공간, 친환경, 창조산업, 대규모 이벤트, 유흥지 및 산업유산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도시들은 이러한 원동력 중에서 한 가지만을 활용하기보다 도시가

* 김정후,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2009, pp.178-179.

** Evans, J. and Jones, P., "Rethink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mbiguity, creativity, and the shared territory",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0, 2008, p.1416.

추구하는 방향과 조건에 따라 몇 가지를 동시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향을 도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1. 문화와 창조산업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유럽 전역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방식으로, 가장 폭넓은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제도는 유럽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거리를 제공한다. 1985년에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도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금까지 선정된 도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유럽문화수도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을 촉진시킨
유럽문화수도제도

시행 초기에 유럽문화수도제도는 다분히 각종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90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를 기점으로 문화가 쇠퇴한 제조업 도시의 재생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글래스고는 1991년에 설립된 ‘글래스고 개발청(Glasgow Development Agency)’이 주도해 쇠퇴한 공업시설이 자리했던 지역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유럽에서 가장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먼 포스터의 ‘스코틀랜드 전시회의 센터’, 자하 하디드의 ‘교통박물관을 비롯해 사이언스물, 타워, 아이맥스 영화관을 갖춘 ‘글래스고



글래스고의 스코틀랜드 전시회의센터



글래스고의 사이언스센터

* 김정후, 『유럽의 발견』, 서울: 동녘출판사, 2010, p.18.

** Griffiths, R, “City / Culture Discourses: Evidence from the Competition to Select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08”,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14, No.4, 2006, pp.417-418.



2003년 유럽문화수도인 그라츠 전경



2008년 유럽문화수도인 리버풀 전경

후기 산업도시의
청사진

사이언스센터' 등의 건축물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유럽문화수도로서 글래스고의 성공은 '후기산업도시가 추구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쇠퇴한 도시의 재생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초기에 활용된 문화가 뒤 이어서 등장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즉 문화가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와 결합하여 지식산업으로서의 공고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도시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자리 잡은 유럽문화수도 제도는 이후 이탈리아의 볼로냐(2000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2001년), 오스트리아의 그라츠(2003년), 영국의 리버풀(2008년) 등이 공예·건축·예술 등을 매개로 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특히 이러한 도시들은 문화산업에서 출발해 창조산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창조산업과 교육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럽문화수도와 무관하게 런던·빈·암스테르담·파리 등은 기존에 지닌 문화 및 창조산업 분야의 강점을 특화해 권역별로 전략적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문화 및 창조산업에 기반한 유럽의 도시재생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였다.

2. 대규모 이벤트

문화·예술·스포츠 등과 연관된 대규모 이벤트가 효과적인 도시 홍보수단으로

* Garnham, N, "From Culture to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1, No.1, 2005, p.15.

여겨지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등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행사는 단기간에 도시를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도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유럽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가 단순히 도시를 홍보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녔다.

1998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20세기의 마지막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겉으로는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로 발견 40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낙후된 타호(테주) 강변 지역을 도시의 새로운 중심부로 개발하려는 장기적 재생 정책의 일환이었다.* 리스본 시는 1990년에 ‘리스본 광역시를 위한 지역계획(The Regional Plan for the Lisbon Metropolitan Area)’을 통하여 타호 강변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과거에 산업폐기물 야적장,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등이 자리했던 지역에 엑스포공원을 계획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한 중앙역을 포함해 도시의 주요 시설, 상가, 주택가, 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해 유럽을 대표하는 수변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엑스포를 마치고 약 10년 후까지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해 흔들림 없이 시행하였다는 점은 교훈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하여 엑스포 자체의 성공보다 사후 활용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엑스포는 전 세계가 당대의 기술력과 혁신적 개념을 선보이는 경연장인데 리스본 엑스포의 경우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장소 제공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초기부터 낙후된 산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형 이벤트를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이처럼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대규모 이벤트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8년에 스페인의 사라고사에서 열린 엑스포는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엑스포의 전면에 내세우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실질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위한 어젠다의 변화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 Carrière, J.P. and Demazière, C. "Urban Planning and Flagship Development Projects: Lessons from Expo98, Lisbon",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17, No.1, 2002, p.72.

** 김정후, 『유럽의 발견』, 서울: 동녘출판사, 2010, p.184.

*** Garcia, M. "World Expo 2008 Zaragoza", *Architectural Design*, Vol.78, Issue 6, 2008, p.100.



1998년 리스본엑스포를 위해 건설된 공원



2012년 런던올림픽 주경기장과 주변

통해 정점에 이르렀다. 런던 동쪽의 버려진 공업지역을 올림픽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 선정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올림픽이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방치된 공업지대에서 수거한 폐기물의 재활용 △사용 후 해체 가능한 경기장 건립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올림픽이 끝난 후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거 공급 △올림픽 부지의 공원화 계획 △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거의 모든 시설의 재활용 등은 그동안 일회성 올림픽이 낳은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지난 세기와 달리 오늘날 벌어지는 대규모 이벤트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첨병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유흥지와 산업유산

산업유산은 인간의 생계 활동 과정에서 탄생한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유산에 포함되는 건물과 시설을 단순히 물리적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산업용 건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관심의 대상인 이유는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에 방치된 대규모 유흥지와 그에 포함된 산업용 건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 적게는 수천 평에서 넓게는 수십 만 평에 이르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실상 해당 지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 김정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로서의 런던올림픽」, 『건축신문』, Vol.3, 2012, p.2.

** 김정후,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건축과 도시공간』, Vol.12, 2013, p.88.

***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 돌베개, 2013, p.12.

아니다. 즉 유휴지와 산업용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건축적 범위를 넘어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형적인 도시재생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상징은 뒤스부르크, 뮐하임, 에센, 보훔, 도르트문트 등 독일의 라인 강 일대에 자리 잡은 도시들이 선도하였다. 라인 강변에 60만 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자리한 티센 제철소가 1985년에 문을 닫자 뒤스부르크의 경제는 급격히 쇠락하였고, 철강공장 시설과 운송철로·수로·굴뚝·고철더미 등으로 인하여 주변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는 쇠폐된 산업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30년 동안의 중장기 재생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였고, 티센 제철소의 경우 현상설계를 통하여 도시공원과 생태보전을 접목한 '도시공원(Landscape Park)'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부지 전체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여가활동·행사 등을 가질 수 있는 다목적 공공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뒤스부르크는 활력이 넘치는 친환경 도시로 완벽하게 변모하였다.

한편 뒤스부르크에 인접한 에센은 독일 철강산업의 주역이었다. 이곳에 자리한 출퍼라인 탄광은 하루 1만 2,000톤의 석탄을 생산하는 독일 최대의 탄광이었으나 1986년을 마지막으로 폐광되었다. 주정부는 산업시설로서 폐광이 지닌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199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고, 2001년에 예상을 깨고 출퍼라인 탄광 일대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산업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변화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야경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 Walljes, I. and Ball, R. "Exploring the Realities of the Sustainable City through the Use and Reuse of Vacant Industrial Buildings", *European Environment*, Vol.7, 1997, p.195.

**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2013, pp.172-173.

*** 위의 책, pp.199-200.



에센 출퍼라인 탄광의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에센 출퍼라인 탄광의 루르 박물관

노먼 포스터가 12번 수직갱도의 안쪽에 자리한 보일러실을 개조하여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을 디자인하였고, 램 콜하스는 석탄 세척 공장을 재활용하여 '루르 박물관'을 디자인하였다. 그런가 하면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출퍼라인 경영 및 디자인대학'을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출퍼라인 탄광 일대에는 디자인 관련 기업·학교·재단·공공기관 등이 자리 잡음으로써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완벽한 재생을 이루었다.

뒤스부르크와 에센은 각각 대규모 제철소와 탄광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극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여겨지는데, 이외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베스트 가스공장 문화공원은 버려진 가스공장을 친환경 공원으로, 프랑스 파리의 12구 지역은 버려진 와인창고 일대의 유흥지를 대규모 공원·주거단지·상업공간으로, 스웨덴 말뫼의 조선산업 지역은 지식기반 산업 지역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 유흥지와 산업용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은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상징적·실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도시재생을 성취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쇠퇴의 본질과 건축의 역할

인류 역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시가 쇠퇴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쇠퇴를 야기하는 원인과 정도에는 언제나 차이가 존재해 왔다. 범위를 좁혀 오늘날 도시재생이 전 세계의 관심사로 부각된 이유는 18세기, 19세기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도시들이 급격한 쇠퇴를 겪고,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쇠퇴는 본질적으로 한 도시를 지탱해온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다시 말해 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경제적,

지역성과 역사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회적 조건들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으나, 없느냐가 도시 쇠퇴를 반전시키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은 도시의 쇠퇴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물리적 대상이자 동시에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빌바오 구겐하임, 테이트모던 그리고 문화와 창조산업, 대규모 이벤트, 유흥지와 산업유산을 통한 활성화 사례들은 건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

도시재생을 성취하기 위한 절대적 정답이나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재생을 실천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도시 쇠퇴의 본질이 해당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나아가 21세기는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에 존재하는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건축은 철저하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를 활성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고를 서술하며 전체적으로 정책을 강조한 이유도 도시재생을 위해 건축을 활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책의 틀 내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쇠퇴의 본질과 건축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재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만드는
지속가능성

참고문헌

- 1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2013.
- 2 김정후,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건축과 도시공간』, Vol.12, 2013, pp.88-95.
- 3 김정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로서의 런던올림픽』, 『건축신문』, Vol.3, 2013.
- 4 김정후, 『유럽의 발견』, 서울: 동녘 출판사, 2010.
- 5 김정후,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2009, pp.177-194.
- 6 김정후, 『유럽건축 뒤집어보기』, 서울: 효형출판사, 2007.
- 7 CABE, *Making Design Policy Work*, London: CABE, 2005 .
- 8 Carrière, J.P. and Demazière, C., "Urban Planning and Flagship Development Projects: Lessons from Expo98, Lisbon",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17, No.1, 2002, pp.69-79.
- 9 Evans, J. and Jones, P., "Rethink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mbiguity, creativity, and the shared territory",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0, 2008, pp.1416-1434.
- 10 Garcia, M., "World Expo 2008 Zaragoza", *Architectural Design*, 2008, Vol.78, Issue 6, pp.100-105.
- 11 Garnham, N., "From Culture to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11, 2005, No.1, pp.15-29.
- 12 Guasch A.M. and Zulaika, J. (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2005.
- 13 Griffiths, R., "City / Culture Discourses: Evidence from the Competition to Select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2008",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14, No.4, 2006, pp.415-431.
- 14 Jones, P. and Evans, J.,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London: SAGE Publication Ltd., 2008
- 15 Kaleris, D., The Role of Architecture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in Malikova, L. and Sirak, M. (eds.) *Regene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Bratislava: Interlingua, 2008.
- 16 Roberts, P. and Sykes, H. (eds.), *Urban Regener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Ltd., 2000.
- 17 Walljes, I. and Ball, R., "Exploring the Realities of the Sustainable City through the Use and Reuse of Vacant Industrial Buildings", *European Environment*, 1997, Vol.7, pp.194-202.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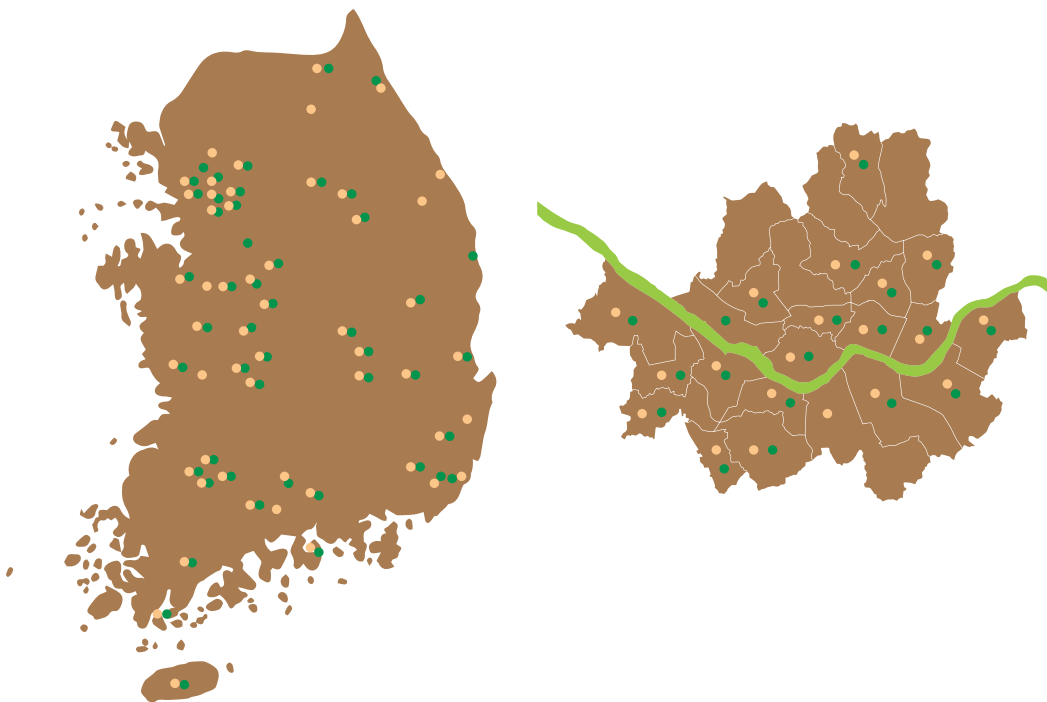
김영현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본 조사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한 도봉구 창동·서초구 잠원동(아파트), 성북구 삼태기 마을·강북구 번동(단독 및 다세대) 주민 4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도시사업추진
지자체

Q1.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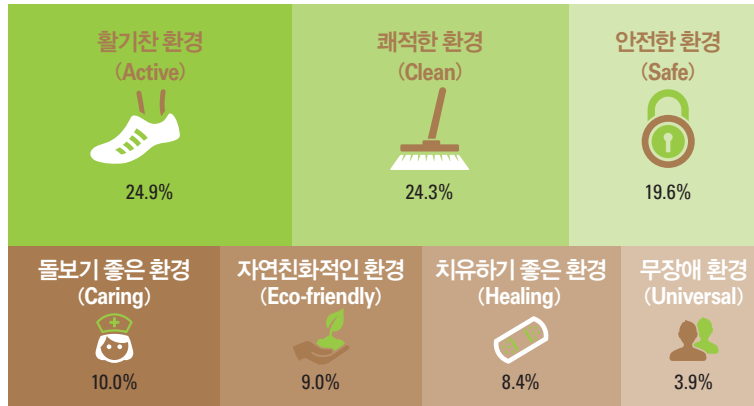
●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A. 우리나라의 약 72개 지자체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지역 30개국 1,3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개념이 도입된 후 1998년 과천시 건강도시 시범사업에서 시작되어 2013년 7월까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에 가입한 지자체는 총 72개가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도시도 68개가 있다. 그밖에 건강도시 연맹에는 미가입되었으나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10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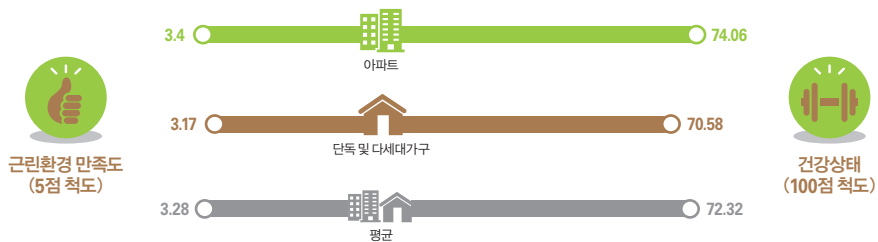
Q2. '건강한 근린환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A. 활기찬 환경(Active)과 쾌적한 환경(Clean)에 대한 이미지를 건강한 근린환경으로 인식.

대부분의 거주자는 자유롭게 걷고, 뛰고, 놀 수 있는 활기찬 환경(Active)과 공기가 맑고, 쓰레기가 없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Clean), 재해,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Safe)에 대해 건강한 근린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신체활동이 자유롭고, 활기차며(Active), 안전한 환경(Safe)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Clean)을 건강한 근린환경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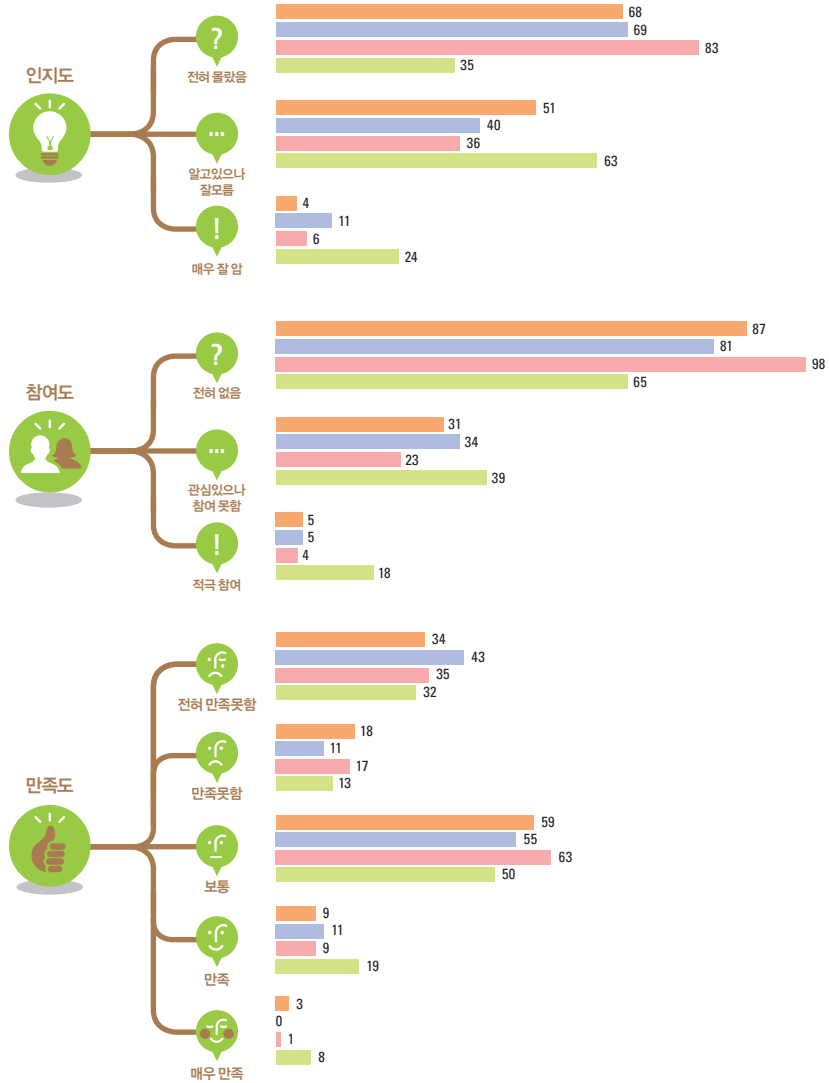
Q3. 주거유형별 근린환경 만족도와 건강 상태는?



A.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으며, 건강상태도 더 좋다고 인식.

Q4. 건강도시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며, 만족하고 있는가?

도봉구 창동(아파트)
강북구 번동(단독)
서초구 장원동(아파트)
성북구 삼태기 마을(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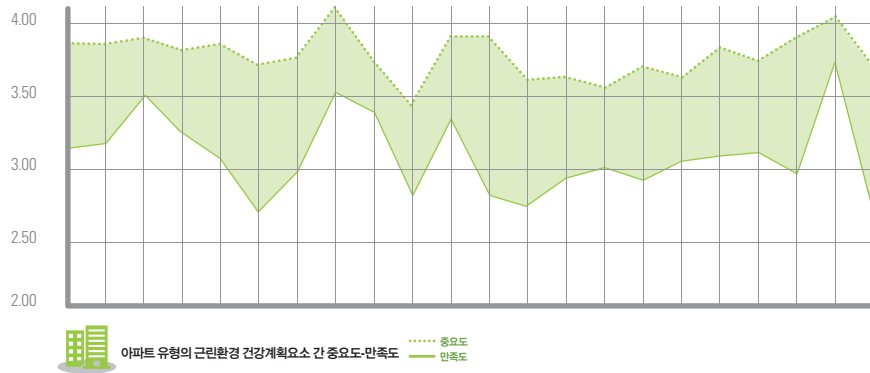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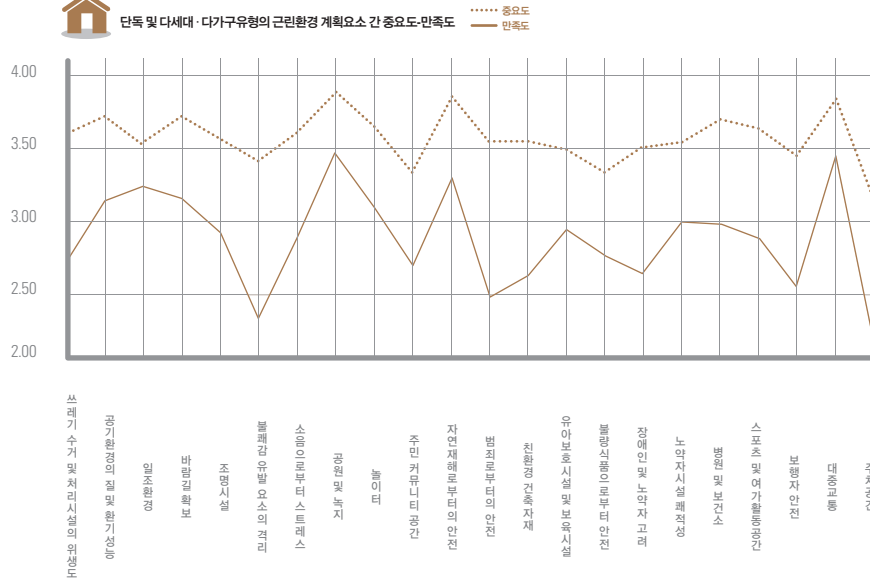
A.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임.

건강도시사업 자체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주민이 약 90%에 달하며, 주민의 6.5%만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약 90%로 현재의 건강도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낮았다.

Q5. 건강한 근린환경의 요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유형의 근린환경 계획요소 간 중요도-만족도



아파트 유형의 근린환경 건강계획요소 간 중요도-만족도

A. 만족도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과 단독주택지 주민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

총 22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주거유형과는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 단독주택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요소를 격리', '범죄로부터 안전', '노약자·장애인을 고려한 보행환경을 조성', '주차공간'등에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건축도시동향

건축과 도시는 멈춰있지 않다. 이는 그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고 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각각 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 자연 재해가 많은 자국 상황에 맞추어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었는지 알 수 있다. 유럽과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인 도시재생과 실천 방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건축과 도시 정비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蘇州工業園區) 도시개발

공업원구의 개발 모형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도시 개발 모형에 해당한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들에 유리한 기업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상하이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국제화는 21세기 도시개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요인임이 분명하다.



동일본대지진 후 가설주택의 건설현황 및 복구계획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규모가 컸던 이와테현 오쓰치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가설주택의 특징과 부지선정 과정,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동향을 파악해 본다. 또한 가설주택의 현지답사와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생활상을 살펴본다.



파리 프티 생튀르 페철도 부지의 재정비

프티 생튀르의 재정비 사업은 대중교통로인 철도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13 · 14 · 15구에 이미 설치된 산책로와의 연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페철도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최근 국토교통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기존의 사회·물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서울시는 푸른도시선언과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으로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공원의 개념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이 녹색복지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원녹지가 갖는 가치,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에 기반하는 도시적 사회공동체가 더욱 용이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화재위험으로부터 한옥 및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대부분의 한옥과 한옥마을은 여전히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한옥 및 한옥마을의 화재예방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한옥 및 한옥마을의 소방방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단신

-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함부르크 도시계획 외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외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蘇州 工業園區) 도시개발*

김형민
서안교통-리버풀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과 조교수

개요

쑤저우(蘇州)는 상하이(上海)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고속열차로 상하이에서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고 베이징(北京)과는 약 5시간이 소요된다. 1990년대 초반 중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의 협력에 의해 쑤저우 공업원구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공업원구는 그 규모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규모 성장에 외국인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2013년까지 중국의 장쑤(江蘇)성에 가장 많은 한국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쑤저우시가 장쑤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쑤저우 공업원구(工業園區, Suzhou Industrial Park)는 288km²의 토지 규모에 현재 인구 76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SIP, 2013). 공업원구에는 진지후(金雞湖)와 두슈후(獨墅湖)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으며, 북쪽의 경계는 양청후(陽澄湖)까지다.

중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력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상하이와 선전(深圳) 등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소수의 도시에 경제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신도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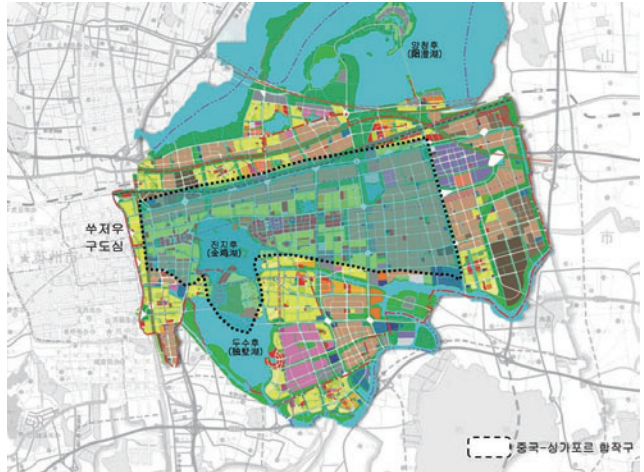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

싱가포르는 70% 이상이 중국계여서 소통에 장애가 적고 중국의 문화에 익숙하다. 싱가포르 정부도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모형을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에 이식하여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Pereira, 2004a). 아울러 급성장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1992년 싱가포르형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가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에게 국제적 수준의 산업도시 건설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양국 정부는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에 합의하였다(정지현 외, 2012). 이후 1994년 2월 26일 싱가포르의 총리 리관유와 중국의 부총리 리량칭이 쑤저우 공업원구 도시개발을 위한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Pereira, 2003).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 양국은 1994년 합작회사 CSSD(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Development)를 설립하였다. 초반 싱가포르대 중국 지분은 65:35로 싱가포르 주도의 도시개발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다(Pereira, 2004b).

싱가포르 정부에서 먼저 장소 선택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90년대에 아직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되지 않고,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은 곳을 물색하였다. 또한 상하이의와의 접근성도 간과될 수 없었다. 상하이는 중국의 관문도

*
본 사례연구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간자체 대신 정자를 사용, 쑤저우의 중국어 간자체 표기는 苏州임.



공업원구 개괄(자료: SIP(2013)를 토대로 저자 수정)

시로서 이미 산업화가 무르익었고 개발비용도 높아 도시개발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장쑤성은 가파른 경제성장세에 있었지만 산업화의 단계는 낮았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이미 다수 분포한 산둥(山東)성도 고려되었지만 이미 외국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투자효과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였다(Pereira, 2003). 장쑤성에서 두 번째로 컸던 우시(無錫)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쑤저우가 선호되었다. 상하이-난징(南京)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정원의 도시’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는 등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인 동시에 리관유가 지지하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Pereira, 2003).

마침내 1994년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쑤저우 공업원구 개발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같은 해 미화 225만 달러가 투자된 것 이외에 8,000만 달러의 투자를 달성하였고, 1억 달러 대출이 국제 금융기관들로부터 확정되었으며, 3,000만 달러의 대출은 중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루어졌다(Pereira, 2003).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연계기업의 전 회장들(예를 들어 Keppel, Jurong Town Corporation 등)을 CSSD의 CEO로 임명하여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자 하였다. 쑤저우 공업원구의 총 면적은 288km²이며, 이 가운데 싱가포르-중국 협력지구는 80km²다. 싱가포르-중국 협력지구는 공업원구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협력을 시작한 후 2002년 싱가포르 정부가 ‘철수(disengagement)’를 선언할 때까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도 지분을 소유하고 공업원구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등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2001년 싱가포르의 지분은 35%로 줄어들었고, 2005년 28%로 조정되었다(정지현 외, 2012). 현재는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사이의 갈등은 중국 정부가 쑤저우 신구(新區, Suzhou New District) 개발을 본격화하면서부터다. 공업원구는 쑤저우 도심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구는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까지 25km²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1990년에 이미 경제개발구역으로 허가를 받았다. 1992년에 중국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에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기를 희망하여 신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1998년까지 1500개가 넘는 중국 및 해외 기업이 신구지역에 유치되어 약 25억 달러가 이곳에 투자되었다(Pereira, 2004b).

이처럼 쑤저우 신구도 급격히 성장하여 공업원구는 결국 신구와의 경쟁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 정부 지원 때문에 발생한 신구와의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결국 2002년 ‘철수’를 선언하였다. 당시 신구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싱가포르 정

*

쑤저우 공업원구 도시계획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2013년 10월)

공업원구 주요 통계

| 연도 | 총인구 (만명) | 쑤저우 현지인 ¹ (만명) |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금액(억 달러) | 외국인 직접투자 실투자액(억 달러) | GDP (1억위안) ² |
|------|-------------|------------------------------|------------------------|------------------------|----------------------------|
| 1994 | | 16.5 | 1.8 | 0.7 | |
| 1999 | | 16.6 | 8.2 | 8 | |
| 2000 | | 17 | 9.7 | 6.3 | |
| 2001 | | 17.7 | 36.9 | 5.3 | |
| 2002 | | 21 | 17.7 | 9.1 | 251.7 |
| 2003 | | 22.3 | 20.9 | 12.1 | 365 |
| 2004 | | 25.8 | 40.8 | 18.1 | 503 |
| 2005 | | 27.3 | 38.1 | 15.8 | 571 |
| 2006 | | 29.7 | 38.3 | 16 | 680 |
| 2007 | | 31.4 | 47.7 | 18.2 | 836 |
| 2008 | | 32.7 | 30.2 | 18 | 1,001.50 |
| 2009 | | 33.9 | 27 | 18.1 | 1,120.09 |
| 2010 | 69.5 | 35.5 | 28.6 | 18.5 | 1,380.00 |
| 2011 | 71.3 | 37.2 | 29.6 | 19.4 | 1,589.66 |
| 2012 | 76.2 | 39.2 | 14.7 | 19.6 | 1,738.00 |

(자료: 6차 인구센서스(2010) 및 쑤저우 통계연보)

1 쑤저우 현지인은 쑤저우의 호구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총인구는 타 지역 이주민을 포함 2 1위안 = 0.163달러

부로부터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시개발 및 외국 자본유치의 노하루를 공업원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우게 되었다. 공업원구의 급성장으로 쑤저우 전 지역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신구로 성장세가 뻗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신구에서는 저렴한 토지 임대료를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하였다(Pereira, 2004b)*. 이러한 경쟁 과열의 명목적 이유뿐 아니라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공업원구는 사업성이 위축되었다(Pereira, 2004b).

주요 내용 및 개발 성과

공업원구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산업단지다. 공업원구가 개발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1994년 7,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10억 달러

가 넘는 금액이 실제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되었고 투자액은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IT 관련 회사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미국계 기업 FASL, AMD Technologies, Solectron Technology, 일본기업 Renesas Semiconductor, Fujitsu Media Devices, 독일기업 Isola Laminate System, 싱가포르 기업 Xpress Multimedia 등이 공업원구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외국기업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총생산(GDP)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쑤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다. 2000년대 초반 연평균 GDP 증가율은 3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20%에 육박하는 연평균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쑤저우의 GDP 규모는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廣州), 선전 다음이었다.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는다.

*

리관유 자서전에도 쑤저우 공업원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었다(Lee, 2000, p.719-724).



공업원구 쓰다이광장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성공적인 외국기업 유치에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reira, 2004b).

첫째는 우수한 기반시설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공업용수 공급 등은 제조업계에 양호한 생산환경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타 도시와 비교해 우수한 기반시설이 보장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Jurong Town Corporation의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토대로 즉시 사용가능한(ready-built) 공장이 제공되어 제조업 운영자의 초기 투자금액을 줄이도록 하였다.

둘째는 인적교육을 통해 싱가포르의 지식과 노하우가 공업원구에 이전되도록 하였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무원들 공업원구로 보내서 교육을 시켰고 공업원구의 공무원도 싱가포르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전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996년까지 거의 50여 개의 기관이 교육프로그램에 관여하였다. 1996년 한 해에만 200명의 중국 공무원이 싱가포르와 쑤저우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은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길게는 두 달까지 지속되었다(Pereira, 2004b). 이러한 인적교육을 통해 공업원구는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인·허가 절차는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르게 부패하지 않은 정부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Pereira, 2004b).

셋째로 정치적인 뒷받침이 공업원구의 안정적 투자유치에 기여하였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공업원구의 성공적 발전을 이끄

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기업도 공업원구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삼성가전, 삼성전자, 신라호텔 등 삼성계열의 회사가 사업 중이다. 삼성가전은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rporation(SSEC)을 1995년 쑤저우에 건립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2009년에는 제2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의 총 노동자는 현재 9,000명이 넘으며 여기서 생산된 가전제품(세탁기 등)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이 될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판매된다. 23명의 주재원이 SSEC에 파견되어 있고, 사무실 직원 약 2,500명과 생산직 근로자 약 6,500명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 매월 50여 명의 단기 출장자들이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여 근무하고 있다*.

공업원구의 성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이 성장을 통해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쑤저우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농촌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도시다(新聞中心 2012.3.14.). 옆의 통계치로 계산하면 이주민의 비율은 거의 50%에 이른다.

공업원구의 공간계획

공업원구의 공간 구성은 진지후를 중심으로 한 경제중심, 두슈후를 중심으로 한 R&D 중심으로 크게 나뉜다. 이와 더불어 동쪽에는 수출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수출가공구가 위치하고 있다.

*

SSEC 와의 인터뷰(2013.12월)



두슈후 고등교육지구의 Xianjiaotong-Liverpool 대학

진지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외국기업의 자사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고층 오피스빌딩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싱가포르 합작구는 공업원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백화점, 대규모 쇼핑센터, 고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진지후 서측의 중앙상업지구(98.7ha), 진지후 동측의 상업 및 문화지구(207.7ha), 공공행정지구(179.6ha), 진지후를 에워싼 호수지구(476.9ha)로 구성되어 있다(SIP, 2013). 그림 2에서 보이는 아치형 건물은 중앙상업지구에 위치한 '동팡즈먼(東方之門)'이다. 이 랜드마크 건물은 301.8m(88층) 높이며,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쇼핑센터, 고급 호텔, 사무공간, 호텔형 아파트, 레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이다(동팡즈먼 홈페이지).

호수지구에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저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쑤저우 문화예술센터는 2007년 개장하여 극장·예술박물관·문화센터·문화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있다(쑤저우 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상업문화구에는 복합단지개발 '스다이광장(時代廣場, Time Square)'을 중심으로 오피스 건물과 고급 백화점, 호텔, 고급 식당가 등이 집중되어 있다. 약 500m 길이의 스크린을 공중에 설치하여 새로운 도시 경

관을 창출하였다. 공공행정지구에는 공업원구의 행정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두슈후 주변에는 고등교육지구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현재 26개의 R&D 기관, 대학, 대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다(쑤저우 두슈후 과학 및 교육혁신지구 홈페이지). 런민대학(人民大學), 쑤저우 대학 캠퍼스 등 중국 대학뿐 아니라 HKU Space Global College, Suzhou-Oxford University Research Centre, Xianjiaotong-Liverpool 대학 등 국제 대학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두슈후 고등교육지구는 25km²에 이르며 미래 10만 명의 대학생을 포함한 총 4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7만 5,000명의 대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약 5,000명의 교수진이 이 교육지구에 근무하고 있다(공업원구 홈페이지). 이곳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한 예로 2013년 새로 완공된 기숙사에 프랑스 학생 4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피할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원구의 수출가공구는 공업원구 동편 끝에 있으며, 200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에 1차 단계 완공 후 2004년에 2차 완공

* 거주자와의 인터뷰(2014, 2)

되었다. 총 2.9km²의 규모다(<http://www.changku.com.cn/gyyq/plan.asp?id=966>). 수출가공구에서는 신속한 세관통과를 지원하며 향상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Maxtor, Black & Decker, Mercury, 삼성가전 등 다양한 수출관련 기업을 유치하였다.

한계 및 시사점

현재까지 공업원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성장 속도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존재한다.

첫째, 국제화를 통해 도시가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적 접근성은 떨어진다. 가장 가까운 상하이 훙차오 공항이 70-80km 떨어져 있다. 훙차오 공항에는 국제선이 존재하지만 운행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 상하이 푸둥 공항은 130km나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도시 내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다. 현재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쑤저우에서 운행 중이며 1개의 노선만이 공업원구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다. 버스가 주요 대중교통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8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뒷받침하는 데는 버스 운행만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대중교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3호선, 5호선, 6호선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지하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역 주변은 주위 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이 주요 거점을 통과하며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주요 거점임에도 간과된 지역이 많다.

셋째, 싱가포르와의 협력에 의해 계획되고 건설되어 현대식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도시 운영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전용 도로는 존재하지만 차량이 우선시 된다. 심지어 차량의 신호와 보행자의 신호가 동시에 적용되어 보행자는 녹색 신호등에서도 차량을 주의하며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이는 보행 안전에 치명적이며,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통해 성장하려는 공업원구에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또 신규 투자에 의해 새 건물들이 빠른 속도로 완공되고 있으나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품질이 떨어진다. 단열재가 건물에 사용되지 않아 냉·난방 수요가 많으며 새로 완공된 건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은 공업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역에 해당한다.

공업원구는 1990년대 초반 개발을 시작하여 2000년대 급격한 성장 단계를 거쳐 지금도 성장 중이다. 공업원구는 국제화에 의한 도시개발의 사례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토지 임대료도 초반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인건비와 토지사용료 장점뿐 아니라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립, 성장에까지 국제적 협력이 크게 기여하였다. 공업원구의 개발 모형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도시 개발 모형에 해당한다. 금융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국제화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IT 관련 제조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들에 유리한 기업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상하이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공업원구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제화는 21세기 도시개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요인임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 1 Lee, K. Y., *From Third World To First: The Singapore Story: 1965-2000*, Marshall Cavendish, 2000.
- 2 Pereira, A., *State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China*, RoutledgeCurzon, 2003.
- 3 Pereira, A., "State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Singapore's industrial parks in Batam and Suzhou",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6: 129-144, 2004a.
- 4 Pereira, A., "The Suzhou Industrial Park Experiment: the case of China-Singapore government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 173-193, 2004b.
- 5 SIP, "苏州工业园区环金鸡湖及独墅湖规划建设基本情况" 내부문서(2013. 10. 30., SIPDRI/XJTLU 발표자료), 2013.
- 6 时匡, 刘浩, 林俊杰, 『新城规划与实践-苏州工业园区例证』,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12.
- 7 리관유, 『리관유 자서전』, 2000.
- 8 新闻中心, "苏州人口1300万已成全国第二大移民城市", 2013. 3. 14. (<http://news.sina.com.cn/c/2012-03-14/025424109902.shtml>)
- 9 쑤저우 문화예술 센터 홈페이지 (<http://eng.sscac.com.cn>)
- 10 쑤저우 두슈후 과학 및 교육 혁신 지구 홈페이지 (<http://www.seid.gov.cn>)
- 11 공업원구 홈페이지 (http://www.sipac.gov.cn/ggxx/201001/t20100113_105175.htm)
- 12 苏州工业园区出口加工区 (<http://www.changku.com.cn/gyyq/plan.asp?id=966>)
- 13 동팡즈먼 홈페이지 (<http://dfzm.cn/index.asp>)
- 14 쑤저우 공업원구 도시계획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2013.10.
- 15 SSEC와의 인터뷰, 2013.12.
- 16 거주자와의 인터뷰, 2014. 2.

동일본대지진 후 가설주택의 건설현황 및 복구계획

박성원
도쿄대학교 건축학 박사과정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상황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 해저 24km에서 모멘트 규모(MMS, Moment Magnitude Scale) 9.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국토교통성 기상청, 2011). 일명 동일본대지진이다. 동일본대지진은 세계적으로는 4번째, 일본 국내 관측사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 진앙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사망: 1만 8,703명, 행방불명: 2,674명, 부상: 6,220명), 재산피해(소실·부분파손: 약 40만 동, 침수: 약 1만 3,500동), 그리고 화재(약 330건)가 발생하였다. 또한 동북지역 이외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영향을 미쳐 건물 파손, 교통대란, 정전 등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대지진으로 인한 큰 해일이 동북부 연안 지방에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약 6만 1,355명이 피난생활을 하기도 하였다(소방청 재해대책본부, 2013).

본고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규모가 컸던 이와테 현 오쓰치(大槌)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가설주택(이하, 가설주택)의 특징과 부지선정 과정,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동향을 파악해 본다. 또한 가설주택의 현지답사와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생활상을 살펴본다.

응급가설주택의 건설 및 입주자격

일본 정부는 피난 생활자들을 위해 단시간에 대량으로 건설이 가능한 가설주택을 제공하였다.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이와테 현과 미야기 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만 3,537호가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성 주택국, 2013). 가설주택은 재해구조법을 근거로 하여 건설된다. 또한 제공기간은 원칙상 2년으로(2년 경과 후 1년씩 연장 가능, 후생노동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용지에 건설된다.

재해구조법(災害救助法)*

제1조 이 법률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지방공공단체, 일본 적십자, 그 밖의 단체, 그리고 국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응급상황 시 필요한 구조 활동을 하여 재해자 보호와 사회 질서의 보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4조 구조의 종류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

災害救助法, P1, 1947年 10月 18日 法律第118号.
(最終改定: 2013年6月21日法律第54号)



이와테현 가마이시 지역 연안의 피해 현장



이와테현 오쓰치 가설주택



이와테현 도노시 물자 지원센터

1. 피난소 및 응급가설주택의 제공,
2. 피복 · 침구 등 기타 생활필수품을 제공
- … (이하 생략)

위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가설주택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일정기간 임시로 제공하는 것으로, 재해자의 거주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물이다. 또한 피복 · 침구 등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재해구조법에 근거하여 가설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거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자로, 자격으로 새로운 주택 확보가 불가능한 가구이어야 한다.^{※※}

이와테 현 오쓰치의 가설주택 건설

오쓰치 지역은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주택지와 시가지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구역이 침수되어 지역 주민의 약 8%가 희생되고 오쓰치의 장(町長)을 비롯하여 행정 간부의 과반수가 해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용도가 지정된 시가지의 60% 이상이 침수 · 파괴되었다. 그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휘 역할을 하는 구청(役所), 학교, 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파괴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쓰치 지역의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약 1,280명, 파손된 가옥은 약 3,800채다(소방청 재해대책본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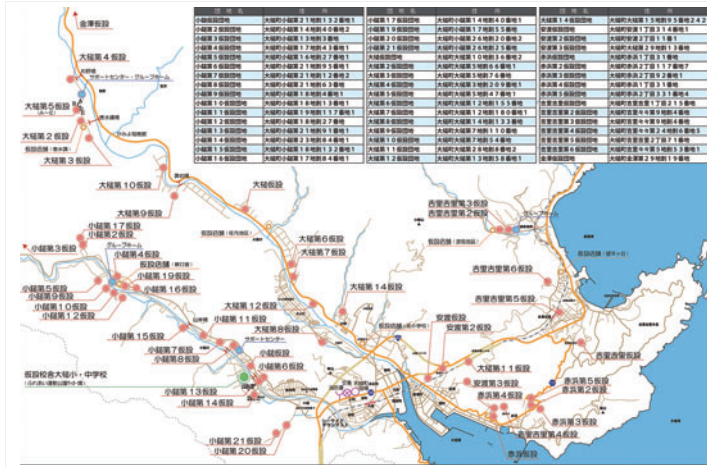
이와테현 오쓰치 피해지역의 항공사진(자료: 일본 국토지리원, 2011.6)



이와테현 오쓰치 침수구역(자료: 일본 국토지리원, 2011.12)

※※

応急仮設住宅の設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赤十字社:東京都, 2008.6, pp.8-10.



이와테현 오쓰치 가설주택 지도(자료: 大槌町役場被被害者支援室, 2014.01)



이와테현 오쓰치 가설주택 배치도

가설주택의 부지 선정

가설주택은 재해 지역의 정부기관(都道府県、市区町村)이 보유하고 있는 ‘재해 시 활용 가능한 건설 용지’ 중에서 해당 용지의 피해 유무를 조사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설 용지로 선정된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 공유지, 국유지, 민유지를 기본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이 용지는 기본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생활환경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보건위생, 치안, 재해, 통학 등).*

오쓰치 지역 역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지 선정이 이루어져 48지구에 2,276호가 대지진 이후 5개월 만에 건설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변의 부지 환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논·밭, 산 중턱, 주택지, 운동장의 네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오쓰치 지역의 가설주택은 해일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대가 높

가설주택의 건설 입지비율

| | 논·밭 | 산 중턱 | 주택지 | 운동장 |
|--------|---------|---------|---------|--------|
| 건설지구 수 | 25 | 11 | 9 | 4 |
| (%) | (51.0%) | (11.0%) | (18.4%) | (8.2%) |

*

応急仮設住宅の設置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赤十字社:東京都, 2008.6, p31-32.

東京大学大学院 建築学専攻 建築計画研究室,
応急仮設住宅 外観視観調査, 2011~2014.

深井祐敏, 朴晟源, 大月敏雄, 西出和彦 他:
仮設住宅の南窓周辺の活用に関する研究—仮設住宅団地における外部空間活用に関する研究(その2)—,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2013. 8, pp.17~20.

은 지역의 논·밭 용지에 전체 가설주택의 반 이상이 건설되었다. 또한 평탄한 건설 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높은 지대 중 비교적 용지 정비의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곳을 선정, 가설주택을 건설하였다. 학교 운동장과 야구장 용지를 이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설주택의 인구구성비율 및 서비스 종류

가설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비율은 약 43%다. 그에 반해 15세 미만 아이들의 비율은 10% 정도다. 또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14%, 고령자 세대는 10%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생활하기 불편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현지답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시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설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점포 서비스가 있어 식재료와 생활용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고령자 전용 택시 운영’ ‘방문 케어 서비스’ ‘이동도서관 서비스’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오쓰치의 가설주택 거주자의 생활상 및 복구계획

도쿄대학교 건축계획 연구실에서는 2011년 9월부터 가설주택의 주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창문(자료: 東京大学 建築計画研究室, 2013.01)



출입이 불가능한 형태의 창문(자료: 東京大学 建築計画研究室, 2013.01)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반년 단위)으로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환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가설주택 방문 서비스 단체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설주택 관측조사를 통한 거주자의 생활 모습

가설주택의 외관 관측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중 하나는 각 가구마다 증개축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설주택 생활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 가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조사(2011~2014년)로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증개축 행위가 일정한 흐름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증개축 행위를 처음 한 가구(선구자 역할)가 표본이 되어 주변 가구로 증개축 행위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선구자 역할이 된 증개축 형태가 모방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거실의 창문 형태에 따라 외부공간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출입이 가능한 베란다 형태의 창문이 외부공간의 사용에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판이나 창고의 설치 사례가 많이 보였고, 화단을 가꾸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반면 출입이 불가능한 창문의 외부공간은 사용빈도가 낮아, 창문의 형태에 따라 생활상이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에 의한 화단 설치 사례가 많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화단

은 거주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간으로, 개인 영역 설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배치 형태는 아스팔트 포장, 방풍실, 현관 앞 계단 등 주변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화단의 배치 형태를 통해 거주자가 인식하는 공용공간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화단설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공용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현관 앞과 방풍실 주변,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화단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보여 개인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설주택의 주차 행위는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이외에 주동과 주차장의 거리가 먼 경우 건물의 주동 주변, 주변 시설(특히 정화조, 급수조, 펜스, 입구 주변) 등에 의하여 불법주차 행위가 유도되어 주차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불법주차 장소가 고착화되어 암묵적으로 주차 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거주자끼리의 합의하에 지정주차를 실시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가설주택 단지의 규모가 외부 서비스 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규모가 작은 가설주택은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 여러 서비스 단체가 활동 대상 외 지역으로 하고 있었으며 대형 차량의 경우 주정차 공간 확보(가설주택 내 공간 부족)가 어려워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 金沢敏, 芦澤健介, 大月敏雄, 西出和彦 他: 仮設住宅棟間における舗装状況による植栽設置について—仮設住宅団地における外部空間活用に関する研究(その3)—,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2013. 8, pp.13~16.

*** 朴晟源, 篠本快, 大月敏雄 他: 指定区画外駐車を誘発・抑制する諸要素について—仮設住宅団地における駐車スペースに関する研究(その二)—, 都市住宅学会, 第79号, 第20回学術特別講演会研究発表論文集・梗概集, 2012.10, pp.122~126.

*** 朴晟源, 篠本快: 오쓰치 지역의 서비스 업체와의 인터뷰 조사, 2014.01.

오쓰치 지역의 복구 계획의 개요

오쓰치 지역은 이번 대지진·해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해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 조사 결과와 오쓰치 지역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성에서 피해 상황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해일에 대한 주민의 위험 의식이 낮았고, 적절한 피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명 피해가 집중되고, 계획된 피난 장소와 피난 경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피난 시설의 배치와 재해정보 발신의 고도화를 계획하여 고령자와 어업 종사자, 관광객 등을 포함한 전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이번 해일로 피해를 입은 구역 이외의 높은 지대에 주택지 등을 계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높은 지대에 주택지 모두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침수구역에 흙을 쌓아〔盛土〕지대를 높여 안전성을 확보한 택지로 활용하기도 한다.*

시사점

일본은 민·관·군이 연계하여 뛰어난 재해 대책 능력으로 빠르게 재해 지역의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피난 생활자들을 위한 가설주택을 건설하였다. 특히 과거 대지진의 사례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한 결과, 현재는 기본적인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기본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지역 커뮤니티도 고려하여 계획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부터 가설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가설주택의 짧은 공사기간과 그와 연계된 적절한 대책 시스템을 알고 난 후 가설주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응급가설주택’은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

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응급’ 또는 ‘가설’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다. 임시 수용시설과 주택의 중간쯤으로 생각하여야 할까, 몇 년간 또는 평생 생활 가능한 하나의 주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어떠한 환경일까. 무엇이 있어야,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명의 발전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은 점차 높아졌다. 화장실·욕실·주방·거실 등 공간 분리의 개념이 생겨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하여 공기 정화 시스템과 조명 등이 발명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또는 현재 이러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했거나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쾌적한 주거환경이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어떠한 사람은 ‘쾌적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가치관 따라 ‘쾌적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는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오래도록 즐겁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쾌적함’의 기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일본의 가설주택은 명확한 주거 평가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의 가설주택의 계획 및 유지·관리의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시설의 환경평가에 대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 자료와 사례들은 향후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공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살 수 있는 공간인지,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인지도 판단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본 연구는 도쿄대학교 교령사회 종합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보조금·기반연구A와 RISTEX(社会技術研究開発センター)의 ‘가설주택 커뮤니티로 만드는 새로운 교령사회의 디자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大槌町東日本大震災津波復興計画 基本計画, 岩手県大槌町:岩手県大槌町, 2011.12, p10~19

**

山口孝夫:有人宇宙システムにおける居住快適性に関する基本概念, MERA Journal, Vol.4 No.1&2, 1998.2

파리 프티 생튀르 폐철도 부지의 재정비

권인석

파리 라브레트건축대학·파리1대학 연합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파리시와 프랑스 철도청이 주도한 프티 생튀르 산책로 조성사업은 역사적 유산이며 녹지가 풍부한 프티 생튀르의 인근 시민들에게 일 상에서 자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또한 폐철도의 환경재정비를 통해 친근한 공간을 조성 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는 파리시 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폐철도 사용 및 생태적 도시 경관을 위한 녹지축으로서의 가치 부여

현재 총 32km의 프티 생튀르 철도는 파리 수도권의 철도교통으로 부 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뤼에트와 클리시 구간은 RER C가 1988년부터 사용 중이다. 파리시정도시연구원은 18구 일부 구간과 12구의 뱅 센지구에 트램 T8선 연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의 접근성을 개선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 프티 생튀르의 재정비 사업은 대중교통로인 철도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13·14·15구에 이미 설치 된 산책로와의 연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폐철도의 다양한 활용 방법 을 강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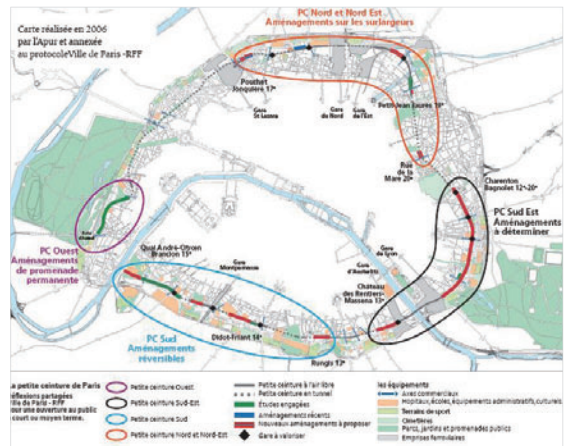
프티 생튀르의 생성 배경

파리시 외곽순환도로(Boulevards des Maréchaux)에 근접한 프티 생 튀르는 1934년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지난 68년 동 안 사용되지 않은 철도다.

프티 생튀르는 1850년경 만들어졌다. 당시 철도망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및 산업수송으로 이용하던 여러 철도 회사들은 철도망의 통합을 필요로 하였다. 또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도 있었으며, 철도를 정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국가사업이 기도 하였다. 이것이 프티 생튀르가 놓인 시대적 배경이다.

프티 생튀르 보존협회장인 장 에마누엘은 이 폐철도가 주민들의

프티 생튀르에 관련된 파리의 도시사업



(자료: 파리시정도시연구원(APUR), 프티 생튀르를 이용한 사업 타당성 연구, Etude prospective sur le devenir de la petite ceinture 2012.)

교통수단으로 재사용되기를 원한다. 파리시 역시 녹지축, 근접성, 문 화유산, 교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산책길 조성 사업의 배경

1934년 이후 사용이 전무하던 32km의 철로를 주민들의 요구로 파리 트램 사업과 연계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주거지와 근접해 소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어 사업지 후보로만 선정됐을 뿐 더 이상 진척되 지는 않았다.

이에 프티 생튀르의 소유자인 철도청(Réseau Ferré de France)은 파리시와 철로의 재사용을 위한 사업을 2000년부터 협의하였으 며, 2013년에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녹지 조성 등 철도 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프티 생

튀르 산책로는 현존하는 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연 녹지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가로등 같은 시설물 설치에 제한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저녁에는 개방이 제한된다. 현재 3구간(15구와 16구, 12구 일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

15구 구간의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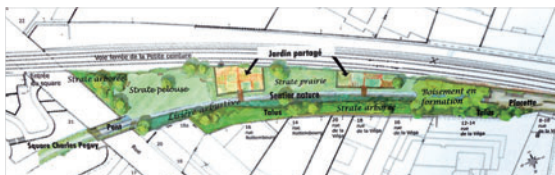
(자료: www.paris.fr)

16구 구간의 마스터플랜



(자료: www.paris.fr)

12구 구간의 마스터플랜



(자료: www.paris.fr)

a. 15구 구간(15e arrondissement)

15구에서는 처음으로 900m 구간을 대중에게 개방(2013년 8월 24일)하였으며, 정원축제 때 500m를 추가 개방(2013년 9월 21일)하여 현재 총 1.3km(총면적 3.5ha)의 산책로가 만들어졌다. 조르주 브라상 공원과 시트로앵 공원을 연결하여 파리의 녹지축을 조성하였다. 특히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적 재정비를 하였다.

b. 16구 구간(16e arrondissement)

총 1.5km인 16구[오퇴유~뮈에트(la porte d'Auteuil et la porte de la Muette)] 구간은 블로뉴 숲과 인접하여 자연적인 녹지 조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덕에 다양한 산림을 접할 수 있다.

c. 12구 구간(12e arrondissement)

12구 구간은 샤를 페기 지구에 있는 기존 녹지 정원과의 연결 및 주말 농장과 공공 산책로로 재정비하였다. 총 200m 구간인 이 산책로는 잔디, 화분, 식물 등 3단계의 높이로 재정비하였다. 이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 또는 분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연 생태 중심 개발을 통한 파리의 미래상 설립

파리시와 프랑스 철도청의 주관으로 2015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프티 생튀르 사업지의 나머지 구간 재정비 방향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파리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녹지의 보전'과 '도심 온도 유지' 등 자연생태계를 축으로 한 파리 수도권 기본계획에 맞는 프티 생튀르 재정비 사업이 되도록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



산책길로 조성된 프티 생튀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임강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의 추진 배경 및 목표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작성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실천을 위해 기존의 사회·물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작년 6월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를 열어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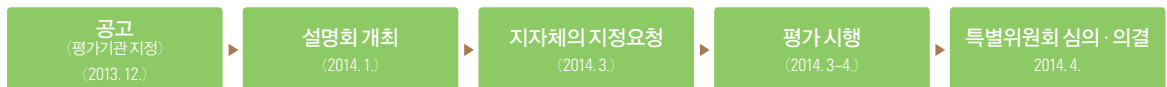
특히 국토부는 12월 말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동시에 2014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은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43억 원이 반영되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와 관련해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9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평가주관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의의, 공모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도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해외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사전설명회에는 300명이 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건축·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별도로 실시한 사전수요조사 결과 약 120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공모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경쟁이 예상되었다.

사전설명회 개최 이후 국토부는 평가주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사전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지난 1월 13일 공모지침을 공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선도지역 공모의 원활한 접수와 진행을 위해 연구소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 추진 일정계획



*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제1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위원회임.

***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사업구상(안)의 적정성, 지역 쇠퇴도, 지자체 추진역량 등을 전문가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평가하여 지정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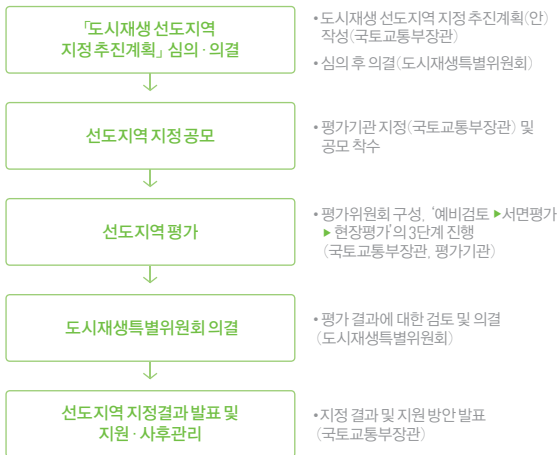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전설명회

운영하여 사전설명회 자료 및 공모지침, 공지사향 등을 게시하고, 질의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답변을 게시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와 함께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고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4년 국정과제 핵심과제인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실천계획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 예산 및 사업을 연계하는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주민 소통,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 발굴을 당부하였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평가시행 및 지정절차



*

전략계획수립권자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구청장 및 군수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통해 제출이 가능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유형별로 1곳 요청 가능하며, 도시경제기반형은 1곳, 근린재생형은 관할 구역 내 군·구당 1곳 요청 가능함(관할 구역 내 구(區)가 5개인 광역시장이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 5곳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를 공문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관련 부처, 학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평가위원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전문분야·지역 등을 고려하고,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명 이내로 정함.

서면평가(70%), 현지평가(30%) 및 가점사항(총점의 3%이내) 등을 토대로 2014년 선도지역 지정안을 마련함.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방법 및 평가방법·절차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인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이 제출할 수 있으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출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구상안의 평가시행을 위해 평가주관기관과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공모접수 이후 평가주관기관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서류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유형별로 선도지역 지정개수의 2배수 내외로 선정하며, 서면 평가에서 선정된 지역을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벌이고

최종안을 마련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유형 및 지원 내용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와 달리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유형



* 예로 노후산업단, 항만 및 배후지, 역세권, 공공청사·군부대·학교 등 이전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등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재생하여 도시전반 경제 활력의 앵커로 활용될 시설

**** 소규모 사업의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여 총 지원금액 범위에서 추가로 선도지역을 선정할 수 있음.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등을 통한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총사업비 250억 원, 근린재생형 총사업비 1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요청할 경우 국비지원비율 60%로 상향 가능함.

형 9곳 등 모두 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은 매칭펀드 방식(국가 50%, 지자체 50%)으로 총 4년간 도시경제기반형 1곳당 500억 원(국비 250억 원), 근린재생형 1곳당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이하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은 매년 성과 평가에 따라 지원시기와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요 평가항목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시 모든 유형에서 사업적정성,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파급효과 등을 공통분야로 평가한다. 그 외에 도시경제기반형은 해당 도시의 경제회복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경제거점화 가능성'을, 근린재생형은 지역의 쇠퇴도와 함께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형성을 위해 기존 공동체 보존·활용과 해당 지자체 내 유사 사업 추진실적 보유여부 및 성공적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특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안) 작성 내용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할 지자체는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경제기반형은 주로 경제 거점화를 위한 핵심시설 재생 및 배후 지역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근린재생형

노후·불량 주거지 환경 개선 및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공동체 중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지역

**** 2014년에 집행된 지원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로 도시경제기반형 1곳당 2억 5,000억 원, 근린재생형 1곳당 9,000만 원을 선정된 지역에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2014년에 책정된 총 지원금액 28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도시경제기반형 1곳당 50억 원, 근린재생형 1곳당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완성도 등에 따라 지원시기와 2014년 사업비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될 수 있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요 평가항목

도시경제기반형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규모 · 비용 · 기간 등 사업내용의 현실성 등 세부사업 간 기능적 · 내용적 연계의 적절성 등 단계적 · 점진적 사업추진방식 채택 여부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노력 | 25 |
| 주민 · 지자체의 추진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적정성 및 운영실적의 우수성 등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체계 구축 등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실적과 계획 지방비 등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 | 30 |
| 사업의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정성 건강한 주민생활 영위를 위한 쾌적성 · 편리성 등 제고 효과 해당 도시의 경제회복 효과 | 35 |
| 경제거점화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문화 · 관광자산 등 핵심시설 재생 및 배후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성 등 | 10 |

근린재생형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규모 · 비용 · 기간 등 사업내용의 현실성 등 세부사업 간 기능적 · 내용적 연계의 적정성 등 단계적 · 점진적 사업추진방식 채택 여부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 노력 기존 공동체 보존 · 활용을 위한 구상 | 25 |
| 주민 · 지자체의 추진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적정성 및 운영실적의 우수성 등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체계 구축 등 해당 지자체 내 유사 사업 추진 실적 보유 여부 및 성공적 수행 정도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실적과 계획 지방비 등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 | 35 |
| 사업의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적정성 건강한 주민생활 영위를 위한 쾌적성 · 편리성 등 제고 효과 | 30 |
| 지역의 쇠퇴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등 주요 지표상 쇠퇴 정도 | 10 |

〈가점〉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총점의 최대 3% 이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
 〈현장평가〉 주민 · 지자체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 정확성 등을 중점 평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안) 작성 내용

도시경제기반형

| 목차 | 주요 내용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기본방향 공간적 범위 |
| 대상지역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일반현황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대상지 특징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경제 거점화를 위한 핵심시설 재생 및 배후 지역과의 연계방안 단계별 · 연차별 추진계획 전체 사업 구상도 |
| 추진체계 및 실행 · 관리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축 · 운영 방안 주민조직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현황 및 계획 재원조달 방안 |
|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시설사업의 경제적 효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
| 의견수렴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 지방의회 의견 요약 및 조치계획 |

근린재생형

| 목차 | 주요 내용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기본방향 공간적 범위 |
| 대상지역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일반현황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대상지 특징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근린재생을 위한 개별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방안 단계별 · 연차별 추진계획 전체 사업 구상도 |
| 추진체계 및 실행 · 관리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축 · 운영 방안 주민조직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현황 및 계획 재원조달 방안 |
|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 |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 |
| 의견수렴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 지방의회 의견 요약 및 조치계획 |

은 근린재생을 위한 개별사업 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파급효과로 도시경제기반형은 핵심시설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근린재생형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이후 계획 및 기대효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원·모니터링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선도지역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선정 등의 관련 업무는 물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예산집행·사업시행·운영관리 등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종합·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형에 대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주변지역과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3. 7. 4.
-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26일 국무회의 통과 - 2013. 11.26.
-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2013. 12. 16.
-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2014. 1. 9.
-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집중투자 - 2014. 01. 14.
-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행복주택, 연계·융합형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2014. 1. 24.
-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활용될 기법과 모델 제시 -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도시재생 네트워크 확대 발족 - 2014. 2. 21.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추진 배경

서울시는 1995년 민선시장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 등의 공원녹지정책을 수립하고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공원, 중랑캠핑숲, 푸른수목원 등 대규모 공원 조성에 힘써 왔다. 생활권 내에서는 꾸준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어린이공원과 문화공원 등이 조성되었으며, 주거지나 가로변에 자투리 녹화와 띠녹지 조성 등 한정된 서울시 공간에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공원녹지는 서울시 면적의 약 30%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그랑프로제’의 사례처럼 젊은 실험주의자를 모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의 당부 말씀에 따라 퍼블릭 스페이스(Public Space :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장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2012년 12월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공원혁신분과 24인, 공간조경분과 19인)이 구성되었다.

공공조경가 그룹에서는 이제까지의 공원녹지정책이 주로 물리적 공간조성 위주에 치우치고 소극적 관리차원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선언을 작성하였다. 이는 공원녹지 관점에서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중기·단기전략을 담기 위함이었다. 선언 작성을 위해 공공조경가 8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9회)하면서 6개 공원에서 547명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한편 Daum 아고라와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340여명의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4월 1일 ‘푸른도시선언’을 선포하였다.

1개의 전문과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푸른도시선언’의 전문은 “모든 생명은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서울은 그 아름다운 공존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고 가꾸고 지켜 나가는 시민 중심의 공원도시! 삶을 재충전하는 발전소, 이웃들이 소통하는 사랑방, 그 리하여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의 도시! 이제 서울이 건강한 푸른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로 하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푸른도시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도시와 자연이 상생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9개 조문에서는 산과 강 등 서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강화하여 공원녹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 권리를 가지며 공원의 주인임을 알려 시민의 권리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푸른도시선언’이 값진 이유는 선언문 수립 과정에 전문가, 시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직접 만들어 냈다는 데에 있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비전과 정신

이러한 ‘푸른도시선언’을 구체화하는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워크숍 2회, 시민·직원 아이디어 공모 35건, 9인의 공공조경가 실무위원회 18회, 공공조경가 그룹 전체 워크숍, 자치구·사업소 등 실무자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3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서울의 공원녹지 패러다임이 대규모 부지에 새로 만드는 하드웨어적 특정공간 중심의 개념에서 가로, 골목길, 광장, 유수지, 옥상까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공원도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차가운 콘크리트의 도시 서울’이 아닌 ‘꽃 피고 새 우는 도시 서울’ 전체를 공원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공원녹지 혜택을 누리고, 공

원 속의 도시를 실현하는 ‘공원도시 서울’ 비전을 수립하였다.

‘공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정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 부서 간과 유관단체의 협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협력’에 있다. 협력은 참여주체의 확산을 통해 버려진 골목 한 귀퉁이, 방치된 지하보도와 건물의 옥상 등 도시 속에 숨은 공간들을 찾아내 초록이 물들고 녹음이 우거지게 하여 사람이 모이게 되고 지역사회에 애정이 생기는 이웃 간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은 ①녹색문화 확산 ②공간가치 증대 ③공원운영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에 대하여 21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일상에서 평생까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10분 공원 프로젝트, 365녹색복지, 푸른일자리 창출을 추진목표로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창의적 접근을 통한 공간가치 증대 전략’을 위해 정원문화, 도시재생, 역사문화, 생물다양성을 추진목표로 7개 과

제를 선정하였다.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운영 혁신 전략’을 위해 시민참여, 공원운영혁신,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목표로 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전략1. 일상에서 평생까지 녹색문화 확산(10개 과제)

평생 녹색복지서비스의 기준이 생기고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푸른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전략이다. 10분 공원 프로젝트는 공원의 개념을 산, 하천, 가로, 광장, 골목길, 옥상 등으로 확장하여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1-1. 가로정원 프로젝트

우선 서울의 가로를 꽃, 나무, 쉼터와 사람이 어울리는 쾌적한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 삼일대로 600m(교동초교~안국역, 기업은행~청계천)와 테헤란로 1,400m(역삼역~선릉역)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돈화문로(3호선 종로3가역)에 감나무거리 770m, 율곡로(경복궁사거리 주변) 사과나무거리 80m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양도성(안)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 중 우정국로 740m(안국동사거리~광교)의 차로를 축소해 보도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등 비움과 집중을 통해 가로 특성에 맞는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1-2.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정착

‘서울, 꽃으로 피다’ 슬로건은 단순히 보도에 꽃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시민 주도로 서울 전체가 아름다운 꽃의 도시, 초록의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이다. 2014년에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정착을 위해 중점추진구역을 6분야(아파트, 상가, 학교, 골목길, 동네 빈 땅, 가로변)에서 직장, 어린이집, 주유소를 추가하여 9분야 800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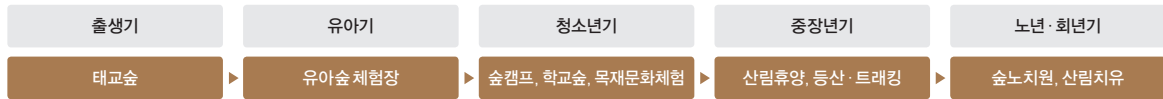
과제1-3. 생활 속 그린 맵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녹색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린 맵(Green map)’을 제작해 앱으로 서비스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시민이 우리 동네 녹화가 잘된 곳, 녹화가 필요한 곳을 ‘그린 맵’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려 한다.

푸른도시선언 3대 전략 21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 추진목표 | 실천과제 |
|---------|-------------------------------|--|
| 녹색문화 확산 | 10분 공원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정원 프로젝트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정착 • 생활 속 그린맵 작성 |
| | 365일 녹색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복지서비스 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조성 •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 공원과 걷자 프로젝트 |
| | 푸른일자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일자리 발굴 및 기반 마련 • 도시정원사 양성 • 공원녹지 산업 육성 |
| 공간가치 증대 | 정원문화 도시재생 역사문화 생물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정원박람회 개최 • 서울둘레길 활성화 및 주변 연결 프로젝트 • 잠깐공원 프로젝트 • 공원역사성회복사업 • 역사가 흐르는 서울공원길 • 생물다양성 플랜 •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
| | 공원운영 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민센터 • 공원문화 큐레이팅 운영 • 공원 커뮤니티 가든 조성·운영 • 유기농 매점과 레스토랑 |

생애주기별 녹색복지서비스



과제1-4. 녹색복지서비스 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생애주기별 녹색복지서비스 기준을 통해 맞춤형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녹색복지의 개념, 기준 및 지표마련과 추진전략을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157km 서울둘레길이 완성되면 지리산 종주처럼 7박8일 종주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과제1-5.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지금까지 서울의 산림과 공원 숲은 단순한 여가·운동 공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멀리 가지 않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녹지를 나이대별로 향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중랑구 용마산 등 6곳에 유아숲체험장, 서대문구 안산공원 등 2곳에 청소년 모험의 숲, 초안산 등 2곳에 치유의 숲, 사색의 공간 100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태교숲, 숲노치원 등도 녹색복지 서비스 기준 연구에서 새로이 정립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1-6.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사업은 공원에서 환경을 배려한 여가활동을 통한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도하는 과제다. 햇빛온풍기나 곡물건조기 등을 만들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삶의 기술 워크숍'을 북서울꿈의숲 등 4곳에 201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목공을 체험해 보는 '희망목공소'도 도봉 등 4곳에서 운영한다.

과제1-7. 공원과 걷자 프로젝트

산과 공원길을 이용자 유형별 시범코스로 선정하고 생활보건과 연계하여 단순한 걷기에서 건강관리와 접목한 걸기로 거듭나는 것으로, 2014년에 북서울꿈의숲 등 4개 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공원에서 건강강좌를 운영한다. 서울숲에 건강증진

센터를 시범운영하여 공원이 시민 건강 증진의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1-8. 푸른일자리 발굴 및 기반 마련

공원녹지 운영의 서비스 기능 확대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2014년에는 공원서비스 유형별 분류작업(역사문화체험형, 자연체험형, 건강관리형 등)과 함께 청년·주부 100명(실고용 9개월)을 '공원놀이지도사'로 양성한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에 따라 유기농푸드판매자, 공원놀이지도사, 공원문화큐레이터, 학교정원관리사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제1-9. 도시정원사 양성

실무능력을 겸비한 도시정원사를 배출해 도시의 정원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서울정원사학교(4개월씩 2회 150명 교육)와 시민조경아카데미(교육 20시간, 연 2회 연 400명 대상)를 진행한다.

과제1-10. 공원녹지 관련산업 육성 지원

공원녹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2014년에 한국조경사회 등 단체·산업체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민간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앞으로 녹색산업 발전 R&D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략2. 창의적 접근을 통한 공간가치 증대(7개 과제)

기존 공원녹지에 정원문화, 도시재생, 역사문화, 생물다양성 4개의 축을 가미해 공간의 가치를 증대하는 전략이다.

과제2-1. 서울형 정원박람회 개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연계된 서울 정원박람회는 서울의 자연 및 문화자원을 살리는 주제나 장소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재생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비엔날레 형식으로 2015년에 첫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제2-2. 서울둘레길 활성화 및 주변 연결 프로젝트

서울둘레길 활성화 및 주변 연결 프로젝트는 둘레길 자연자원과 인근 문화자원의 연계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2014년에 35km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모두 157km의 둘레길이 완성되면 서울둘레길 주변 자원조사와 시범 연결이 이뤄지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리며 전문가 동반 정기 걷기 프로그램이 민간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과제2-3. 잠깐공원 프로젝트

잠깐공원 프로젝트는 경춘선 폐선부지처럼 개발예정부지와 미개발지, 자투리땅 등 공공공간에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받은 작품 설치,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등 창의적 활용을 도모하는 과제다. 2013년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 1곳당 30㎡ 내외의 공간에 시민·전문가팀이 72시간 내 설계와 시공을 하여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상지 전수조사 시행과 잠깐공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과제2-4. 공원역사성 회복사업

남산회현자락, 탑골공원, 사직공원 등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의 재평가를 통해 가치를 회복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공원 내·외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테마를 부여하는 등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또 남산회현자락 3단계 정비를 통해 한양도성을 170m 정비하고, 2만 1,000㎡의 공원을 조성한다.

과제2-5. 역사가 흐르는 서울공원길

서울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 공공공간, 정원을 이어주는 매력적인 길을 선정하고 스토리를 발굴·운영하고자 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서울시 대표공원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하여 코스별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며, 서울공원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과제2-6. 생물다양성 플랜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위해 ‘생물다양성 10개년 계획’ 등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플랜을 수립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시민협력으로 도시생물탐사(Bio blitz)를 진행하고 서식현황 모니터링으로 생태지도를 만들 계획이며, 공원별 상징 생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종량천 등 4개 하천 16곳(74만㎡) 도심 하천변 훼손공간 생태복원, 8곳(5만 6,000㎡)의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누수식 생태보 20곳, 생태적 물순환체계 구축 등 생물서식지 복원 및 녹지축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2-7.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기존 공원을 지역문화가 반영된 특화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을 통해 지역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적 관리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성산공원 등 3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략3.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운영 혁신(4개 과제)

공원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숲, 공원, 자투리 공간을 관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시민협력으로 공원 운영을 혁신하는 전략이다.

과제3-1. 공원시민센터

올해 서울숲에 시민참여활동의 기반이자 거점 역할을 할 ‘공원시민센터’를 시범 설치해 시민들의 공원활동, 지역커뮤니티를 지원한다. 향후 북서울꿈의숲, 푸른수목원 등 권역별 주요 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제3-2. 공원문화큐레이터 운영

공원문화큐레이터는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가의 상상력과 시민의 창의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문화·예술·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조사해 스토리를 발굴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예술을 주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은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즉석에서 구매도 하는 축제형 아트마켓 ‘선유도 거리예술장터’, 시민이 기증한 중고 피아노가 공원으로 나오는 이색 ‘달려라 피아노 프로젝트’, 애플 없는 언플러그드 뮤직 페스티벌인 ‘전신마취 음악축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과제3-3. 공원커뮤니티 가든 조성 운영

도시 텃밭에서 시민들이 함께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나눔과 서로 도우는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은평구 갈현공원에 도시농업체험원을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기농산물의 수확과 일일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제3-4. 유기농 매점과 레스토랑

서울의 공원에서 친환경적인 푸드 판매 매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적어도 공원에서만은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유기농을 먹는다'는 목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에는 공원 내에 1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직거래 농산물 장터를 주기적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80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4년에는 191억 8천 7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의의 및 향후계획

서울시는 푸른도시선언과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으로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시민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공원으로 느끼도록 공원의 개념을 확대하고 태교에서 평생까지 생애주기별로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이 녹색복지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원녹지가 갖는 가치,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각종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로 공원녹지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공원놀이지도사 등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시민·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시민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 등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은 추진 슬로건을 '우리는 초록특별시에 산다'로 정하고 전략계획의 실천을 통해 서울특별시를 초록특별시로 이미지화하고자 한다. 공원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개인의 삶을 바꿔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서울시의 자연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지속적인 도시, 초록특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앞으로도 시민·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역문화진흥에의 노력은 2013년 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역의 문화융성을 원하는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문화적 의지가 담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에 이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3대 기본법이 완성된 것이다.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에 기반하는 도시적 사회공동체가 더욱 용이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법에 반영된 문화도시의 실질적인 조성은 과거 대규모 재

정이 수반되는 시설 건립, 경관조성 등 하드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던 역사문화도시 조성과는 달리 인프라 구축은 최소화하고 도시 내부의 문화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게 되는 형태의 사업이다. 과거의 문화도시 사업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의 하향식 사업이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문화도시 사업과 병행하여 이미 추진 중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평가를 통한 리모델링 작업도 이뤄진다.

문화도시 조항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으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각 요소 간의 관계회복에 있어 문화의 매개적 작용을 중요하게 인식한 점도 있지만, 17·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 도시별 특별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 형태의 문화도시

역사·전통문화도시사업 추진현황

| 구분 | 경주 역사문화도시 | | | 전주 전통문화도시 | |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 | |
|----------|--|-----|------------------|--|-----|---------------|---|-----|---------------|
| 비전 | 1,000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 | |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 | |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 | |
| 기간 | 2006~2035(30년) | | | 2007~2026(20년) | | | 2009~2030(22년) | | |
| 예산 | 3조 | 국 비 | 1조 7,662억 원(53%) | 1조 | 국 비 | 4,112억 원(24%) | 1조 | 국 비 | 4,001억 원(32%) |
| | 3,533억 원 | 지방비 | 1조 1,799억 원(35%) | 7,109억 원 | 지방비 | 9,333억 원(55%) | 2,577억 원 | 지방비 | 5,019억 원(40%) |
| | | 민 자 | 4,072억 원(12%) | | 민 자 | 3,564억 원(21%) | | 민 자 | 3,557억 원(28%) |
| 사업 내용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 | | 한식·한옥·한지·관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계승·활용,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 | |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57개 사업) | | |
| 국비 지원 | 222억 5,000만 원 (2006~2009년 매년 40억 원, 2010년 62.억 5,000만 원) | | | 190억 원 (2006~2008년 각각 30억 원, 2009~2010년 각각 50억 원) | | | 90억 원 (2008년 10억 원, 2009~2010년 각각 40억 원) | | |

관련 규정이 필요해진 점도 작용하였다(17대 국회에서 7개 법안, 18대 국회에서 2개 법안 발의 후 회기 종료로 폐기).

한편 문화도시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마을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은 성격의 차이이기보다는 문화도시가 시·군·구 단위라면 문화마을은 읍·면·동·리 단위라는 규모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성격과 특색을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문화에 적합한 지역문화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이 사업의 공통점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치 확보, 지역 고유의 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문화 형성, 도시의 문화다양성 확보와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사회생태계 구축,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문화도시 사업유형은 도시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및 문화 활동 양상에 따라 '문화예술중심'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본 사업기간 5년이 기본이고 연간 국비를 약 3억 원 지원하며, 지방비를 포함해 5년간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추가 2년간 지원하는 구조다. 추가 지원여부는 사

업 3년차 완료시점에서 중간평가(과정)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도시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게 되는데 문화자원의 현황 및 잠재력, 지자체의 문화환경과 정책의지, 재정자립도 및 지원체계, 조직의 추진력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조성계획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적으로 친숙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야 하고, 주민의 호응도나 참여도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 초기 1~3년차에는 도시 문화적 소프트웨어와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을 목적으로 주로 기획프로그램 사업, 시민공모사업,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4~5년차에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 및 문화도시로서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시문화 네트워크 사업'과 '문화허브 및 문화거점 구축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마을 사업은 지역 내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을 안에서 주민의 공동체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중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잠재역량이 높은 마을이 대상이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마을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이거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화마을로서 활동이 가능한 잠재적 역량을 보유한 마을이 우선 선정된다. 문화마을 사업은 본 사업기간 3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연간 약 2억 원씩 6억 원

문화도시의 유형

| 유형 | 기본 지향 목표 | 도시 주요활동 | 사업 기대효과 |
|-------------|--|---|--|
| 문화예술 중심형 | 사회와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도시문화의 성장 및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 중심 예술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사회문화를 형성 · 공유 이를 도시성장의 원천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문화 활동 전개 |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발현 ▼ 도시민 삶의 질 향상 ▼ 도시문화적사회 생태계 구축 ▼ |
| 문화산업 중심형 | 사회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 · 복합을 통한 문화적 도시경제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중심 문화와 산업, 그리고 도시민의 생활에너지와 융합하고 효과 창출 문화적 측면의 도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성격의 활동 전개 | |
| 문화자산 중심형 | 지역성에 기반하는 고유문화 특화 및 도시경제성 구현을 통한 사회효과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을 강조한 문화관광 중심 도시의 고유자산이 가지는 가치를 문화적으로 부각하여 문화효과 창출 유 · 무형적 가치로서의 지역자산 및 고유문화를 특화하는 문화활동 전개 | 문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제활성화 |

지정절차 흐름도



을 지원하고, 본 사업 2년차 완료 시점에서 중간컨설팅(과정) 후 인센티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약 1억 원). 본 사업 초기 1~2년차에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마을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휴먼웨어 구축' '문화사업' '특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가능사업' 등이 추진된다. 본 사업 전개 3년차에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에 쓰일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는 주민참여를 위한 문화 공간 구축사업 등에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추진과 관련해 사업 성장 구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문화마을에서 문화도시로의 성장구조를 이용하여 단계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각 개별 마을 사업이 확장되어 문화마을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마을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마을에 대해 문화도시로의 연계·확장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화마을이 연계하여 문화도시로 성장하면서 공동체 가치와 문화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형성해 지역 전체로 효과가 확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실질적인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문화멘토단을 구성·운영하여 신규 사업 발굴, 사업추진 컨설팅, 전문 분야 조언 등 도시와 마을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멘토단을 중심으로 각 도시 및 마을 사업관계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활성화 목적의 추진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문화멘토단은 중장기적으로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조력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계획 및 기대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을 일반회계로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광특회계로 반영되었다. 절차상·시간상 촉박하게 초년도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남원시가 문화도시로, 부여 규암마을과 공주 상신마을이 문화마을로 선정되어 올해 초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문화도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하여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남원예촌, 남원 예가람길, 춘향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소리문화 체험마을' '시립 김병중 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관광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시민 및 관광객들이 교류하고 체험하는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마을로 선정된 부여 규암마을은 조선시대 물산의 집결지이자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까지 부여의 중심지로서, 산신제·동제 등 마을 전통행사와 근대문화거리의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한다. 공주 상신마을 웃다리 농악 등 전통 문화와 계룡산 철화봉청사기 등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탐방로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은 과거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에 이은 제2기 문화도시 사업의 시범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올해 사업은 3월 14일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약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 말까지 광특예산을 신청하면 6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내용을 심사한 뒤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특색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한다. 2017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를 선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위험으로부터 한옥 및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전통 건조물의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근래에 발생한 안동 하회마을의 화재와 공주 한옥마을의 연이은 화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재 이외의 한옥 및 한옥마을 대한 화재예방 및 대책과 관련 제도는 그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소방방재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졌던 안동 하회마을은 화재 이후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불량하였고, 경주 양동마을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윈난성 두커쑹(獨克宗) 고성에서 200채가 넘는 목조 건축물이 불에 탄 참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옥이 밀집한 전통마을은 화재 발생 시 주변 가옥으로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전이되기 쉬운 조건이므로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과 서촌 한옥마을 등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화재위험에 대비한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한옥과 한옥마을은 여전히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한옥 및 한옥마을의 화재예방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한옥 및 한옥마을의 소방방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조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건축 관련 제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제49조),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0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제51조), 마감재료(제52조)에 대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건축

법에서 규정하는 방화 관련 기준 및 규제는 건물의 용도·종류·규모에 따라 규정이 다르며 기둥, 내력벽, 슬라브, 보, 세대 간 구획 등에 대해서 내화벽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목재 관련 내화구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목조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나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에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제 사항을 두었다. 여기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 상하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 2층 이상에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이른다. 이처럼 목조건축물의 방화 관련 기준은 대규모 목조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만 있으며, 대부분의 한옥이 단층임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제가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다.

소방 관련 제도

「소방기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지역(시장지역,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를 볼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경계지구는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09곳 가운데 13곳이 목조건물을 밀집지역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9곳을 비롯하여 부산·대구·인천·광주 각 1곳이었다. 이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1구역과 2구역, 서촌 한옥마을, 인사동 문화의 거리 등 4개 지구와 전주 한옥마을이 목조건물 밀집지역 중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되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안전에 관한 특별조사(소방특별조사, 제4조),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제7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8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제9조),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내용(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에 목조건축물 등 문화재를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3,021개소이며 이 가운데 목조건축물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96

개소(국보 22, 보물 74)와 전통건축물 825개소 등 모두 921개소로 추산된다. 소방대상물의 방염에서는 한옥의 경우 방염 처리 대상물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 화재 조사보호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 화재 취약대상에 있어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 관련 화재경계지구 지정 사례

북촌 및 서촌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정비 내용

• 관련 근거

- ① 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 ② 2013 화재경계지구 일제 정비 결과
- ③ 201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 행정편 : 화재경계지구 특별관리)

• 정비 개요

- ① 기간 : 2013년 4월 12일~12월 20일(8개월간)
- ② 대상 : 북촌·서촌 한옥마을 포함 총 20개 지역(신규 지정 목조밀집지역은 종로구의 북촌 한옥마을 1구역과 2구역, 서촌 한옥마을, 인사동 문화의 거리 4곳으로 해당지역은 원서동·가회동·삼청동·안국동 등 북촌 일대와 통인동·체부동·효자동 등 서촌 일대를 포함)



봉화 오록리 가옥 화재

신규 지정 목조밀집지역 및 특성

| 지구명(위치) | 건물구조 | 동수 (점포수) | 주택호수 | 건축연도 |
|--|--|-----------|------|------|
| 북촌 한옥마을 1구역 (종로구 북촌로11길 33 ~ 북촌로11다길 41 일대) | 한식 목조와가, 벽돌조, 슬라브가 77,000㎡ | 250 (-) | 250 | 1970 |
| 북촌 한옥마을 2구역 (가회동11번지 ~ 계동 일부) | 벽돌조와가(슬라브가) 1~5 층 106,960㎡ | 353 (-) | 353 | 1960 |
| 서촌 한옥마을 (채부동, 필운동 일부) | 목조, 한옥,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등 26,853㎡ | 167 (77) | 128 | 1960 |
| 인사동 문화의 거리 (종로구 관훈동 30번지 일대) | 한식 목조와가 및 슬레이트가 1·2층 연 6,140㎡ | 27 (24) | 24 | 1970 |
| 계 | | 797 (101) | 755 | - |

(2013. 10. 4. 기준, 서울시)

- ③ 건물 현황 : 한옥 1,516채를 포함해 총 5,662채의 건물이 밀집.
(사적 5건, 등록문화재 3건, 유형문화재 2건도 포함)

• 내용

- ① 화재경계지구 신규, 해제, 경계조정 지역 검토 및 심의회 개최
- ② 연 1차례 이상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훈련 및 교육 실시
- ③ 예방환경조성(소방용수시설, 소화기 등 설치, 화재예방 홍보)
- ④ 관리 현황카드 작성 및 정비

• 세부 정비 내용

소방특별조사는 2013년 4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8개월간 합동점검반 편성(소방, 건축, 전기, 가스, 기타 등)하여 기존의 목조 밀집지역을 포함해 총 5개 지역의 886동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조사대상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및 교육은 소방특별조사와 동 기간에 종로구 소방서 신규 지정 4개 지역의 주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상화재 진압훈련, 소방통로 확보훈련, 비상소화장치 사용훈련(이상 각 지구 1회 실시), 도상훈련(각 지구 6회 실시), 주민 등 소방안전교육(총 591회 실시) 등 모두 627회를 실시하였다.

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각각 174개를 보급하였으며 화재예방 포스터를 49장 보급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정비 내용

• 관련 근거

- ① 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정비 개요

- ① 기간 : 2014년 1월 17일 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 이후
- ② 대상 : 전주 한옥마을(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 교동 일대)
- ③ 건물 현황 : 774동(한옥 603, 비한옥 171) 경기전, 어진박물관, 오목대, 향교 등 중요 문화재 및 문화시설 산재

• 내용

- ①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
- ②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 ③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 ④ 예방환경조성

• 세부 정비 내용

한옥마을 내 932곳의 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설비는 지하식 소화전(28곳)을 지상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방훈련 및 교육은 반기 1회의 소방합동훈련과 한옥마을 주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 1회를 지정하여 민 · 관 합동순찰의 날 운영과 안전간담회(HOF, Han Ok Fire talk)를 반기 1회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 개선방안

건물 자체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준 마련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 모두 대부분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분류 기준에 따라 소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로 한옥이라고 특별 적용받는 소방관리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옥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나, 실제 이용행태는 다중이용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법률상의 용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나타나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올바른 소방 관리 기준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도와 규모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건물 자체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화재경계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의 발생 위험도와 화재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여 개인적인 투자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곳을 우선순위로 지정·관리하기 때문에 한옥밀집지역은 우선순위가 낮다. 또한 상업밀집지구에 위치한 한옥마을의 경우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관련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 관계인들이 지구지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는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실행되며 해당 소방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어 예산과 관리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화재경계지구 지정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옥마을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체에 소방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 한옥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용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주민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등의 화재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 관련 기준 마련과 활성화 방안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설비 설치기준 및 방염처리 기준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옥의 경우 개별한옥과 마을단위, 기존 및 신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기존 한옥마을의 경우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소방설비 설치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옥외소화설비, 기초소방시설, 초기대응 소방시설 설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 한옥의 경우 소방설비 설치권고 및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축 한옥의 경우 현행 건축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준수 권고와 일부 방염·감지기 등의 설비를 자진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한옥마을의 경우 단지계획단계에서부터 방화와 소방을 고려하여 건물 사이 간격을 확보하거나 블록단위 소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축 한옥과 신규 한옥마을에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화재안전대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의 전체 경관상 어울리면서 소방설비 본연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방설비의 디자인 개발과 한옥 내외부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서울소방재난본부, 『2013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 2014.
- 2 서울소방재난본부, 『2013 화재경계지구 소방훈련 및 교육 추진 실적』, 2014.
- 3 소방방재청, 『2013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2013, p.219~223.
- 4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tour.jeonju.go.kr/index.sko?menuCd=AA060000000000>)

01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함부르크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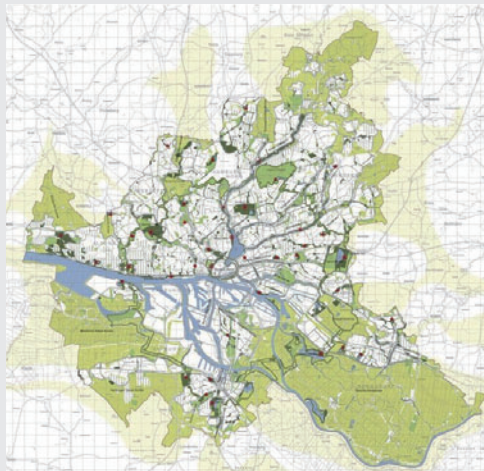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는 지역의 40%가량이 녹지, 공동묘지, 운동시설, 정원, 공원, 그리고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상 최초로 이 도시는 이들 녹지를 통합해 보행 및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함께 연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함부르크 내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표로 계획된 ‘그린 네트워크 플랜(green network plan)’이다.

시의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가 도시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런던을 포함한 여타 다른 도시는 (도심 외곽에 펼쳐진) 환상형의 녹지(green rings)가 존재한다. 그러나 외곽지역에서부터 시내의 중심가를 아우르는 함부르크의 그린 네트워크는 고유하다.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당시는 함부르크를 오직 자전거와 두 발로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함부르크에는 남측과 북측에 두 개의 거점 녹지축이 있다. 전체의 도시를 아우르는 그린 네트워크 플랜이 더욱 명확해지기 위해, 계획 팀은 주요 7개 지역의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각 지역이 함께함으로써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연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속가능한 통근체계를 누릴 수 있다.

함부르크는 또한 탄소흡수량을 높이고 도시의 미세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녹지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한다(함부르크의 평균 기온은 지난 60년 동안 1.2도 정도 높아졌다). 새롭게 구성되는 녹지는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함부르크의 그린 네트워크 플랜

함부르크는 해수면이 20cm 상승해 왔고, 2100년에는 30cm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함부르크는 도시계획의 최근 추세를 따르고자 한다. 도시의 외곽과 내부를 연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코펜하겐의 도시계획이 좋은 예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은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었다.

<http://www.archdaily.com/464394/hamburg-s-plan-to-eliminate-cars-in-20-years/>

지역가치 향상을 위한 멜버른의 도시 숲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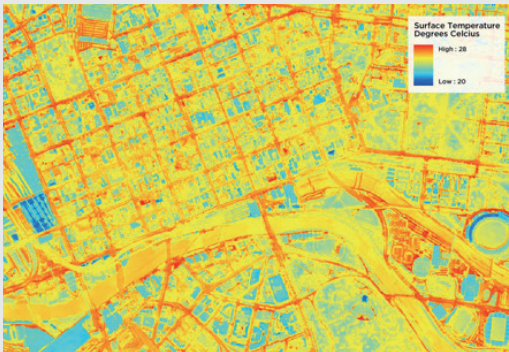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멜버른 시는 향후 20년 내에 평균 기온의 증가, 강우량의 감소, 폭염 및 홍수발생을 증가, 열섬현상 심화 등 심각한 기후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멜버른 시는 건강하고 살기에 적합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도시 숲을 복구하고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다. 멜버른 도시 숲 전략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탄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 숲의 주요 기능은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전역에 캐노피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보행자의 열적쾌적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빗물의 흐름과 영양부하를 줄인다는 점에서 생태적으로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임 장소를 만들고 자연과 매일 상호작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의 절감, 지역 가치의 향상,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성 등 부차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멜버른의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가뭄이나 무를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도록 했으며, 그로 인해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나무의 수는 현재보다 27%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멜버른 시는 숲의 진화와 보존 및 지속력에 대한 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예측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의 목표는 숲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기존의 식물 건강, 토양 수분 및 생물 다양성을 개선하며, 캐노피의 면적을 2040년까지 40%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노스웨스트 멜버른, 멜버른, 캔싱턴에 있는 도시 숲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2014년 5월까지의 견을 제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http://sourceable.net/melbournes-urban-forest-strategy/>



도시숲의 열섬현상 완화효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숲

03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영국의 행정자치구

유가상승과 기후변화로 대다수의 지방 자치구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천하려고 한다. 위원회는 버밍엄시의 시장 조지 프 체임벌린이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시의 소유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1870년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킹 협의회: 에너지 분권화(Woking council: decentralising power)

에너지 자치구의 시초인 워킹시는 1999년부터 에너지 공급의 분권화를 시작하였다. 워킹은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고, 지금은 도심 중심가에 있는 상업시설과 의회 건물에 열·전기 등을 제공하는 지역 발전소의 수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의회의 지속가능성 계획에 투자하는 데 사용된다.

이곳은 태양광 기술과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결합하여 지역 보호시설단지인 브록힐에 100%의 에너지 재생을 실현한 최초의 지방 자치구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치구는 탄소배출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연료 빈곤이 문제시되는 거주민이 없다.

스톡온트렌트 협의회: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Stoke-on-Trent council: turning waste into energy)

스톡온트렌트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지역 주도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사용을 꿈꾼다. 에너지의 자족적 공급을 넘어서서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에너지가

격변동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혐기성 소화를 통해 지역의 쓰레기를 태워 바이오가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세라믹 공장은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고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도시는 또한 지하 탄광의 따뜻한 물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광산 물 발전소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구현한 네덜란드의 도시 헤를렌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해링게이 협의회: 녹색 기업 활성화(Haringey council: enabling green enterprise)

해링게이는 2020년까지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할 것을 서약한 영국 최초의 자치구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링게이는 탄소위원회를 만들고 지역 기업을 발족시켜 집단 에너지 기업을 숙련시키는 데 노력해 왔다.

이 경우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 위원회와 함께 또 다른 규모로 작동한다. 계획에는 개조주택 및 저탄소 기업 지구에 초점을 맞춰 자치구 경계 너머와도 협업하는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저탄소 접근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돕는 더럼 대학의 에너지 연구소와 협업하고 있다.

<http://www.theguardian.com/local-government-network/2014/feb/10/local-authorities-energy-self-sufficiency>

미국건축가협회 · MIT 선진도시화센터의 건강도시디자인 협동연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활동행태를 살펴보면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 비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는 최근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용과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제기반이 약한 지역과 도시화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의 건강이 도시 계획 및 설계의 차원에서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미국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와 MIT 선진도시화 센터(MIT, CAU: Center for Advanced Urbanism)는 건강과 도시 커뮤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협동 연구에 들어갔다.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미래의 건축 및 도시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다. 이 연구는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의 '10년의 디자인(Decade of Design)' 선언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건강을 촉진하는 지역계획 및 설계 모델을 실제적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이 다년간의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건강과 도시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은 비만에서부터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주거지의 교통수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지역 및 지구계획, 도시 설계안 역시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인근의 유해한 환경은 천식 등 직접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자본, 그리고 건강복지와 연관된 사회기반 역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착수한다. 건강한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대안적인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고, 선택된 대상지에서 실제 개발계획을 수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도시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리고 지역 관계자 및 공공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다학제적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이 프로젝트가 도시 및 지역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www.fastcoexist.com/3022922/rethinking-our-cities-to-fight-obesity>

<http://www.aia.org/advocacy/ClintonGlobalInitiative/index.htm>

<http://cau.mit.edu/news/report-state-health-urbanism>

05

함부르크 공습벙커의 경제적 · 문화적 재활용

IBA 함부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습벙커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 플랜트로 복원하였다. 60년 가까이 버려져 있던 콘크리트 공습벙커는 이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이상의 가정에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물로 재탄생하였다.

건물의 지붕과 남쪽 외벽에 설치된 강철 프레임은 일주일에 100kW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 패널의 하부구조다. 전쟁 당시 내부폭발로 생긴 벙커 중심부의 대형 공간은 혁신적인 완충저장고가 된다. 이 공간은 산업폐기물, 바이오 메탄가스 구동 열과 전원 장치, 그리고 목재 연소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벙커 중심부의 완충 효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이 에너지 벙커 시스템 덕에 연간 6,600미터톤 정도의 CO₂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층부에는 카페를 개설해 방문객을 받고 있다. 30m 높이에 있는 이 카페의 테라스에서 사람들은 항구와 언덕 등 도시의 독특한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공습벙커의 역사와 에너지 벙커로의 변화과정을 소개하는 전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개념구상단계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은 현재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태이며, 2015년에 모든 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http://www.designboom.com/architecture/iba-hamburg-converts-an-abandoned-nazi-bunker-into-an-energy-producing-facility-2-9-2014/>

<http://www.iba-hamburg.de/en/projects/energiebunker/projekt/energy-bunker.html>

<http://www.mnn.com/earth-matters/energy/blogs/german-air-raid-bunker-transformed-into-renewable-energy-facility>



건물의 지붕과 외벽에 설치된 태양전지 패널



카페로 활용하는 최상층부 테라스

01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대통령 소속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08년 첫 출범 이후 올해로 3기를 맞았으며, 국토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 위원은 신임 위원장에 선임된 김석철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해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건축·도시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강한 국토환경, 행복한 국민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석철 위원장은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직과 더불어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등 13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건축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한국건축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3.12.27

0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아울러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IT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설계 및 기술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설계의 양산,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 상징적 건축물을 해외 건축사가 설계하는 관행 등으로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올해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설계비가 2억 3,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평가 항목에서 가격의 비중을 낮추고 디자인과 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 체계를 개선하였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고, 실비정책가산방식 도입 등으로 설계대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건축물 정보 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성화해 설계·시공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를 국민이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녹색건축과·건축문화경관과, 2014.1.29.

03

재해 및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비롯해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폭설과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기준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개정된다.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둥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1㎡당 설하중을 25kg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산지 등 국지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적설하중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설계·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도 곧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 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건축법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연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해 3월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4.3.3.

04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발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 정전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절전 위주의 단기처방보다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실천전략은 크게 네 부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목표는 2009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둘째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금융조달 및 이차지원, 그린카드와 연계한 금전적 혜택 부여,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4.3.13.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위한 2014 환경부 업무계획 - 친환경 에너지 타운,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추진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라는 3가지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합동예보제,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자원 및 에너지 순환성 강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금융시장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세부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건축 및 도시 분야와의 주요 협업과제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사업'과 '기후변화 안심도시 조성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사업'은 매립·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기피시설에 대한 혐오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수익모델은 음식물·축산분뇨 등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열·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해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공동의 이익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특별팀(TF)이 조직되었고, 시범사업 유형과 추진체계 등이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본부와 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으로 추진단을 꾸려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최근 폭설 및 한파,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가 중요시되는 만큼 환경부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50곳에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곳에 시범사업을 펼치며, 해당 지역에는 '주택개량사업' '침수 차단 시설' '폭염 대비 쿨링존 조성' 등이 지원된다.

에너지효율의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한 친환경 정책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관련 R&D 과제 발굴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제로에너지 기술의 보급·확대, 저소득층 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및 지역기반 마련 등 앞으로 에너지 분야와 건축 및 도시 분야의 협력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환경부, 2014.2.19.

06

도심 내 유희지 재생방안,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구상 발표

13년간 방치되었던 서울시 마포구 석유비축기지가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작년 5월부터 6개월간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이와 같은 골자의 활용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담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시는 유례없는 산업유산의 장소적 가치와 석유탱크 내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살린다는 부지 이용 원칙에 따라 5층 건물 규모의 5개 석유탱크와 옹벽을 재생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며, 다양한 보행체계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발은 사업 여건에 따라 석유비축탱크 일대, 주차장 부지 일대 각각을 중심으로 2단계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탱크별 도입시설과 규모를 포함한 실제 설계는 건축가와 조경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4월 국제현상설계를 공고하고, 하반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에 착공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등 주변의 친환경 문화자원과 어우러져 재탄생하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서울시 서북권의 환경생태와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2014.1.10.

07

2014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시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

인천시는 오늘 9월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경관 개선·조성 등 도시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점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보급,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 소래철교 경관 조성, 인상에 남는 도시 진·출입 경관 개선, 도시 브랜드 개발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와 아울러 신·원도심이 조화로운 국제도시 조성에도 역점을 둔다. 따라서 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협조와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러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관내 7개의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는 디자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도시 브랜드 개발 등에 관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주민 등을 참여시켜 범시민 디자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4.2.13.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4차년도 계획,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만들기

부산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로 4차년도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개선된 감천문화마을, 동구 이바구길 등은 달동네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부터 사업권역을 확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잠재된 지역문화와 역사성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감천문화마을의 가능성이 있는 영도 흰여울마을, 동구 안창마을, 그리고 서구 비석문화마을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가로환경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및 개선 작업과 더불어, 흰여울마을은 페 · 공가 5개동을 리모델링해 갤러리, 공예, 영상, 절영방송 등을 운영한다. 또한 순수 민간예술창작공간으로 7개동의 건물에 입주작가들이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안창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공부방과 마을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을 가로지르는 호계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주민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비석문화마을은 기존의 문화탐방로 정비와 더불어 인근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발굴, 조성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4차년도 사업을 통해 산복도로 지역의 환경 개선은 물론 문화와 예술이 접목돼 스토리텔링이 가득한 마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2014.3.21.

광주광역시, 2014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 추진

주택 및 상업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에 달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의 자발적 경쟁을 통하여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민 · 관 협력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자 '2014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 사업설명회 이후, 광주시와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공모를 통해 40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정된 아파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우수사례를 모델로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 주민리더 교육, 그린홈 디자이너 양성 및 세대별 그린홈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연말에는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등 2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22개 우수아파트를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등급별 인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동기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 아파트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저감 활동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해 전국 모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아파트 총 177개가 참여해 이 가운데 55개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돼 주변 아파트의 녹색생활 실천 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음식물 쓰레기 등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2,334톤의 CO₂를 감축하고 이는 소나무 8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2014.3.26.

장소탐방

건축도, 도시도 ‘켜켜이’ 쌓인다. 옛 건축과 많은 도시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달라진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여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산청의 울수원은 순천박씨의 고헌고택에 지리와 지역성을 반영하여 조성된 한옥 시설이다. ‘신한옥’이 아닌 여전히 ‘우리 한옥’ 이면서 현재의 배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군산시는 도시의 성장과 변화, 쇠퇴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근대문화유산과 건축물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호흡과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과거를 단순히 지워야 할 흔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새로이 나아갈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



고한고택에서 울수원으로

한옥에는 여전히 문화적 · 공간적 · 건축적 행태 속에서 지속되고, 영속되며,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다만 현대 생활에 맞게 재조정되고, 기술적인 보완과 더불어 한옥의 세계가 전통의 보존을 뛰어넘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탁류의 도시,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에서

군산시는 산재한 근대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쇠퇴한 원도심의 사회적 ·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근대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해 근대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헌고택에서 율수원으로

권현호

건축사사무소 삼간일목 대표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상



전체 사진제공: (주)재능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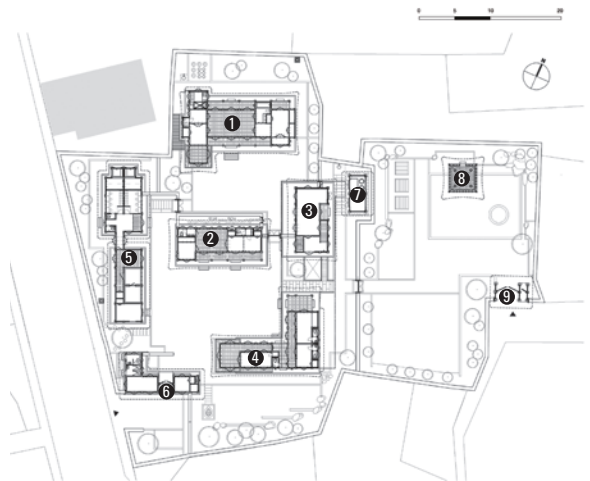




산청은 예부터 산 좋고 물 맑기로 소문이 난 지역이며, 울수원은 이곳 산청의 단계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황매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분지인 이곳은 단계천과 신등천이 합수되는 곳으로, 명문 고택의 전통과 옛 담장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전통마을이다. 그야말로 기품이 넘치는 곳이다.

울수원은 순천박씨 고헌고택이 있던 자리에 지역성을 반영한 9채의 건물과 사랑마당, 안마당, 후정 등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것의 우수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한옥스테이 시설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울수원의 설계는 단계별로 시행된 규모 확장과 더불어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쳤으며, 1년이 넘는 설계기간과 2년 여의 공사 기간 중 수많은 한옥의 답사와 더불어 시공법과 재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2013년 5월에 완공되었다.



1. 안채(하계채) 2. 안사랑채(농암) 3. 식당채(국이관) 4. 바깥사랑채(고헌)
5. 목욕채(설조당) 6. 대문채(영수문) 7. 광채(지만오) 8. 사모정(용담정)
9. 사주문(울수문)



안마당

9개의 외부공간 (마당과 정원)

한옥의 가치는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물로 둘러싸인 마당, 건물과 건물이나 건물과 담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격의 외부 공간과 그 다채로움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크기, 그리고 건물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수원의 주요 영역은 △대문채, 바깥사랑채, 목욕채와 안사랑채가 열린 구조의 사랑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영역 △사랑마당에 비해 위계가 높은 안마당 영역 △사모정과 연못, 사주문을 포함한 후정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런 가운데 진입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별채마당, 목욕채 후원, 안채 후원, 텃밭, 그리고 후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마당은 폐쇄적이지 않도록 채와 채 사이의 사이공간, 담장과 지붕 사이의 열린 공간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시각적·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다.

진입마당의 측면으로 ‘ㄱ’자형 대문채를 지나면 행랑마당의 낮은 담을 돌아 사랑마당으로 들어선다. 높은 누마루를 가지고 있는 ‘ㄱ’자형 바깥사랑채와 화려한 지붕을 가진 안사랑채, 두 채가 하나로 연결된



사랑마당

목욕채와 지하공간을 가지고 있는 식당채의 일부가 사랑마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정과 안마당의 영역으로 동선이 확장된다.

안채로의 진입은 안사랑채 양측면의 두 협문으로 가능하며, 안마당으로 들어서면 누마루와 커다란 대청을 가진 '1'자 형태의 안채가 정면에 보이고, 식당채의 일부와 샛담이 안마당을 정적인 공간으로 한정한다. 안채 뒤에는 장독대와 굴뚝을 가진 후원이 있다.

후정은 연못과 사모정이 있는 정원으로 식당채와 바깥사랑채 사이의 협문으로 들어가며, 외부 조망보다 내부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후문 기능을 가진 사주문을 두어 식당채의 서비스 동선을 확보한다.

기존 고택

1900년대 고전고택이 지어진 후 부분적으로 개·보수된 6채의 노후화된 한옥이 남아 있었음.

1차 계획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구분하여 영역을 설정하고, 마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옥을 재배치하여 공간의 위계 강조.

2차 계획

목욕채를 추가하여 마당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각 채별 시각적 교류 확보.

최종 계획

연못과 정자를 가지는 후정을 측면에 배치하여 외부공간의 확장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창출.



안채 누마루

공간의 확장 및 연계

크게 3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물수원은 각 영역 간 섀도우로 구분되고, 동선과 시선의 교류를 통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다. 공간의 연속성을 통해 다양한 정서의 변화를 주며, 비례칭의 균형감을 가지는 배치구성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한다.

사랑마당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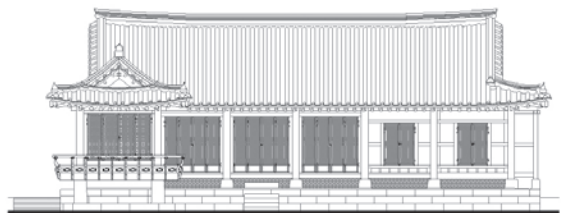
개방적 배치를 통해 외부공간 상호간 동선과 시선의 교류 및 연계성을 높임.

안마당 영역

정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깊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위계와 상징성을 높임.

후정 영역

기능적인 동선을 고려하고 내부 정원의 다양화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



바깥사랑채 입면도



안채 방

9채의 한옥

울수원의 개별 한옥은 각각의 공간적 성격 및 기능에 맞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인 통일성과 조화를 바탕으로 개별적 개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안채 : 하계재(下溪齋)

산청 울수원의 중심 건물로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의 겸손을 의미하는 하계재는 누마루가 있는 6칸 7량의 안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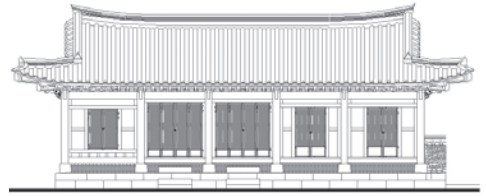
누마루를 포함하며 안마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좌측 영역과 안마당을 건너 사랑마당까지 시선이 가능하지만 소극적으로 열려 있는 우측 영역, 안마당과 후원 쪽으로 별개의 텃마루를 가진 대청영역으로 구분된다.

‘┌’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마당과 후원에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상징적 위계를 강조하였다.

안사랑채 : 농암(農菴)

바깥주인의 공간인 농암은 '농자(農者)의 초막'이라는 뜻으로, 겸손의 공간을 의미한다. 팔작지붕의 형태와 겹처마를 가지며 울수원 중심에서 화려함을 드러낸다.

전면 툇마루가 사랑마당과 자연스럽게 관계하여 전통한옥에서 느끼는 마당과 마루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며, 안마당 쪽으로 독립적인 툇마당을 가지고 있어 열리면서 닫힌 다양한 공간이 숨어 있다.



안사랑채 입면도





안사랑채 방



안사랑채 대청



비갈사랑채





바깥사랑채 방



안사랑채 뒷공간

바깥사랑채 : 고향(古軒)

고향은 손님이 머무는 공간으로, '선비정신을 품고 있는 옛 사랑채'라는 의미를 지닌다. 'ㄱ'자 형 평면으로 두 침실과 복도, 그리고 식당채 쪽 툇마루를 가진 영역과 계자난간의 누마루를 가진 영역으로 구분된다.

두 영역 사이의 작은 마루는 외부이면서도 내부인 공간으로 사랑마당과 별채마당을 이어주는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울수원 건물 중 방이 가장 많은 바깥사랑채는 7칸 5량 집으로 한옥의 채움과 비움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식당채

식당채 : 국이관(鞠二館) / 소요유(逍遙遊)

식당채는 지하층이 있는 한옥이다. 1층 국이관은 ‘몸과 정신을 기르는 곳’이라는 의미의 식당공간이며, 지하층의 소요유는 ‘함께 어울려 즐기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층은 식당채와 바깥사랑채 일부의 지하에 위치하여 선릉을 통해 진입한다. 전통한옥의 양식과 현대적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서비스를 고려하여 안마당과 사랑마당 영역에 걸쳐서 배치되어 있다.

1층 식당의 내부는 한옥의 구조가 드러나는 형태로 수직적 공간감을 확보하였고, 지하 다목적 실은 단순한 인테리어와 선릉을 통해 수평적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식당채 지하



식당채 지하

목욕채 : 설조당(雪澡塘)

설조당은 '몸과 마음을 눈처럼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두 채를 한 채로 연결한 8칸 5량의 휴식공간이다.

목욕 및 샤워시설이 있는 채와 황토불가마 시설을 포함한 채를 연결하여 하나의 목욕채로 계획하였고, 현대식 휴식공간을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기능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만 두 채로 나누어 사이공간을 통해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고층창과 휴게실 등을 두어 답답함을 최소화하여 목욕공간인 동시에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목욕채 황토방



목욕채 내부



대문채

대문채 : 영수문(永修門)

울수원의 정문인 영수문은 '영원히 덕을 닦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ㄱ'자형 평면으로 관리동의 성격을 가진다.

대문채는 울수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며, 진입마당과 행랑마당 사이에서 솟을대문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전이공간이자 상징의 공간이다.

부엌 및 공간 : 혁선조(革善竈)/지만오(持滿廐)

혁선조와 지만오는 '식재를 좋은 방향으로 변형시키는 공간'이란 의미의 부엌과 '물건이 가득한 상태인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이 있는 2칸짜리 광채다.

식당채 뒤쪽에 위치하며 식당주방의 추가 서비스 공간으로 안채영역에서도 동선이 연결된다.



부엌과 공간 123



사모정 후정

사모정 : 용담정(龍潭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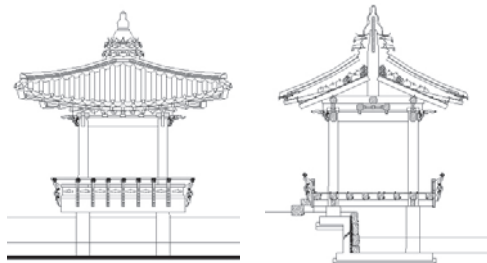
용담정은 '용이 사는 연못'을 의미하며, 지붕 4개가 한 개의 모서리에 모여 사각뿔 형태를 이루는 사모정이다.

내부정원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한국건축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정자로, 단순한 평면이지만 계절의 풍경과 어울려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4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닮아 있는 모습으로의 한옥은 또 하나의 자연이다.

사주문 : 율수문(律修門)

율수문은 '스스로 덕을 닦는다'는 의미의 사주문으로 후문의 성격을 가진다. 율수원으로의 후면 진입 시 차량 출입도 가능한 2칸의 문으로 비워진 후정에 사모정과 함께 공간요소를 이룬다.



사모정 입면도



사주문

신한옥이 아닌 우리 한옥

한옥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어 온 우리의 건축양식이자 형태다. 외관의 특수성만으로 하나의 전형적 형태 이미지로 전락되거나 단순히 과거의 전통으로 박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옥에는 여전히 문화적·공간적·건축적 행태 속에서 지속되고, 영속되며,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다만 현대 생활에 맞게 재조정되고, 기술적인 보완과 더불어 한옥의 세계가 전통의 보존을 뛰어넘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현 시대에 맞는 한옥을 재조명하는 것이 잊혀지고, 단절된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의 문화적·현상적 트렌드로 여기기 이전에 한옥의 본질적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의 한옥을 신한옥 또는 생활한옥이라 말하곤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옥은 단지 우리 한옥일 뿐이다.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형태, 그리고 자연과 도시에 대한 관념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세계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고, 복원되고, 새롭게 변형되어, 더욱 확장되는 세계다. 우리는 늘 세대와 세대가 이어진 채 존재해 나가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존재해 온 건축은 늘 현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 한옥 역시 여전히 우리 땅, 우리 도시에서 그 가능성과 의미로 빛나고 있는 우리의 현대 건축이다.

탁류의 도시,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에서

김현숙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내항의 부전교



내항의 부전교



구 군산세관



구 조선은행과 부두변 참고시설들

군산의 항은 독특하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하고, 메케하면서도 상쾌하다. 내항에 가까워질수록 그 향은 진해져 가고, 그 향에 취할 때쯤이면 근대의 애환이 담뿍 담긴 짜보선창의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군산은 1899년 일본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 개항할 당시만 해도 150여 호에 500여 명이 거주하던 한적한 어촌이었다. 하지만 금강과 만경강 유역의 넓은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창(세금으로 거둔 곡식의 보관창고)이 위치하던 때문인지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군산은 이전부터 제법 알려진 곳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군산은 개항과 더불어 현재의 영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57만 2,000㎡의 각국 공동조계지가 설정되면서 격자형 가로망체계의 근대도시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 1907년 군산항이 축조되고 전주~군산 간 전국 최초의 포장도로와 익산~군산 간 철도가 건설되면서 미국의 집적이 용이해진 까닭에 연간 200만 석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수출량 기준으로 부산에 이어 2위의 항구 도시로 성장하였다. 지금은 뜬다리(부전교) 부두를 등지고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로 건축된 군산세관을 시작으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 구 미즈상사, 용도전환 된 몇몇의 창고가 남아 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을 찾아보기에 충분하다.



히로쓰 가옥



히로쓰 가옥



일본식 주택



거리에서 맞닥뜨리는 일본식 주택

가로 곳곳에서 만나는 근대도시의 경관

미곡항 도시로의 성장에 따라 미곡취인소(미두장), 정미업, 양조업, 식료품업, 금융업, 유통업도 발전하였으며 인구규모도 급증하여 1935년에는 4만 1,698명(일본인 9,400명)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인의 급증은 영화동 조계지에서 월명동·신흥동으로 연계된 월명공원을 경계로 한 주거지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관리·지주·상인 등 부유층의 집주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대표적 주택은 1925년 일본인 포목상 히로쓰(広津)가 건립한 가옥이다. 일본 무가(武家)의 주택양식인 목조 2층 주택으로 건축재료 전체를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

물과 정원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영화 <타짜>나 <장군의 아들> 등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히로쓰 가옥이나 윤여삼 가옥과 같이 뛰어난 건축이 아니더라도 가로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일본식 주택이 정겹고도 애달프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군산 내항 일대는 광복과 더불어 급격히 쇠퇴한다. 일본과의 수출입 기반이 무너지면서 항구 기능은 장항을 연결하는 연락선과 어선에 넘겨졌다. 상업·업무시설의 미려한 건축물은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용도전환되거나 철거되었으며, 적산가옥(敵産家屋)으로 분류된 주택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일식주택에 적합



공가·폐가로 전락한 아름다운 주택들



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탓에 노후화되어 갔다. 이 독특한 근대도시의 역사경관은 가끔 영화에 등장하여 햇빛 외에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을의 세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 마스터플랜 수립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자료를 정비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도시의 형성과 성장, 변화와 쇠퇴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아픈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 대신 역사적 사실로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던 2001년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의 개화기부터 광복 전후기를 전통과 현대의 가교기로 인식하고 이 시기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보존활동이 시작되었다. 군산시는 산재한 근대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쇠퇴한 원도심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근대건

축물의 조사를 통해 구 군산세관을 도지정기념물로, 히로쓰 가옥을 비롯해 구 조선은행과 구 나가사키 18은행 등 9곳을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등록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내항 주변과 영화동·월명동 일대의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군산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목적은 원도심과 내항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근대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해 근대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근대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및 복원 계획, 근대역사문화 경관의 회복 계획, 지역 재생을 위한 근대역사문화 유산의 활용계획 등이다.

계획대상지는 문화벨트지구와 역사경관지구로 구분되었다. 유통업무의 기능을 담당했던 문화벨트지구는 과거의 건물을 보수·복원하고 새로운 기능 부여함으로써 양식의 재현과 복원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문화벨트지구 및 역사경관지구의 위치도

역사경관지구 내의 일본식 건축물 분포도

주요 시설물의 활용 방안으로는 우선 규모와 건축적 가치에 있어 군산 근대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경우 일제강점기 민족경제수탈사의 기억 재현을 목표로, 근대산업역사 박물관이자 전시기획에 쓰기 위해 건축의 원형 복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은 복합문화갤러리의 기능과 금고시설을 보수·복원한 곳에 경제수탈의 기록을 전시함으로써 이중적 전시효과를 도모하였다. 또 미곡저장고였던 대한통운 창고는 규모의 특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형 창고공연장으로 계획되었다. 이 밖에 구 미즈상사는 군산시립박물관의 부속동으로 기능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사업과정에서 나가사키 18은행에 인접 이축시킴으로써 블록단위 문화벨트지구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역사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역사경관정비를 도모하여 원도심의 경제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경관지구가 영화동·월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면적이므로 초기 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벨트지구와 양단을 형성

성하고 있는 2블록을 선정하여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우선정비구역은 일식근대건축물이 70% 이상으로 최고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블록이 최초로 개발된 1930년에 건립된 주택 32동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이곳의 개개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원형의 가치가 인정되는 목조건축물 23동은 덧대기와 증축부 등을 제거하고 보수·복원하여 원형 회복을 도모하였다. 가로변에 입지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활용도가 높으나 원형 훼손 정도가 심한 4동은 일제강점기 주택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으로의 개축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축되는 건축물의 보다 나은 입면구성을 위해 외장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특성은 다양한 일식 주거 건축양식이 군산의 기후 등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시기에 축조된 군산의 대표적 주택의 입면특징을 분석하여 적응함으로써 보다 양호한 가로경관 및 건축자산의 축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블록의 내부에서 붕괴가 진행되거나 1970년대 이후에 건립된 보조가치가 낮고 구조상태가 불량한 조적조 부속 건축물은 철거하



문화벨트지구 대표적 건축물의 정비 전·후



월명성당권역 조감도



월명성당권역 평면도



우선정비권역 중 월명성당권역의 정비 전·후

여 중정형 소공원이나 쉼터로 조성하였다. 특히 민박시설과 연계된 소공원 부분은 다정(茶庭)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개축된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데크에 걸터앉은 시점(視點)에 맞춘 조경계획이 이루어졌다.

근대문화유산, 역사문화자원으로 재탄생

이 계획으로 전면폭 5m×깊이 20m의 장방형 필지의 건축방식인 장옥(長屋:나가야)의 특성과 블록의 공간적 틀은 유지하면서 필지분할에 의해 맹지 상태로 남아 있는 후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공간이 확충되었으며, 시민에 의한 문화활동을 일으킴으로써 역사경관지구 전체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폭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군산시는 개항신도시, 미곡수탈의 흔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여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이를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 역사문화자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받았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굽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군산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 대해 갖는 연민, 조금은 특별한 유대감의 형성과 자신감의 회복, 점차 증가해 가는 관광객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다양한 형태로 결성되어 지역발전을 논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 지역 예술단체의 동참 등의 다양한 성과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에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또 그렇게 되길 빌어본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1

오성훈 · 남궁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남궁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좋은 보행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는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 경험, 설계기법을 정리한 책이다.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공무원이나 설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보행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장소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연속적이고 입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거리를 확보하는 보행자들이 많을수록 도시와 가로는 더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 위주의 도로와 교통시설은 공간적인 분리와 단절, 고립을 불러와 보행자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을 만들었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는 이러한 도시공간과 교통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지원하며, 침체된 공공영역을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행권이라는 말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일련의 사회적·제도적·정책적 노력이 거듭되어 오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보행환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매년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행환경에 요구되는 가치와 역할도 다변화되었다. 보행환경의

개선은 더 이상 안전이나 성능, 효율과 같은 기능성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 넓고 평탄하고 튼튼한 보도, 더 많은 횡단 보도와 육교와 지하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접근만으로는 보행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일부 성공적인 사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모방한다면, 대상지의 특성과 맥락,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접근과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는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선도적인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각각의 배경과 여건, 현황과 문제점, 계획과 설계기법, 추진 과정과 개선효과 등을 실제 도시공간과 장소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내었다. 사례 간의 연관성과 차이점, 선택의 기준이나 쟁점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주제와 맥락이 유사한 2개의 사례를 하나의 장으로 엮었고, 피상적인 소개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관한 도판과 분석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각 사례와 관련된 주요 설계기법과 개념에 대해서는 풍부한 배경 지식과 설명을 곁들여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총 2권으로 기획하였으며, 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 장, 6개 사례를 다루었다.

‘제1장 도심 가로와 보행 활성화’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
화적·상업적인 중심가로를 사람이 확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

로 되살린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심의 가로는 교통 혼잡과 정체, 높은 지가와 주차공간 부족,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조직의 보존, 공공영역과 도심 상권의 쇠퇴 등 도시환경의 물리적·기능적·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중첩된 공간이다. 이 때문에 가로 단위의 소극적 정비를 넘어 도시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오랜 기간 보행자전용구역으로 이용되어 오던 중심상업가로를 재단장한 슈투트가르트 시의 퀴니히스트라세 사례와 자동차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보차공존가로를 선택한 런던 시의 익지비션 로드 사례를 통해 도심의 가로환경 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 도심 교차로와 광장’에서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광장으로 이용되던 교차로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로와 가로의 만나 형성되는 교차로는 공간구조와 교통시설 및 운영체계의 관점에서 단일 가로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여러 가로가 불규칙한 형태로 만나는 비정형의 교차로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 장에서는 도심 주요축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정형 교차로에 보차공존가로의 개념을 적용한 스위스 비엔 시의 젠트랄플라츠 사례와, 일련의 비정형 교차로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를 대상으로 구간별로 도로 다이어트와 통행제한, 통행체계 개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도심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미국 뉴욕 시의 브로드웨이의 사례를 다루었다. 두 사례는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의 주요 교차로에서도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공공영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 주거지역의 보행환경’에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어 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기원된 본엘프(Woonerf, 생활의 정원)는 자동차보다 사람, 교통보다 가로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이 우선시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주거환경의 특성을 새롭게 정립한 개념으로 이후 인접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으나, 유독 영국에서는 더디게 받아들여졌고 많은 절충과 변형을 거쳤다. 이 장에서는 초창기 ‘홈존’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성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공무원이나 설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대상지 중 하나인 플리머스 시의 모리스 타운 사례와, 홈존 이후에 노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롭게 개발한 대안적인 사업 유형으로 런던 시의 헤링게이 자치구에 실시된 DIY 스트리트 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공간 조성 전략과 설계기법이 확산 및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역적·장소적인 맥락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였다.

각 사례가 처한 독특한 경험과 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거쳐 왔는지, 걸으며 드러난 결과보다 그 이면에 있는 과정과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맥락과 함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판단과 시행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인식과 접근의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DOCUMENTUM vol.0

아키라이프, 2013

엄윤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건축잡지계는 변환기를 겪고 있다. 월간 〈공간〉 〈건축문화〉 〈C3〉 〈PLUS〉 등의 잡지 이후에 한국의 건축작업과 비평을 중심으로 하는 격월간 〈WIDE〉와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건축신문〉*이 새로운 형태의 잡지로 발간되었다.

이번에 소개되는 〈DOCUMENTUM〉은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창간준비호다. 창간준비호 혹은 vol 0는 공식적인 창간 이전에 내부적으로 잡지발간 과정을 점검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전홍보의 성격을 가진다.

잡지의 첫 장에 자기소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다큐멘텀〉은 과정의 의미와 기록의 가치 위에서 건축 작업을 조명하는 건축 전문지입니다. 건축을 건물이라는 결과물로만 보여주기보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본 잡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사람과 구매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DOCUMENTUM〉은 건축사진작가인 김용관이 발행인이며, 〈공간〉지에서 활동했던 김상호 기자가 편집장이다. 그래서 건축의 사진과 글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 정림건축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junglimfoundation.org/Newspaper>)에서 PDF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DOCUMENTUM〉은 비평이 관여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물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잡지다.

** 독립출판의 형식으로 제작된 출판물이 유통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장소로 독립출판 서점이다. 대표적인 책방으로 더북소사이어티(<http://www.thebooksociety.org>), 유어마인드(<http://www.your-mind.com>)가 있다.

둘째, 본 잡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점이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독립출판 책방**을 통해야 한다.

잡지는 status, work, documentary, closing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4개 부문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을 떠올린다.

“기구에서 시상(詩想)을 일으키고, 승구에서 그것을 이어 받아 발전시키며, 전구에서는 장면과 사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결구는 전체를 묶어서 여운(餘韻)과 여정(餘情)이 깃들도록 끝맺는 것이다.”***

기(起)에 해당하는 status는 기존의 잡지에서는 접할 수 없던 낯것의 상태.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무소를 홍보하는 경우애나 볼 수 있었다. 우리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당 1쪽이 배정되었고, 우포자연도서관을 비롯한 12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프로젝트들의 성격도 근린생활시설, 학교, 축사, 공장, 전시관,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하다. 각 설계사무소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사중,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각각 CNST, SD, DD, CD 등으로 표기하고 한 장의 이미지와 간단한 글로 소개한다. 다양한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리고 이 한 쪽을 위해서는 건축가들이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꼼꼼함과 원고 방향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잡지의 초반에 그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다.

“기사 한 쪽을 위해 네 번의 미팅, 여덟 시간의 인터뷰, 이를 이상의 직원업무를 선포 내어준 이가 있는가 하면, 회사의 파일 서버를 열어주고 사무실에 책상을 마련해 준 이도 있다.”

승(承)에 해당하는 work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소개로 운동주 문학관, 장욱진미술관 등 7개의 건축물이 소개되었다. 건축물당 8~10쪽이 배정되었다. 건축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뷰

이로 참여한 소개글과 사진, 도면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잡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에는 주석도 달려 있지 않고, 건축물에 대한 비평도 없다. 온전히 사진과 도면으로 건축을 접할 수 있도록 글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전(轉)에 해당하는 documentary는 진정으로 이 잡지에서 기대하였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준다. 32쪽이 온전히 단 하나의 프로젝트 소슬집(살것 양수인 설계)을 소개한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가졌던 생각들과 과정을 솔직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결(結)에 해당하는 closing은 간단한 건축물 개요를 제외하면 14쪽의 사진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매스터디스)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엄마와 집짓기〉, 〈제가 살고 싶은 집은〉, 〈아파트와 바꾼 집〉 등은 집을 짓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서 건축이 특정 집단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해주었다. 〈DOCUMENTUM〉은 비평이 관여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물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잡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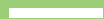
건축출판물이 다양해지는 것은 건축 분야의 일원으로서 즐거운 일이다.***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건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다시 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건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DOCUMENTUM〉은 건축을 보여주는 잡지이며 다른 관점을 지닌 건축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식 발간과 더불어 지속될 〈DOCUMENTUM〉의 행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일 것이다.

출처 : 두산백과사전

〈DOCUMENTUM〉 외에도 건축도시 분야의 독립출판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담은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부산의 지역을 다룬 〈HERE〉, 버스를 통해서 서울의 건축물과 인터뷰로 이루어진 〈PANORAMA〉, 건축설계사무소 2~3년차의 이야기를 담은 〈yes, I am a junior architect〉 등도 발간 중이다.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건축도시포럼, 한옥포럼,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 소개



포럼 및 세미나

-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 및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2014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
(도시재생 컨퍼런스-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 세미나)
- 2013 AURI 국제 컨퍼런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건축도시공간'
-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 구축 및 개시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 소개

| 구분 | 과제명 | 연구책임 |
|----------|--------------------------------------|------|
| 기본 과제 |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엄철호 |
| |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 차주영 |
|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활용계획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 심경미 |
| |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성능 규제 연구 | 김승남 |
| |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 여혜진 |
| |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방안 연구 | 유광흠 |
| |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 임유경 |
| |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 서수정 |
| |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 이상민 |

기본 과제

01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과 함께 다양한 리모델링 방식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불편사항을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전면재건축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업계나 추진단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수직·수평증축과 세대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주호와 주동만을 개선한 리모델링 단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환영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개선방식 위주의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거주자·소유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단지의 가치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공동주택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일본은 노후 주거지에 대해 기존 거주환경과 거주자의 지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도입한 '단지재생'과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이제는 기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방식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순차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지재생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재생 방식의 개념 정립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단지재생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서민주거 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염철호

02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공공청사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중심적 생활거점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다. 나아가 공공청사는 지역의 대표적 명소로서 상징성을 가지며, 공공의 핵심 자산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공공청사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건설경기 조정이나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에너지 절약', '장애인 지원', '호화청사 논란' 등의 이슈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청사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와 미래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각종 계획기준은 시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공공청사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두어 필요한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적용하여 이용하기 좋고 품격 높은 공공청사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현행 계획기준을 검토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공간 이용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청사의 미래상을 설정해 본다. 이와 함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기준의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계획기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 높은 업무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공공청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차주영

03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 활용계획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써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적인 활용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이다.

본 법은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제도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면적 관리 강화, 한옥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건축자산의 면적관리를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 및 목록구축이 미흡하여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유형 분류와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관리체계와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파급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사례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지침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정립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황과 관리·활용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향후 보전·관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제 적용 가능한 대상과 적용 효과를 예상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절차 등 운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도입의 근거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미

04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성 능 규제 연구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15~30%)의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

별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 부문에서도 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목표(약 48만톤CO₂eq)가 할당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탄소 건축·도시 설계요소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유도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성능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집중지역(Hot-spot)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요인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지역별·토지용도별 온실가스 감축 성능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토지용도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이용성능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일반화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용도지역별 적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토지이용 관리제도 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05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현대는 과거에 추진했던 대규모 정비방식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은 현장중심·장소중심의 세부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는 점진적 마을만들기 구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마을기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최근까지의 마을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고찰하면서 마을기업이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검토한다. 또한 해외의 마을기업 등 활성화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ary business) 관련 지원제도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여건에 맞는 마을기업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재생법에 의한 근린재생사업의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써 저층주거지 내 주민과 소형 건설업체가 협력하는 '건축조합' 형태를 제안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주체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신성장동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마을기업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 등 매우 광범위하다.

연구 성과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부처 간 협력역량을 키우고 공공-민간 간 거버넌스를 통한 근린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해진

06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방안 연구

건축법령의 대표적 법률인 건축법은 허가절차, 기술기준, 현장관리 및 유지관리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각종 규정이 혼재하는 전근대적 입법이다. 1962년 제정된 이래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체계 혼란, 규율범위 혼재, 위임입법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법해석 자체가 어려워 단순·반복적인 법해석 질의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축행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축행위의 모법 역할을 하는 건축법 내에서도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 위임관계의 불명확, 건축기준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법 이외에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복잡하고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건축규제를 국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하는 대표적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법 내에서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와 지자체 조례에 산재되어 있으며, 타 법률에서도 규율하고 있어 그물망과 같이 얽혀져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놓인 건축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건축 관련 법률의 요건을 분석하여 건축기준 관련 법률의 체계와 구성 내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광홍

07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거지 정비 사업 추진이 정체되면서 주거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진적인 재생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주거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여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주차장 부족, 대형마트 확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창조경제' '경제 민주화'와 함께 3대 전략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규제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은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와 예산 지원, 경영 합리화 등 경제적 측면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골목상권 쇠퇴는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도시 문제임을 고려할 때,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상업가로를 주거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린상업가로'에 대한 개념 정립, 일반주거지

역 내 근린상업가로 현황 조사 및 과제 도출,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과정을 통해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주거지 재생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근린상업가로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소규모 맞춤형 도시계획 실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유경

08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최근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땅공주택, 단지형 한옥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코하우징 등 주거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수요와 함께 의료·복지·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쓰레기 집하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지로서 편의성과 쾌적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점포병용주택의 난립,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필지구획과 토지공급, 고급화 경향에 의한

일반 단독주택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단독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품격 있는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획지계획, 단독주택지 계획적 관리, 토지공급 이후 주택건설까지 단독주택지 조성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토지수급관리 계획에서 벗어나 '택지계획 및 조성+주택건설시스템+단독주택 공급'을 고려한 체계적 조성방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조성 과정이 상품생산 과정에서 문화적 생산 과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수정

09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국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이 가장 많은 비중(43.7%, 2012년 국토부자료)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도시공원의 면적은 10억 2,009만 9,097㎡이지만 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6억 807만 5,580㎡로, 60% 정도의 도시공원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원 관련 업무가 모두 지자체로 이관되어 도시공원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는 각 지자체에 있어,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원의 미집행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미집행 공원의 현황 및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하여 미집행 공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20년 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포럼 및 세미나

포럼 및 시상식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 및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한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이 2013년 12월 20일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과 연계하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한옥포럼은 올해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한옥교육과 관련하여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변숙현 교장(한옥아카데미, 한발한옥직업전문학교)의 '한옥 학교의 교육과 진로'를 시작으로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가 '한옥설계와 건축가의 교육',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변숙현 교장은 민간부문에서 10여 년 동안 한옥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와 고민하였던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 졸업생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의 내실화, 목수 노동조합 결성, 한옥교육기관 업무를 국



토교통부로 이관, 교육기관들의 4대 보험 의무가입, 한옥 R&D 성과의 공유 등을 통하여 국가기술개발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해경 교수는 3년간 진행한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전북 대학교의 한옥 분야 교육, 그리고 전북에서 시행되는 한옥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노력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기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교육기관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의의와 한옥 전문인력의 정의, 그리고 한옥교육의 현황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인증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 자격제도 정비를 통한 처우 개선, 특화교육과 계속교육 시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력 간 교류 및 협업 장려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순용 대표(삼아성 건축사사무소)를 좌장으로 김상태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종남(문화재보수기술자),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 건축학부)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옥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이날 행사장에서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한옥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한옥건축·한옥계획·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건축 부문 3개를 비롯하여 계획 부문 18개와 사진 부문 44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옥계획 및 한옥사진 부문은 '한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한옥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준공된 건축물에 수여되는 올해의 한옥대상에는 어린이 교육·체험시설인 '산청울수원(경남 산청군)'이 선정되었고, 올해의 한옥상은 '#200(서울 종로구 가회동)'과 '그리움이 지은 집 시하정'이 받았다. 계획 부문에서는 한옥단지의 마당을 현대적 공간으로 수용한 '잠원' 외에 지하철 역사에 한옥을 시도하여 도심지

환경에 변화를 준 '광화문역 5번 출구 의외루' 등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사진 부문에는 한옥의 담장길을 표현한 '토담길의 한옥'이 선정되었다.

세미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행정기획단이 공동 주관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2013년 12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3.0* 시대에 발맞춰 활용도가 높은 건축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

방·공유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였다. 제1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성호 과장의 발표('건축행정 데이터 민간개방 정책방향')를 시작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 등 6개의 시범사업 참여 기업이 기업특색에 맞는 서비스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된 6개의 과제는 '건축정보를 활용한 통합입지분석'(공공주택 전문 공공기업 LH토지주택연구원), '대국민 데이터 효율 증대를 위한 부동산종합서비스'(부동산 포털 전문기업 부동산114), '건축법규 검토 솔루션 개발'(건축건설 소프트웨어 유통 전문기업 다우데이터), '태양광 발



전 경제성 분석 및 입지분석' (태양광 컨설팅 전문기업 이트스토리), '공간기반의 정책지도 서비스' (GIS마케팅 전문기업 BIZ-GIS), '건축데이터 기반의 정보유통 서비스' (공공정보화 전문기업 솔리데오시스템즈)다.

발표가 끝난 후 국토교통부와 이들 6개 기업 간의 '건축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협약체결'이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김상욱 교수(충북대학교 경영대학)가 '건축데이터 개방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철호 위원장(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을 좌장으로 이화순 건축정책관(국토교통부), 이용석 과장(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윤정중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권현영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정국환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건축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화순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2014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도시재생 컨퍼런스-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세미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월 21일 LH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컨퍼런스-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3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의 일환으로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을 주제로 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세미나(세션2)를 주관하였다. 서수정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축문화기반의 근린재생은 장소 중심의 삶, 문화, 일자리가 함께하는 거주자 중심의 통합적인 재생이며 도시 및 근린재생의 원동력이 되는 건축공간을 활용한 점진적인 재생임을 강조하였다.

서 연구위원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제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경관협정, 주택관리지원센터(가칭, 예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문화기반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해 거너번스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의 정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심경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

소)은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문화지구(Temple bar), 일본 구라시키 이야기관 주변지역 등 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심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건축문화자산의 활용이 지역특성 유지와 형성, 창조적 공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가로와 지역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효과적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와 도시재생의 연계 가능성도 소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자훈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를 좌장으로 하여 이영범 교수(경기대 건축대학원), 서종균 초빙연구위원(한국도시연구소), 박세훈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민아 수석연구위원(LH 토지주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정비 방식의 대안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아울러 계획가적, 공공적 접근과 예술가적인 유연한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결과에만 치중하기보다 기존 도시의 쇠퇴 원인, 진단 방법, 재생 방법 등에서 기존과 다른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이슈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 건축설계사무소 실무자, 연구소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하여 지역과 도시의 특징을 살린 국내외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와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3 AURI 국제 컨퍼런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건축도시공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한 '2013 AURI 국제 컨퍼런스'가 2013년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인구사회적 변화를 겪

으면서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 및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건축도시공간'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공간정책 및 공간계획의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컨퍼런스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건축과 도시공간'을 다루었다. 미국의 Susan M. Goltsman(MIG Inc 설립자)이 '모두를 위한 도시 :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위한 환경 디자인'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일본 센다 미쓰루 회장(환경디자인연구소)이 '아동을 위한 환경 설계'를 제목으로 한 어린이의 성장과 보육 환경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였다. 또 김상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한국의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성이 행복한 건축과 도시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양희 디렉터(젠더앤리더십)가 '성평등과 도시공간 : 도시정책의 성 주류화'를, 이선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여성의 일상을 배려하는 도시환경'을, 미국의 Kathryn Anthony 교수(일리노이대학교)가 '공중 화장실 디자인에 있어서의 젠더와 가족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 세션은 아시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싱가포르 · 일본 · 한국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건축과 도시공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Code Review Committee 위원장 Siam Imm Goh(BCA)는 '모두를 위한 공간환경 : 싱가포르 Accessibility Code Review'를, 일본 다나카 나오토 특임교수(시마네대학대학원)는 '건축 · 도시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일본에서의 실천사례'를, 오성훈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보행자를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한국의 계획가와 연구자를 초청하여 아동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건축과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공간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

구축 및 개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 · 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문화자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아우름(<http://www.aurum.re.kr/>)을 구축하고 4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우름' 홈페이지는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 정책 및 자산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 도시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정보관리가 미흡했던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아우름의 주요 메뉴는 크게 정책동향, 연구동향, 건축INFO, 건축자산, 설계경기,



인물/조직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언론보도뉴스, 제도기준 등 건축 · 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이슈와 관련한 연구동향과 산업동향 및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시상제도를 통해 수상한 우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보를 비롯하여 2,400여 건의 건축자산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보와 관계 인물, 조직 정보를 연동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건축도시 분야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31)478-9640, information@auri.re.kr

auri 연구보고서(2013)

AURI-기본-2013-1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3-2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3-3
가로단위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특별가로구역 제도 연구 29,000원

AURI-기본-2013-4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3-5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3-6
도시공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공원 평가
모델 개발 연구 16,000원

AURI-기본-2013-7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25,000원

AURI-기본-2013-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도 개선 연구
21,000원

AURI-기본-2013-9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21,000원

AURI-기본-2013-10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28,000원

AURI-기본-2013-11
한국도시의 경관경쟁력 평가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3-12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30,000원

AURI-정책-2013-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3-2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3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도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5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8,000원

AURI-정책-2013-6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3-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자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3-8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13,000원

AURI-정책-2013-9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12,000원

AURI-협동-2013-1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20,000원

AURI-한옥-2013-1
한옥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목재비용
산출 조사 연구 6,000원

AURI-한옥-2013-2
기존 한옥 리모델링 시공과정의 사례
9,000원

AURI-한옥-2013-3
2013 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대구 및
전주편 30,000원

AURI-한옥-2013-4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31,000원

AURI-한옥-2013-5
2013 한국건축산업 동향 14,000원

AURI-한옥-2013-6
한옥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 인증방안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3-7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2) 38,000원

AURI-한옥-2013-8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2) 20,000원

AURI-보행-2013-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1)
33,000원

auri 연구보고서(2012)

AURI-기본-2012-1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8,000원

AURI-기본-2012-2
건축행정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건축통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AURI-기본-2012-3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16,000원

AURI-기본-2012-4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5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17,000원

AURI-기본-2012-6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7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2-8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2-9
소규모 주택사업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 유연화 방안 연구 12,000원

AURI-기본-2012-10
SOC 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2-11
주거단지의 도시성 구현을 위한
공간구조모델 및 제도개선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12
정보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
정보 활용 방안 17,000원

AURI-정책-2012-1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2-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 보급
방안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2-3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4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5
최근 한옥입주자 특성 및 한옥수요 조사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6
다세대주택의 규모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7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8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 9,000원

AURI-정책-2012-9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10
한옥학교의 운영실태 및 교육현황
조사 연구 6,000원

AURI-협동-2012-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19,000원

AURI-일반-2012-1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 18,000원

AURI-일반-2012-2
수요창출에 기반한 한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7,000원

AURI-일반-2012-3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1) 18,000원

AURI-일반-2012-4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한옥조례
및 법제도 정비 방안 20,000원

auri 연구보고서(2011)

AURI-기본-2011-1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10,000원
(부록 - 주택정책의 새로운 비전
10,000원)

AURI-기본-2011-2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의 재고 20,000원

AURI-기본-2011-3
주거지 재생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 역할 18,000원

AURI-기본-2011-4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15,000원

AURI-기본-2011-5
수변도시 재생에 대응하는 수변경관
조성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1-6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1-7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10,000원
(발책 -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사례
10,000원)

AURI-기본-2011-8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17,000원

AURI-기본-2011-9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건축기초교육
실행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1-10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1-11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1-1
도로, 철도, 복합환승센터 및 마린항만
경관관리의 이해 및 활용 방안 7,000원

AURI-정책-2011-2
녹색건축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7,000원

AURI-정책-2011-3
블록형 집합주택의 성능 평가 및 보급
확산에 관한 연구 6,000원

AURI-정책-2011-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1-5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1-6
해피차일드 정책지원방안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1-7
신도시 단독주택지 공간구조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AURI-협동-2011-1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9,000원

AURI-협동-201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17,000원

AURI-일반-2011-1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연구 15,000원

AURI-일반-2011-2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
경관 조성방안 18,000원

AURI-일반-2011-3
한옥 주거현황 조사 및 정보 구축 방안
연구 15,000원

AURI-일반-2011-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 방안 연구
20,000원

auri 연구보고서(2010)

AURI-기본-2010-1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0-2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방안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0-3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12,000원

AURI-기본-2010-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U-City
실험방안 연구 8,000원

AURI-기본-2010-5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15,000원

AURI-기본-2010-6
공동주택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강화방안 연구 15,000원

AURI-기본-2010-7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8,000원

AURI-기본-2010-8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10,000원

AURI-기본-2010-9
SOC 시설의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15,000원

AURI-정책-2010-1
특별건축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0-2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계획현황 진단·서울시 단지형
다세대주택 사업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7,000원

AURI-정책-2010-3
건축/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조사 7,000원

AURI-정책-2010-4
사용자 중심이론에 기반한 한국형 어린이
보육시설 공간환경 디자인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7,000원

AURI-정책-2010-5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7,000원

AURI-정책-2010-6
경관향상을 위한 도시특성별 높이
관리방안 연구 7,000원

AURI-협동-2010-1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비매출

AURI-협동-2010-2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10,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단행본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31)478-9640, information@auri.re.kr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1
오성훈, 남궁지희
20,000원



보행도시
오성훈, 남궁지희
50,000원



건축·도시설계를 위한 척도연습
오성훈, 김원경
10,000원



보행환경 조사분석 매뉴얼
오성훈, 이소민
10,000원



한옥 짓는 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유비쿼터스 건축·도시공간
고일두
7,000원



아파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최두호, 한기정
9,000원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
이영범, 염철호
8,000원



황금빛 양동마을, 그 풍경 속에 담긴 삶
강동진
10,000원



주거지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김찬호, 서수정
8,000원



한옥의 진화
윤재진
12,000원



옥상의 공간사회학
전상인, 김미영
7,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ISSUE PAPER 20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자료회원 가입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회원과 메일링서비스 회원에 가입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발간물들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31)478-9640, information@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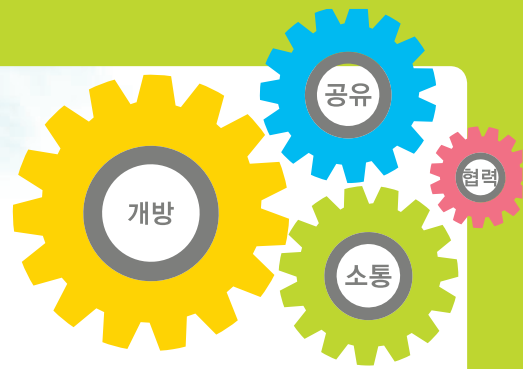
| 회원의 종류 | 받으실 자료 | 연회비 |
|-----------|---|---|
| 자료회원 |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auri brief(격주간) 한옥정책 brief(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월간) 건축과 도시공간(계간) | 개인 10만 원 기관 20만 원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자료우송료 연구소 부담) |
| 메일링서비스 회원 | 세미나 등 행사소식 안내 간행물 발간 안내 | 무료 |

◆ 가입방법

- ◇ 자료회원 :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 [참여공간] ▶ [자료구입 안내]에서 신청, 회원비 납입 확인되면 회원등록 완료
- ◇ 메일링서비스 회원 :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 [참여공간] ▶ [메일링 서비스]에서 신청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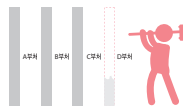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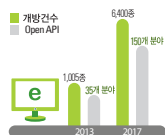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